

2009년도 국제학술회의

---

야스쿠니의 역사적 재조명  
- *Historical Reconsideration of Yasukuni* -

---

일시 : 2009년 12월 4일 (金) 10 : 00~18 :00

장소 :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6층 세미나실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주관 |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

2009년도 국제학술회의  
야스쿠니의 역사적 재조명

---

## 식 순

### <개회식>

10 : 00~10 : 30

개회사 : 박현숙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소장)

축사 :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 <오전 주제발표> ..... 사회 朴尙洙 (고려대)

10 : 30~11 : 30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신사문제

발표자 : 南相九 (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 崔鐘吉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1 : 30~12 : 30 古代日本の 神社와 祭神

발표자 : 瀧音能之 (駒澤大)

토론자 : 辛炫丞 (고려대)

12 : 30~13 : 40 점심식사

### <오후 주제발표> ..... 사회 徐民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3 : 40~14 : 40 21세기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정책

발표자 : 崔泳鎬 (영산대)

토론자 : 朴三憲 (건국대)

14 : 40~15 : 40 靖國神社와 日本新軍國主義

발표자 : 徐勇 (北京大)

토론자 : 姜鉉士 (성신여대)

15 : 40~15 : 50 휴식

15 : 50~16 : 50 殉國과 殉教—犠牲의 宗教에 대한 질의

발표자 : 高橋哲哉 (東京大)

토론자 : 方光錫 (성균관대)

16 : 50~18 : 00 종합토론 ..... 사회 趙明哲 (고려대)



## < 개회사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는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학제적 통섭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야스쿠니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야스쿠니는 오랜 역사가 흐른 현재에도 일본의 문제만이 아닌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인의 관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문제는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분법적 충돌과 대립 혹은 모순이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야스쿠니 및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연구를 학술적인 주제보다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 문제 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야스쿠니를 이해하는 유효한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스쿠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학술적 연구가 양립될 때 비로소 야스쿠니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연구소는 관계사·교류사 중심의 동아시아 연구, 학제적 통섭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국제학술회의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꾸준히 동아시아 연구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성과 있는 학술발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중·일 3국 학자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이며 상호간의 이해가 가능한 '야스쿠니 신사론' 정립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뜻 깊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고려대학교와 동북아역사재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왕림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청중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소장 박 현 숙 올림



## < 축 사 >

고려대학교에서 뜻 깊은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게 된데 대해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教育救國)의 건학이념과 자유·정의·진리의 대학이념, 공선사후(公先私後)·신의일관(信義一貫)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한국 최고의 사학입니다.

민족고대 100년에서 세계고대 1000년을 지향하는 고려대학교는 이제 "민족혼과 개척정신을 담은 세계선도대학(Global KU - Frontier Spirit)"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천년고대는 GLOBAL 50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국제학술회의들이 개최되는 것은 세계적 연구 환경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야스쿠니 문제를 테마로 한·중·일 각국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견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한·중·일 학계가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를 징검다리 삼아 야스쿠니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일의 평화와 안녕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뜻 깊은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하며, 이 학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연구소 관계자와 국내외 학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의 힘 없는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고려대학교 총장  
이 기 수



## 오전 주제발표

<오전 주제발표>.....사회 박상수 (고려대)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신사문제

발표자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 최종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古代日本の 神社와 祭神

발표자 : 瀧音能之 (駒澤大)

토론자 : 신현승 (고려대)



#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국 언론의 야스쿠니 신사 보도
- III.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 IV.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의 문제점
- V. 맺음말

---

## I. 머리말

2009년 8월 일본 중의원 선거 당시, 한국 언론은 하토야마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립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대체할 추도시설 건립의 의미”(『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2009.8.13)

“야스쿠니 대체할 추도시설 건립”(『조선일보 인터넷판』 2009.8.14)

“야스쿠니 대체’ 추도시설 건립...日 민주당 총선 승리에 달렸다”(『경향신문 인터넷판』 2009.8.14)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현 일본 총리)의 발언이나 민주당 선거 ‘정책집 INDEX 2009’<sup>1)</sup>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하토야마가 주장하는 국립 추도시설을 야스쿠니 신사의 대체시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가 지금까지 국가의 중심적인 추도시설로서의 역할을 했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GHQ/SCAP)가 지시한 신도지령 (1945.12.15)에 의해 1946년 2월부터 야스쿠니 신사와 국가와의 공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 2003년 7월 6일 민주당의 ‘야스쿠니 문제 전담팀’이 제출한 보고서<sup>2)</sup>를 보면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의 중심

---

1)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나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리낌 없이 전몰자를 추도하고, 비전(非戰)·평화를 맹세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민주당 『정책집 INDEX 2009』)

2) 「新しい国立追悼施設の設立について」(2003.7.6), 보고서 전문은 일본 민주당

적 추도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현직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도를 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up>3)</sup>라고 답변한 것도 국가와 공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한 야스쿠니 신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이 건립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 한국인 합사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대체시설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립으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이 ‘야스쿠니 신사 대체시설’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언론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한국·한국인의 문제가 아닌 일본 정부와 정치가의 역사인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 2건이 일본에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이에 본고는 첫째, 한국 언론과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sup>5)</sup> 둘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문제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와 한국·한국인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비판적인 일본 학자가 한국 정부의 전몰자 추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 문제가 한국·한국인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II. 한국 언론의 야스쿠니 신사 보도

### -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최근 한국 언론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보도는 총리나 정치가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장에서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의 야스쿠

홈페이지(<http://www.dpj.or.jp/news/?num=10602>) 참조.

3) 『산케이신문』 2009. 8.15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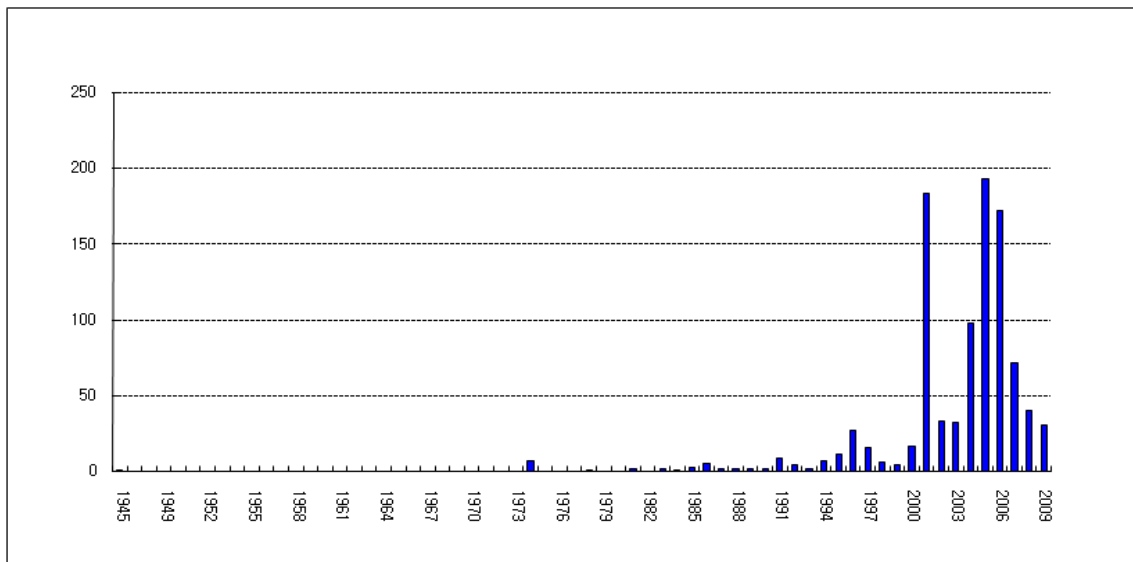
4) 2009.10.29 도쿄 고등법원에서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철폐를 요구한 항송심이 기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국내언론은 한겨레신문(10.30)과 세계일보(10.31)뿐이었다.

5) 선행연구도 일본 총리의 참배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야스쿠니 신사와 한국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남상구) 『진상조사보고서(VII-1) :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및 합사자 명부 조사』 2007.3, 노기 가오리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합사에 관한 연구」 2009.3(2008년도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신진연구자 육성 사업 연구결과보고서), 김광열 「전쟁 책임에 대한 현대 일본 사회의 인식-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문제를 중심으로 -」 (함동주, 김광열, 임현순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가 있다.

니 신사 문제에 대한 보도를 3기로 나누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sup>6)</sup> 제1기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부터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되기 전이다. 제2기는 1986년부터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까지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지만 총리 참배는 1996년 하시모토 총리의 '사적 참배' 1회에 그쳐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다. 제3기는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를 시작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일, 한중간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등 총리 참배문제는 동북아 외교문제의 현안으로 등장한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추이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 언론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게 된 것은 1985년 나카소네 총리 참배 이후로, 그 이전에는 단편적인 보도에 그쳤다.

<표1> 조선일보 야스쿠니 신사 관련기사(PDF·기사DB) 추이(1945.8.15-2009.11.5)



1985년 이후에는 총리 참배뿐만 아니라 각료나 정치가의 참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게 된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참배 이후는 총리 참배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및 한중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도 총리의 참배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2001년과 2005년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와 맞물려 야스쿠니 신사 관련 기사가 급증한다. 2001년 이후 야스쿠니 신사 관련 기사가 급증한 이유는 한일, 한중간 외교문제 및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논의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 관련 보도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일보의 야스쿠니 신사 관련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표2>와 같다.

6)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은 조선일보가 기사DB를 통한 관련기사 검색이 용이했기 때문인데, 동아일보와 비교해 보면 보도 경향과 내용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2> 조선일보 야스쿠니 신사 관련기사(PDF·기사DB) 분류(1945.8.15-2009.11.5)

구분	기사 분류					
	참배문제	한국인 합사	관련 재판	국영화 법안	기타	계(건수)
제1기 (1945-1985)	7	.	.	7	3	17
제2기 (1986-2000)	60	.	8	.	49	116
제3기 (2001-2009)	302	11	14	.	528	855

제1기에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79년 4월 A급 전범 합사 사실이 아사히신문에 공개된 이후에도 총리 참배를 A급 전범합사 문제와 연계시켜 비판한 기사는 없었다. 조선일보 1981년 8월 14일 기사를 보면 스즈키 젨코(鈴木善幸) 총리가 8월 15일 ‘전몰자들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1984년 8월 17일 나카소네 총리 참배에 대한 기사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전몰자 위령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기사(8.16)도 총리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A급 전범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동아일보는 1985년 8월 16일 사설에서 “심지어 A급 戰犯들의 위패까지 봉안된 그 신사를 공식 참배한다는 것은 전쟁을 도발한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게 경계론의 근거다”라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참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총리 참배 문제를 A급 전범 합사문제와 연계시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고 경계론을 들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1974년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법안에 관해 보도를 했지만 1979년 4월 아사히신문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2기의 특징은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A급 전범 합사 문제와 연계시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 1월 11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나카소네 총리가 “제2차大戰 전사자 및 戰犯들을 모아 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총리 참배문제와 전범 문제를 연계시켜 보도했다. 1989년 4월 22일 기사는 각료 12명과 자민당 의원 2백여 명이 4.21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2차대전 전범들이 묻혀있는 東京 중심부 야스쿠니 神社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A급 전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범들이란 A급 전범들을 가리키고 있다.

1992년 8월 11일자 사설을 보면 야스쿠니 신사를 “특히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제2차 대전의 A급 전범으로 처형된 동조영기의 신주까지 갖다 놓은 곳이다. 말하자면 군국일본의 상징이며 성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리가 군국주의의 상징에 참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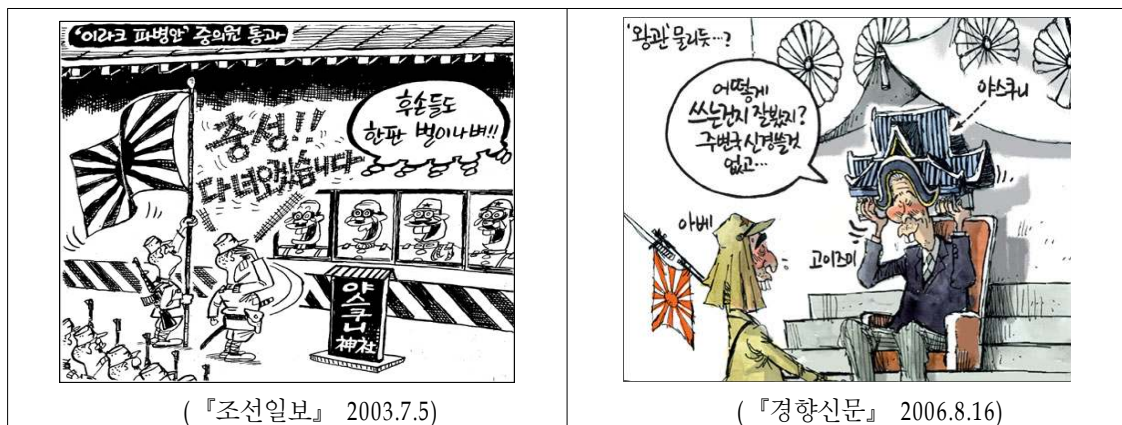
은 군국주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군국주의 재현의 꿈만 갖고 있는 소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의 참배결정이 황국 재건을 외치는 우익세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는 과거 한국병탄 때의 악몽을 되새기게 된다”고 총리 참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996년 7월 31일자 사설에서도 “2차 대전의 A급 전범으로 처형된 전 총리 도조 히데키(東条英機)를 비롯한 2백 50여만 명의 위패가 안치된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며 성역이다. 따라서 총리가 이곳을 공식 참배했다는 것은 군국주의 일제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공식화하겠다는 「선언」 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1996년 7월 30일에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가 7월 29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유해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기습」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동년 8월 16 기사도 8월 15일 일본각료 5명과 국회의원 1백83명이 “2차 대전 전범 등의 위패를 안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비난받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의 유해가 묻혀있다는 등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결여된 기사도 있지만 A급 전범의 합사를 총리나 각료 참배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하시모토 총리의 참배와 관련하여 기사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당시 언론이 총리의 참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3기의 특징은 고이즈미 총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2001년과 2005년 일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2005년 시마네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맞물려 야스쿠니 신사 관련 기사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정치상황이나 한일, 한중 외교문제를 보도할 때 야스쿠니 참배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와 연계시켜 보도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표3>의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만평은 한국 언론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순히 과거에 대한 미화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차원에서 경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3> 야스쿠니 신사 관련 언론 만평



그러나 <표2>에 드러나듯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사는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합사 문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sup>7)</sup> 즉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정치인의 역사인식을 가늠하는 잣대로서만 기능했던 것이다.

### Ⅲ.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1996년 7월 29일 하시모토 총리 참배 이후이다. 한국 정부는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총리 참배 이전에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1985년의 경우에도 10월 29일 이원경 외무장관이 일본인 기자단과 가진 회견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sup>8)</sup> 그러나 1996년 하시모토 총리 참배 시에는 7월 29일 외교부가 “일본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했던 인근 국가들의 국민감정을 존중해야”하며 “하시모토 총리가 8·15에 앞서 개인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고 하나, 1986년 이래 중단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다시 이루어진데 우리는 주목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sup>9)</sup> 7월 30일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전쟁범죄를 정당화는 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sup>10)</sup>

한국 정부의 총리 참배에 대한 대응은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참배 시부터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고이즈미 총리 참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sup>11)</sup>

참배일시	한국 정부 조치사항
2001.8.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8.13)</li> <li>- 장관대리, 주한일본대사 초치(8.14) * 장관 해외 출장 중</li> <li>- 주일대사, 외무사무차관 항의 방문(8.14)</li> </ul>
2002.4.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4.21)</li> <li>- 장관, 주한일본대사 초치(4.22)</li> <li>- 주일대사, 외무사무차관 항의 방문(4.22)</li> </ul>
2003.1.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1.14)</li> <li>-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논평 발표(1.14)</li> <li>- 차관, 주한일본대사대리 초치(1.14) * 주한대사 일시귀국 중</li> <li>- 주일대사, 외무사무차관 항의 방문(1.15)</li> <li>-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시 장관, 외무대신에 유감 전달(1.15)</li> </ul>

7) 이러한 상황에서 『한겨레 21』이 2007년 4월(657호)부터 11월(685호)까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것은 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高石史人 『「靖国」問題関連年表』永田文昌堂,1990.315쪽.

9) 『조선일보』 1996.7.30

10) 『조선일보』 1996.7.31

11)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help/search/index.jsp>)

	- 대통령 당선자, 외무대신 접견 시 유감 전달(1.16)
2004.1.1(목)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1.1) - 장관, 주한일본대사 초치(1.2)
2005.10.17(월)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10.17) - 장관, 주한일본대사 초치(10.17) - 주일대사, 외무대신 항의 방문(10.17)
2006.8.15(화)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8.15) - 장관대리, 주한일본대사 초치(8.15) - 주일대사, 외무사무차관 항의 방문(8.15)

외교부 대변의 성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근대 일본 군국주의 상징(2001), 일본 군국주의 상징(2002), 과거 일본 군국주의 상징(2003),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2005),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2006)’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야스쿠니 신사를 군국주의 상징으로 규정했는데, 2004년부터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2007년과 2009년의 외교부 성명도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시설이라며 침략전쟁의 미화라는 현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급 전범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근국가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전쟁범죄자들”로 규정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우리국민과 인근국가에 고통을 안겨 준 전쟁범죄자’라고 식민지 지배와 A급 전범 문제를 연계시켜 비판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으로 주변국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전쟁범죄자”로 바뀐다. A급 전범은 도쿄재판에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4년까지의 비판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도 지적했듯이<sup>12)</sup> A급 전범의 합사 문제를 강조할 경우 식민지 지배 문제가 사상(捨象)되어 야스쿠니 문제가 왜소화될 가능성이 있고 친황의 전쟁책임과 병사들의 가해 책임 문제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리 참배에 대한 비판 이유는 총리가 전쟁범죄자에 대해서까지 참배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쟁범죄자에 대해서까지’라는 표현은 일반 전몰자에 대한 참배는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 논리는 일본이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2004년부터 이러한 논리는 사라진다.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시설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던 김대중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던 노무현 정부와의 미묘한 대응의 차이가 보인다.

한국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대응은 총리의 참배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아도 한국인 합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2001년 8월 1일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에 7월 20일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의 명부를 삭제하고 합사자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음을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고 보도된 바 있다.<sup>13)</sup> 정부 간 외교

12) 高橋哲哉 『靖国問題』 筑摩書房, 2005. 80-83쪽.

적 교섭의 여지를 모색함으로써 한국인 합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동 기사에 의하면 외교부 당국자는 요청의 배경에 대해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합사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한다.<sup>15)</sup> 그리고 청와대의 의견은 아니지만 청와대 통신(2006.8.17)에 게재된 조명균 안보정책 비서관의 “A급 전범 분사해도 야스쿠니신사 참배용인 못해-한국 병탄 주범들도 합사...일본 만행 면책 안 돼”라는 글은 A급 전범 합사뿐만 아니라 한국 강제병합 과정에 관여한 자들의 합사와 한국인 합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 침략과 지배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야스쿠니 신사 분사 논의가 식민지 침략전쟁과 지배 과정에서 저지른 만행까지 면책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중 강제 징병되어 전장에서 죽은 한반도 출신 2만 1천여 명이 가해자와 함께 합사되어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절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인 합사문제를 제기하거나 후속조치를 강구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국회는 2005년 5월 4일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취하 및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일제침략기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희생자가 태평양전쟁을 유발한 A급 전범 14명을 기리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관념과 민족정신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인 합사 취하에 일본정부가 적극 나설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현 일본총리가 2001년 취임한 이래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것은 일본 내 전후 세대들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이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일본 총리 및 각료 등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촉구하고 더불어 한국 정부가 참배를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결의는 총리 참배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 합사자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결의가 일회적인 선언적 조치로 끝나고 만다.

## IV.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의 문제점

### 1. 한국인 합사와 ‘차별’<sup>16)</sup>

13)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1.8.1 12:49

14) 국무조정실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외교통상부 회신, 2005.10.26

15) 『조선일보 인터넷판』 2001.8.1 12:49

16) 차별이라고 할 경우 평등의 반대 개념으로 한국인을 일본인과 평등하게 합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야스쿠니 신사는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야스쿠니 신사가 출신지나 신분,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령하고 현창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분은 군인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구호활동에 종사한 종군간호부와 여학생, 학도 동원 중 군수공장에서 사망한 학도 등, 군속·문관·민간인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당시 일본인으로 전쟁에서 사망한 대만 및 조선반도 출신자와 시베리아 억류 중 사망한 군인·군속, 대동아전쟁 종결 시에 이른바 전쟁범죄인으로서 처형당한 분들 등의 영혼도 모시고 있습니다(참고자료). 이처럼 많은 분들의 영혼을 신분·훈공(勳功)·남여 구별 없이 조국에 순직한 고귀한 신령(야스쿠니의 大神)로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모시고 있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의 목적이 단 하나, '국가를 위해 한 목숨 바치신 분들을 위령하고 현창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sup>17)</sup>

A급 전범으로 사형을 당한 도조 히데키(東条英機)의 손녀 도조 유코(東条由布子)도 2006년 8월 13일 방영된 KBS 특집 「야스쿠니와 전쟁 - 야스쿠니와 세 여자」에서 아래와 같이 일본인과 차별하지 않고 한국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대만도 한국도 정말로 죄송한 일이지만 일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규칙으로 만약 차별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그 때 모시지 않았다면 일본인으로서 싸웠는데 왜 모시지 않느냐고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와 도조 유코의 주장은 조선, 대만 출신 사망자도 일본인과 차별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대만 출신자는 태평양전쟁 종결 이전(이하, 전전)에는 물론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이하, 전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서 '차별'을 받았다.

전전에 합사된 한국인은 415명인데<sup>18)</sup>, 이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단, 대만 출신 군속의 합사 기준에 관한 사례가 남아 있는데 한국인도 이에 준해서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만 출신 군속의 합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만 본도인(本島人)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 자각, 신기(神祇)관념이 전부 아직 불충분하고 공리(公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원병제도가 실현된 금일 군속이 되어 사망한 자는 조선반도인과 똑 같이 합사하고 그 범위는 당분간 전사, 전상사(戰傷死)로 제한한다.<sup>19)</sup>

---

삼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합사에 있어 차별은 없다는 야스쿠니 신사 주장의 허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따옴표를 사용한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7) 야스쿠니 신사 홈페이지(<http://www.yasukuni.or.jp/history/detail.html>, 2009.09.16)

18) 「1951.12.26 厚生省援護局復員課三浦事務官報告」(日本外務省公開文書『太平洋戦争終結による旧日本国籍人の保護引揚関係,朝鮮人関係,遺骨相関関係』2000.12 공개)

19) 「支那事変、大東亜戦争ニ関シ死歿シタル台湾本島人シタル軍属ヲ靖国神社へ合祀ニ関スル件 1943.2.3密受30号」(国会図書館『新編 靖国神社問題資料集』39쪽)

대만인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 자각, 신기(神祇)관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합사 대상을 전사, 전상사(戰傷死)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일본인 군인·군속 야스쿠니 신사 합사 대상자를 보면 ‘전염병이나 자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사망한 자’, ‘사변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피하기 어려운 災厄 때문에 사망한 자’, ‘자살자 중 그 정황을 고려할 때 합사기준에 해당되는 자’ 등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었다.<sup>20)</sup>

전후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기준이 된 것은 은급법과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이하, 원호법)이다. 원호법의 대상인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피징용자, 육·해군의 요청에 의한 전투 참가자는 야스쿠니 신사 합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한국인은 원호법 제24조의 국적조항에 의해 동법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똑 같은 조건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일본인은 원호법의 준군속에 해당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으나 한국인은 국적조항에 의해 동법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합사되지 못했다.

야스쿠니 신사 합사 절차에 있어서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1959년 10월 4일 구황족 키타시라가와 요시히사와 키타시라가 나가히사의 합사에 있어서는 궁내청으로부터 “신청하신 能久親王 및 永久王의 혼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봉제(合祀奉齋)하는 것에 대해 허락이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sup>21)</sup>라고 허락을 받은 후에 합사절차를 진행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인을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출신의 일본인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합사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인 합사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한반도 사정을 이유로 합사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다.<sup>22)</sup>

## 2. 한국인 합사와 일본 정부의 관여

전후에도 육·해군성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야스쿠니 신사는 육·해군성의 관리 하에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招魂式⇒合祀祭(臨時大祭)>라는 종교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전에는 봄, 가을 2회에 걸쳐 합사가 이루어졌다. 합사절차를 보면 미리 작성된 영새부를 근거로 초혼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 야스쿠니 신사를 관리하고 합사절차를 담당했던 육·해군성의 폐지<sup>23)</sup>를 예상한 일본 정부는 향후 정상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기존의 절차를 무시한 임시대초혼제(11.19-21)를 실시한다. 즉 합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영새부를 작성하지 않고 ‘만주사변’(1931.9.18)부터 항복 조인(1945.9.2)까지 사망한 군인·군속 등 미합사자를 초혼제를 실시하여 일괄적으로 초혼전(招魂齋庭)에 봉안하고 향후 개별 조사를 통해 영새부를 작성한 후 본전에 모신다는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이후 합사된 사람들은 초혼제를 거치지 않고 ‘영새봉안제’를 거쳐 야스

20) 「昭和十三年十月 靖国神社合祀者資格審査方針(1938.7.1)」(国会図書館, 앞의 책, 28쪽)

21) 宮内庁掌典長回答 (1959.7.7)

22) 靖第一二四号 2006.11.20

23) 일본 육·해군성은 1945.11.30 폐지되었다.

24) 陸軍大將 北白川宮能久親王(1895.10.28 사망), 陸軍砲兵少佐 北白川宮永久王(1940.9.4 사망)의 합사(1959.10.4)에서는 초혼제가 실시되었다.

쿠니 신사 본전에 합사되었다.<sup>25)</sup>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적인 합사절차를 중시할 경우 전후에 합사된 한국인의 대부분은 야스쿠니 신사의 독자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45년 11월 19일-21일에 거행된 임시초혼제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45년 9월 2일 이전에 사망한 자 중 원호법(1952.4.28 발효)의 대상자는 1945년 11월 임시대초혼제 실시 시점에서는 합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후에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혼제가 실시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즉 6년 후에 만들어질 법을 예상하고 야스쿠니 신사 초혼제에 왔거나 초혼제를 생략하고 합사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식이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후 일본 정부가 한국인 합사에 관여한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가 합사 대상자를 검토한 회의에 후생성 관계자가 참여하여 한국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한 사실에도 잘 드러나 있다. 1957년 6월 4일 야스쿠니 신사가 작성한 ‘합사사무에 관한 후생성 인양원호국 관계자와의 제1회 연락회의 회의록’을 보면 원호국의 1복원과 2복원과 과장을 포함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타가키(板垣) 제1복원과장은 조선, 대만인 미합사자에 관한 자료는 있느냐는 스즈키(鈴木) 조사부장(야스쿠니 신사)의 질의에 ‘조선, 대만인 전사자의 자료는 육군관계는 있지만 유족이 명확하지 않아 전사 상황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1957년 10월 2일, 야스쿠니 신사 조사부가 작성한 ‘합사 자격 심사 참고자료’에는, 금후 논의를 요하는 것으로 대만, 조선인 문제가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다.

##### 五. 대만, 조선인

1. 군인, 군속으로 전사하거나 전상병사한 자는 합사한 사례가 있음
2. 군부(軍夫)는 대체로 작전행동에 수반하여 전사하거나 전상병사한 자는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의 사망자는 논의되지 않음<sup>26)</sup>

또한 1958년 4월 9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개최된 제4회 ‘합사기준에 관한 검토회’에는 인양원호국 복원과(구육군) 2명, 업무2과(구해군) 2명, 신사 측 5명, 봉찬회 측(방청) 6명이 참가했는데, 인양원호국 측은 ‘조선·대만 출신자를 소화 34년(1959년) 4월에 합사할 수 있도록 명표 준비를 할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1958년 제7회 ‘합사관련 검토회’<sup>27)</sup>에서는 향후 합사자 수에 대해 육군 측은 ‘조선, 대만인 2만 명’, 해군측은 ‘1959년 10월 조선, 대만 8천 명, 1960년 4월 조선, 대만 1만 2백 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전후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후생성이 제공한 자료(‘재산명표’)에 근거해 이루어졌는데 후생성이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한 한국인 자료는 20,727명분이었다. 연도별로는 1959년 19,650명, 1964년 82명, 1972년 66명, 1973년 385명, 1975년 509명의 자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공되었다.<sup>28)</sup>

25) 1946.10 야스쿠니 신사는 ‘초혼전천좌제(招魂殿遷座祭)’라는 의식을 치루고 초혼전의 제신을 본전(本殿) 왼쪽 편(邊)의 상전(相殿)으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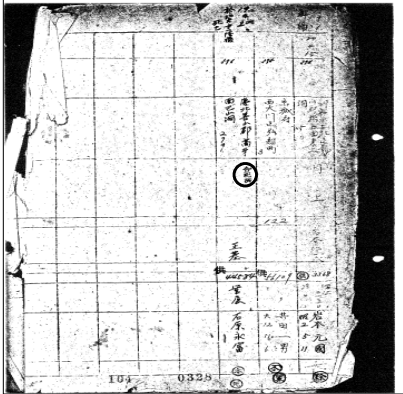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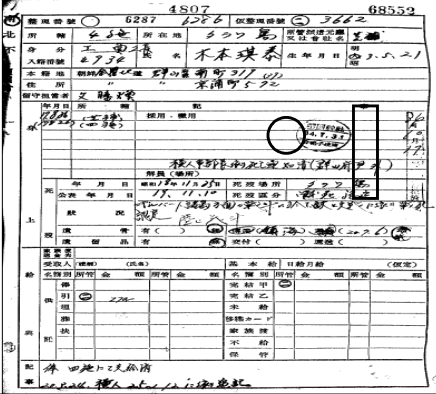
26) 国会図書館, 앞의 책, 225쪽

27) 国会図書館, 앞의 책, 247쪽

아래 <표5>는 후생성이 한국인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에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조사회답 업무의 일환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어떤 사람을 합사하고 어떤 사람을 합사하지 않을 것인지는 종교법인인 야스쿠니 신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구후생성이 합사 대상자의 결정에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sup>29)</sup> 일본 사법부도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006년 5월 25일 도쿄 지방법원과 2009년 10월 10일 도쿄 고등법원은 ‘(일본 정부의)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회답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전몰자 합사 실시는 야스쿠니 신사가 판단, 결정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와 하나가 되어서 전몰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도서관 공개 자료<sup>30)</sup>를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야스쿠니 신사 합사 대상을 논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합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과 바뀌지 않았다.<sup>31)</sup>

<표5> 후생성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 관여 자료

유수명부	해군군속신상조사표
	
<p>o 동그라미 : 합사제</p>	<p>o 동그라미 : 야스쿠니신사 1959.7.31 합사수속 완료 o 사각형 : 1959년 10월 17일 합사 완료</p>

28) 厚生労働省 『朝鮮人靖国神社合祀に関する情報提供について (回答)』 (2006.11.16)

29) 厚生労働省 『朝鮮人靖国神社合祀に関する情報提供について (回答)』 (2006.11.16)

30) 오사카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폐 소송 원고단은 2007년 12월 12일 ‘원고 제16 준비서면(피고 국가·동 야스쿠니 신사의 공동행위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新編靖国神社問題資料集』-에 의해 분명해진 사실)’에서 동 자료집을 근거로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가 공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31) 단 도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2009.10.29)은 “구 후생성이 실시한 전몰자 통지는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국가가 주도하여 합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종교와 관련된 행위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20조 3항에 규정된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측에 일반국민에 대한 협력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합사를 지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행위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이것을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하게 우대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 관여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과의 관계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홈페이지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신도정치연맹의 A급 전범 합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새로운 제신 합사에 관한 결정권은 소화 21년(1946년) 2월 2일 종교법인령 개정에 의해 하나의 종교법인이 된 야스쿠니 신사이지만, 신사 창건 이래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해 전사·전상사·전병사 또는 공무로 순직한 군인·군속 및 이에 준하는 자’라는 합사 선고기준에 변화는 없고, 전쟁에 의한 공무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야스쿠니 신사 당국이 멋대로 판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인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sup>32)</sup> 즉 후생성의 자료제공은 단순한 자료 제공이 아니라 합사자 통지에 가까운 행정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해 왔다. 1962년 4월 12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우케다 신기치(受田新吉, 민사당)의원은 ‘한국인, 대만인 등으로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군인으로서 응소하여 전사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가’라고 질문했다.<sup>33)</sup> 이에 대해 나다오 히로키치(灘尾弘吉) 후생대신은 “모셔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sup>34)</sup> 1978년 4월 25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노 요시오(河野義男) 원호국장이 ‘대만 분, 혹은 조선 분으로 전사하신 분, 전쟁 중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현재 외국인으로 어떤 분이 합사되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또한 자료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sup>35)</sup> 이는 앞서 검토한바와 같이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후생성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명백한 위증이라 할 수 있다. 후생성 관계자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후생성이 관여하여 한국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군인·군속 사상자를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는 배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에는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일본인으로서 합사되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 3. 한국인 합사와 창씨개명의 문제

야스쿠니 신사 유슈칸의 ‘야스쿠니의 신들’이라는 전시실에는 한국인 3명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탁경현(일본명 光山博文)에 대한 설명이다. 다른 두 명과는 달리 탁경현은 사진과 함께 일본어 보다 좀 더 상세한 한국어 설명도 붙어있다. 이것은 “호타루” 등 탁경현을 소재로 한 영화와 저서들로 그가 일본과 한국에서 지명도가 꽤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2) 神道政治連盟 『“A級戦犯”とは何だ!』(神道政治連盟 홈페이지, )

33) 衆-社会労働委員会 28号、1962.4.12

34) 앞의 책

35) 参-内閣委員会 9号、1978.4.25

<표6> 유슈칸에 전시된 탁경현 사진의 설명

光山博文 (本名 卓庚鉉)  昭和20年5月11日 沖繩付近にて戦死 陸軍 大尉	미쓰야마 후미히로 미코토(탁경현)  출신 : 조선 계급 : 육군 대위 소속부대 : 제6 항공군 사령부 특별공격대 제51 진무대로 출격 1945년 5월 11일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사
--	--

일본어 설명을 보면 본명이 탁경현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은 본명이 아닌 창씨개명된 상태 그대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철폐소송 원고는 “전후 60 수년을 지난 지금까지 창씨개명정책에 의해 강제된 일본식 성과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한반도를 일본제국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해의(害意)를 갖고 부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sup>36)</sup>며 피고의 성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취할 수 있는 확인수단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당해 합사명에 의한 합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건 합사에 사용된 씨명(氏名)이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의 씨명이 아니라고 해도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일부러 혹은 해의(害意)를 갖고 부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sup>37)</sup> 야스쿠니 신사의 주장은 한국인에게 있어 창씨개명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해방 후에는 법적으로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들이 창씨개명된 채로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데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이들과 함께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기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식민지 지배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합사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런 현재진행형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 사회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 V. 맺음말

야스쿠니 신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전몰자를 현창·추도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유도하는 데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국제전범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판결을 받은 자의 합사,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합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전몰자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현창하고 추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일반의 문제라 할

36) 「平成19年(ワ) 第4657号 準備書面(原告20) 2009年10月13日」, 29쪽.

37) 「準備書面(被告靖国神社(6))」, 상동. 29쪽.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비판적인 일본 지식인들 중에는 한국의 전몰자 추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중앙일보』(일본어 공식사이트) 2007년 6월 6일자에는 ‘호국의 영령이여, 편하게 잠드소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는 처음으로 포천지역의 한국전쟁(1950~53년) 전몰자 시체 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헌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야스쿠니사상과 똑같습니다. 일본어의 ‘영령=야스쿠니신’과 한국어의 ‘영령’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야스쿠니문제는 결코 일본 고유의 문제가 아니며, 전몰자 추도를 국가에 위임하는 한, 항상 국가권력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전몰자에 대한 추도·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sup>38)</sup>

야스쿠니 신사가 정당화 하고 있는 침략전쟁과 중국의 항일전쟁 및 한국의 의병투쟁과 같은 방위전쟁은 전쟁의 성격이 다르다. 전쟁의 성격 차이는 각각의 시설의 특수성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나 전몰자 추도와 영령제사 시스템에 주목하면 침략전쟁보다도 자위전쟁을 기념하는 쪽이 ‘조국을 위해 순직한’ 병사를 현창하려고 하는 지향이 강하다.<sup>39)</sup>

‘A급 전범이 합사된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시설’이라는 기존의 논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전몰자 추도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 통일 후의 전몰자 추도는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8) 민족문제연구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기획 침략신사, 야스쿠니(전시도록)』 2009, 79쪽

39) 高橋哲哉 『靖国問題』 筑摩書房, 2005. 200쪽.

# 「한국·한국인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토론문

최종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본 발표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일본 정치인 특히 일본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식민지 침략, 전쟁책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관심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립으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오해가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왜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이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논하고 있다.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에 대한 문제이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한국·한국인과 어떠한 관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한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신선하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향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논의 즉, 근대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국민과 국가 혹은 개인과 국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사실분석에 기초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제공이라는 목적의식이 보다 강하다고 판단된다.

발표문은 1장에서 본고의 목적과 분석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한국인의 합사 문제가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3장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에서도 한국인 합사문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인이 야스쿠니에 합사될 때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차별이 있었으며, 일본 정부 특히 후생성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의 내용 역시 개인과 국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근대 국민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인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적과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2장과 3장에서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왜 문제인지 국민국가의 구성 논리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한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왜 일본의 전몰자 추도시설에 합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국가론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한다.

두 번째 역시 동일한 질문이지만, 4장에서 한국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데 일본정부가 깊이 관여한 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원호법의 적용이라는 현실과 논리 사이에서 어떠한 모순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는 전후 보상 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근대 국민국가 일반의 문제로서 자국의 전몰자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현창하고 추도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보다 논쟁적인 논리전개가 필요하다 고 본다. 야스쿠니, 일본의 새로운 전몰자추도시설, 노무현 대통령의 헌화가 상황과 조건은 다르다고 하나 모두 ‘조국을 위해 순직한’ 병사를 현창하는 내용이라면, 한국인은 A급 전범이 합사되지 않은 새로운 전몰자추도시설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할 경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국의 중요 정치인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시설에 참배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청일전쟁 이후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전쟁에서 죽어간 일본인에게 한국의 중요 정치인이 참배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논의는 무엇이 되며 과연 한국의 국민국가에 대한 논리는 어떠한 것인지, 혹시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그 나라의 전몰자추도시설에 참배하는 것은 허용되면서 일본의 새로운 전몰자추도시설에 참배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와 논리는 무엇인지, 나아가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과정에서 자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만든 전몰자추도시설에 한국인은 참배하여야 하는지, 참배한다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인들 가운데 민간인 살해 등의 전쟁범죄에 관계된 이들이 한국의 전몰자추도시설에 안치된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사실이 마땅한 것이라 한다면 비록 침략전쟁이라 하나 일본을 위해 전장에서 죽은 일본인을 일본인이 현창하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국인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대답하기 힘들다면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례 예를 들면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과정에서 영국이 인도를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을 위해 죽어간 자국민의 전몰자추도시설에 대하여 한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시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한국인의 판단은 전쟁과 침략에 반대하는 인류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등 등 지면의 제한이 있다고는 하나 결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질적인 논쟁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



# 日本古代の神社と祭神

瀧音能之 (駒澤大)

---

## 目 次

---

はじめに

I. 伊勢神宮と出雲大社

II. 宇佐神宮の場合

III. 鹿島神宮と香取神宮

おわりに

---

## はじめに

日本古代の信仰としては、縄文時代のアニミズムや弥生時代に入ってきた本格的な稲作を背景とした水神・風神・山神信仰などがあげられる。しかし、これらの信仰をおこなう場としての社殿の存在は、まだなか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

神が祭神として鎮座する社殿の形成はいつごろかということをめぐるには、いまだ定説がないように思われるが、一般的には古墳時代、つまり5世紀前後くらいを神社の成立と考えるのがふつうである。このころに、代表的な神社である伊勢神宮や出雲大社といった古社が社殿をもつようになったとされる。

この段階で神に対する日本古代人の信仰、すなわち神祇信仰は大きな転機をむかえることになる。つまり、現代の神社の形態の基本ができあがった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今回の国際学術会議のテーマである靖国神社も、その形態的な面においては、この段階にルーツをもつといえる。しかしながら、靖国神社は古代の神社と性格が異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事実である。その相違の最大なものは、祭神の性格についてである。靖国神社は、国家のために戦って亡くなった者の霊を祭神としている。つまり、死者を神として祭っているわけである。しかし、古代の日本には、こうしたとらえ方はなかったとされている。たとえば、古代の祭祀および神祇信仰の研究者である岡田精司氏は、『神社の古代史』（大阪書籍、1985年）の中で、「神社が形づくられてゆく時期、古墳時代後期から奈良時代ごろ」の状況として、「神と死者の霊とは本来は全く区別されたものでありました。だから死者の個人の霊が神として祭られることは、古くは全くなかった」とのべている。

つまり、岡田氏によれば、靖国神社のような祭神のあり方は、少なくとも奈良時代、すなわち8世紀くらいまではみあた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こうした指摘をもとに、以下、古代の神社における祭神のあり方について述べることにしたい。

## I. 伊勢神宮と出雲大社

まずはじめに、日本でも最も古い神社の例として、伊勢神宮と出雲大社とをとりあげ、それぞれの祭神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伊勢神宮は内宮と外宮とからなり、内宮の祭神は天照大神、外宮の祭神は豊受大神である。その歴史をみるならば、『日本書紀』の崇神天皇6年に、それまで宮中に祭ってあった天照大神を大和の笠縫邑に磯域神籬を立てて祭ったとある。もとよりこの記事は伝承とみるべきであろうが、神籬を立てたとあることから、この段階では社殿の存在はみとめられない。ついで、崇神のあとをうけた11代天皇の垂仁25年3月に、皇女の倭姫命に託して祭る場所をさがしたところ近江・美濃をへて伊勢の五十鈴川の上流に斎宮をつくったとある。これがすなわち皇大神宮、つまり内宮の起源とされる。

一方、外宮は『止由気宮儀式帳』によると、雄略天皇の夢に天照大神のお告げがあり、御前を奉る神として雄略天皇22年9月に丹波国比治の真名井原から伊勢へ遷座したものが豊受大神宮、つまり外宮の起源とされている。いうまでもなくこれらは伝承とみるべきであり、歴史的事実としてそのまま扱うことはできない。

しかし、天照大神にしても、その天照大神に食事を提供する役割を担っている豊受大神も人格神の要素をもっているものあくまでも神である。そもそも、天照大神は、国生みをおこなったイザナキ神が黄泉国から逃げもどったのちにミソギをして生まれた神である。すなわち、ミソギをしたさいにイザナキ神の左目から誕生したのが天照大神、右目から誕生したのが月読神、鼻から誕生したのがスサノオ神とされている。イザナキ神の左右の目から天照大神と月読神とが生まれているわけであり、このことは神の両目から日・月両神が生まれるという神話的にもしばしばみられるパターン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神話の場合にもおそらくこうした日神と月神という両神を軸とする神話体系があったと思われるのであるが、『古事記』・『日本書紀』をみるとイザナキの鼻からスサノオ神が生まれており、3神で三貴子という扱いになっている。

日神・月神というワク組の中にスサノオ神がわり込んできたと考える根拠としては、月読神とスサノオ神との間にみられる支配領域の重複もみのがせない。つまり、月読神は「夜の食国」の領有をまかせられるのに対して、スサノオ神は「海原」の支配を命じられる。「夜の食国」とは、暗闇の世界であり、死者の国のイメージに重なる。また、「海原」も海上他界観をはじめとして死者の国のイメージをもっている。つまり、月読神とスサノオ神との場合、それぞれの支配領域にダブリがみられ、さらに、三貴子誕生ののちの記・紀神話のその後のストーリーの展開を追うと、月読神は姿を消し、もっぱらスサノオ神のみが登場している。

こうしたことから、記・紀神話は基本的には日神と月神というワク組があり、日神に相当するのが天照大神であり、月神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が月読神とスサノオ神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考えると、月神にあたる神として月読神が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どうしてスサノオ神が登場してくるのが問題になってこよう。この点に関しては、スサノオ神は朝鮮半島からの渡来神だったことがその原因であると思われる。スサノオ神の性格については多くのことがいわれているが、中でも製鉄神ととらえるのが妥当であろう。つまり、朝鮮半島から製鉄技術をもって渡来してきた民たちによって信仰されていた神がスサノオ神ということが可能と考えられる。

そうした渡来人たちが日本列島に渡来した時期を明確にいうことは難しいが、記・紀神話のワク組という観点からいうと、日神としての天照大神・月神としての月読神という体系ができ上がったのちのことであったと思われる。つまり、そうした日・月両神の体系が完成したのちにスサノオ神が割り込んできたわけである。

したがって、天照大神はその神名表記からもうかがわれるように、その性格には、日神すなわち太陽神という要素がみられる。言葉を変えるならば、太陽神を人格神化したものが天照大神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

そして、天照大神が記・紀神話の中で天皇家の祖先神として最高神としての地位を得ていくことになる。しかし、記・紀神話をもても天照大神が高天原の主宰神として最初から絶対的な地位を保持していたというのではなさそうである。むしろ記・紀神話の中の個々の神話をもていくと、タカミムスヒ神が高天原の主宰神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る場合がみうけられる。それでは、どのようにしていつごろから天照大神が、高天原の主宰神となり、記・紀神話の中で中心的な神になっていったのかという、時期を明確に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しかし、持統期にひとつの転機を想定することが許されるのではなかろうか。なぜなら、記・紀神話の中でも最大のクライマックスといえる国譲り神話、そしてそれに続く天孫降臨神話をみると、天照大神とその命をうけ地上に降臨する孫のニギという祖母-孫という関係がみられる。これは、持統天皇から孫の文武天皇への譲位をより正統化するために作られた神話と考えるのが一般的である。とするならば、持統天皇の時代、すなわち7世紀の後期に天照大神の位置が急激に高ま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天照大神の本来の姿は、伊勢の在地神であったと思われる。それが、国家側に取り込まれ、天皇家の祖先神という地位を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である。

次いで、出雲大社を例にして祭神についてみてみることにする。出雲大社の祭神はいうまでもなく、オオクニヌシ神である。出雲大社の社殿としての創建の由来は、神話にまでさかのぼる。たとえば、『古事記』をみると、国譲りの段に、高天原側の要求通りに地上の国を譲る代りに、自分の宮殿を天つ神の御子のもののように、太い柱を地中からしっかりと立て、千木を天高く上げて造ってほしいと要求し、高天原側がそれを承認したことによる。これが出雲大社の縁起ということになる。

近年、西暦1200年前後に切り出された出雲大社本殿の柱が発見され、その高さを48m (16

丈) とする伝承をより現実的なものとする報道がなされた。

また、同じ神話でも『出雲国風土記』の場合は少し様子が異なっている。すなわち、出雲郡杵築郷をみると、出雲の代表的な神の一柱であるヤツカミズオミツヌ神が諸神を集めて、この地にオオクニヌシ神の神殿を造ったと記されている。

こうした神話に創建の由来をもつ出雲大社の祭神であるオオクニヌシ神であるが、その性格は大変、複雑である。まず、記・紀神話にみられるオオクニヌシ神は、スサノオ神の末裔とされている。さらに、神名もオオクニヌシの他にオオモノヌシ・オオナムチ・ヤチホコ・ウツシクニタマ・オオクニタマ・アシハラシコオといったように様々な異なる表記がみられる。これらのうち、オオクニヌシ・オオモノヌシ・オオナムチについては、大きな土地の所有者という意味になる。また、ヤチホコは多くの矛をもった武神といったことになろうか。さらに、ウツシクニタマ・オオクニタマに関しては国魂、すなわち土地の精霊ということになろう。最後のアシハラシコオは地上で最も生命力にあふれエネルギッシュな男という意味である。

このように記・紀からは多くの複合的な顔をもつオオクニヌシ神像がうかびあがってくる。このことはいったい、何を意味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この点に関してはさまざまな解釈があろうが、ひとつには、本来はそれぞれの別の神名をもつ神を一神に合わせて統合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が成立するように思われる。つまり、いろいろな神の要素を統合して、地上の統治者としてふさわしい神として、オオクニヌシ神が誕生したのでなかろうか。

一方、『出雲国風土記』をみると、神名表記はおおむねオオナモチ神となっており、しかも多くの場合、天の下知ろしめしし大神、つまり天下を支配されている大神と記されている。まさに『出雲国風土記』はオオクニヌシ神の世界といった印象を受けるのである。『出雲国風土記』では、オオクニヌシ神は大地の創造神であり、地上の所有者として描かれている。

このように、オオクニヌシ神は、人格神的な要素を色濃くみせているが、それは記・紀神話や『出雲国風土記』の神話においてであり、本質はあくまでも神であるということには変わらない。

つまり、伊勢神宮でも出雲大社でも、その祭神は、記・紀神話の中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神々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 II. 宇佐神宮の場合

それでは次に視点を少し変えて、宇佐神宮を例にして考えてみたい。宇佐神宮は宇佐八幡宮とも称し、八幡信仰の源流である。大分県宇佐市に鎮座する古社であり、『扶桑略記』などによると、欽明天皇32年に神託をうけた神比義が奉斎し、和銅5年(712)に鷹居社を造り、そののち小山田へ移り、神亀2年(725)に現在地に社殿を造営したといわれる。祭神は、比売大神・神功皇后・応神天皇である。すなわち、宇佐神宮の場合、比売大神はさておくとしても神功皇后とその子の応神天皇が祭神とされており、「人間」が祭神となっ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

しかし、宇佐神宮の信仰の起源をみていくなれば、上記の三者を同質に扱うことは難しいよ

うである。宇佐神宮が鎮座する地、すなわち宇佐は、大和と九州を結ぶ最短ルートであり、しかも朝鮮半島へも連絡する交通の要地にあたる。それを反映して、信仰も土地の神祇・仏教・道教などが絡み合ったものになっ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

伝承では、弥生時代末期、すなわち3世紀ごろには朝鮮系のシャーマニズムが伝わったとされ、シャーマンの名を豊国奇巫といったという。豊国奇巫は雄略天皇に召し出され、さらに用明天皇2年(587)に豊国法師として天皇の病を治すために参内したと伝えられる。この豊国法師は、仏教と道教とが融合したシャーマニズムを用い、多くの幡に囲まれた祭場で託宣をおこなったとされ、託宣の神をヤハタ神と称したという。これが八幡信仰の最もベースとなる信仰で、原始ヤハタ神信仰と称され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風土の中からでてくるのが法華である。法華は僧侶であるが、シャーマニズムによる医療活動をおこない、大宝3年(703)、国家によって賞せられた。

こうした原始八幡信仰の一方で、北部九州に課された問題として、新羅との関係があげられる。これはまさしく国家的な課題であり、解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った。こうした観点から生み出されたのが、三韓平定伝承で知られる神功皇后とその子の応神天皇なのである。もっとも神功皇后の場合は伝承上の架空の人物と思われるので、ここで問題にしたいのは応神天皇である。

応神天皇は、その神格が欽明朝にあらわれたとして、それまでの原始ヤハタ神信仰に付加されたわけであり、この付加に尽力したのが大神比義であったとされる。尚、神功皇后が神格として正式に取り入れられたのは、時代がくだって弘仁14年(823)の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にみていくと、宇佐神宮の場合、たしかに、神功皇后・応神天皇といった人物が祭神となっているが、それは、靖国神社のように国家のために戦没した個人がその功績によって祭神となるというのとは事情が異なっている。すなわち、宇佐神宮において神功皇后が祭神とされたのは、神功が朝鮮半島を平定したという伝承によるものであるし、応神は神功の子であるという理由が祭神とされる大きな理由と考えられる。

### Ⅲ. 鹿島神宮と香取神宮

次に、武功という点に注目して、その代表的神社である鹿島神宮と香取神宮を例にして、それぞれの祭神を分析してみたい。

まず、鹿島神宮であるが、茨城県鹿島郡鹿島町に鎮座する古社である。『常陸国風土記』によると、10代目の天皇である崇神天皇のときに祭祀がおこな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当初より、武勲の神として信仰がなく、「鹿島立ち」という言葉がそれを端的にものがたっている。これは、戦役におもむくさいに、鹿島神宮に参拝し武運を祈って出征していくというものであり、この背景には、鎮座地の地理的環境などから考えて古代の蝦夷平定のさいの守護神としての役割があったものと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では、鹿島神宮の祭神はというと、タケミカズチ神という神がそれである。タケミカズ

チ神は、記・紀神話の中での武力的な英雄神として名高い。この神が活躍する場としては、まず国譲り神話あげられる。2度の国譲り交渉に失敗した高天原側が3番目の使者として選んだのがタケミカズチ神である。香取神宮の祭神であるフツヌシ神と共に出雲へ降ったタケミカズチ神は、オオクニヌシ神を説きふせて国譲りに同意させる。その過程で従わなかったタケミナカタ神を力で破り、逃亡したタケミナカタ神を諏訪まで追いかけて降伏させている。

また、神武天皇の東征伝承においては、神武が窮地に陥ったさいに霊剣を授け、東征を助け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

こうした神話上の英雄神であるタケミカズチ神は、一方では香取神宮のフツヌシ神と共に藤原氏の氏神的地位を得たことによって、さらに厚い信仰と保護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

鹿島神宮はこのように武功と密接な関係をもつ神社であるが、その祭神は記・紀神話の中の英雄神であり、古代において蝦夷平定などに従軍した人々とは無関係なことは明白であり、まして、それらの人々をたたえるといった要素はないといってよいであろう。

鹿島神宮とペアのように扱われるのが香取神宮である。香取神宮は、千葉県佐原氏香取に鎮座しており、鹿島神宮とは距離的にもさほど遠くない。祭神は、フツヌシ神であり、神名になっている「フツ」の由来は鋭い刃物でものをたち切った時の擬音であるといわれている。したがってフツヌシとは、鋭利な武器の所有者ということで、ここからフツヌシ神の性格が武神であることは一目瞭然である。この点、鹿島神宮の祭神であるタケミカズチ神と共通点がみられる。両神の共通点は単にそれのみにとどまらず、たとえば、記・紀神話の中の国譲りの場面でも行動を共にしている。さらに、両神とも藤原氏の氏神的な信仰を受けていることも同じである。藤原氏の氏神は春日大社であるが、平城京への遷都にさいして、鹿島神宮のタケミカズチ神と香取神宮のフツヌシ神とを奈良の春日山に祭った。現在、春日大社の本殿は四殿からなっているが、その第一殿にはタケミカズチ神が祭られ、第二殿にはフツヌシ神が祭られている。

これらのことからもうかがわれるように、香取神宮も鹿島神宮と同様の性格をも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すなわち、香取神宮は武神としての性格をもつフツヌシ神を祭神として名高く、そこから神社自体もそうした信仰が厚い。しかし、それは祭神であるフツヌシ神が記・紀神話において代表的な武功の神であることに起因しており、戦に従軍したり、戦闘によって亡くなった人々を対象にしたものではない。むしろ、戦いに臨む人々の守護神的な性格をもっており、戦いにいった人々をたたえるといった性格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 おわりに

いままで、伊勢神宮・出雲大社・宇佐神宮・鹿島神宮・香取神宮といった少なくとも奈良時代、すなわち8世紀前半までには社殿を構え、厚い信仰を得ていたと考えられる古社を対象として、祭神に注目して靖国神社のような形態をもつものがあるか否か概観してみた。その結果、日本の古代、主として8世紀くらいまでには、靖国神社のように国家のために戦って亡くなった人を祭るといった形態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というよりもむしろ、死亡した人物を祭神とする発想がなかった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

平安時代、すなわち8世紀末期から9世紀以降になると、そうした神社のありようにも変化

が生じてくる。具体例を示すならば、北野天満宮は、菅原道真を祭神とした神社であり、道真の死後、創建された神社である。菅原道真は著名な学者であり、文章博士であったが、宇多天皇に登用され、次の醍醐天皇のときに右大臣にまでのぼりつめた政治家でもある。しかし、左大臣であった藤原時平の陰謀によって大宰府に左遷された悲劇の政治家でもある。したがって、菅原道真の本領は学問ということになる。いまでこそ、北野天満宮は学問の神として名高いが、そもそもの創建の由来は異なり、10世紀の中ごろ託宣による要求にしたがったものとされる。その背景には悲劇の政治家である菅原道真が、怨霊となって、自分をおとし入れた関係者に祟るという事情があった。こうした道真の祟りを恐れ、神として敬うことによって難を逃れようとしたわけである。これは当時、隆盛してきた御霊信仰の典型例である。したがって、北野天満宮も、その祭神はたしかに菅原道真であり、道真の死後、創建された神社であるが、靖国神社とは同形態とはいえない。なぜなら、菅原道真が祭神とされた理由は、道真の学問や政治家としての業績をたたえるためではなく、祟りを逃れ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からである。この点からも、古代においては靖国神社のような形態をもつ神社はなかったといってよいであろう。いいかえるならば、靖国神社は近代日本という風土の中で生み出された神社とみることができであろう。

#### 【参考文献】

- ・岡田精司 『神社の古代史』 (大阪書籍 1985)
- ・直木幸次郎 『神話と古代国家』 (講談社 1990)
- ・福山敏男 ほか 『神宮』 (小学館 1975)
- ・田中卓 『神宮の創祀と発展』 (神宮司庁教導部 1959)
- ・田村円澄 『伊勢神宮の成立』 (吉川弘文館 1996)
- ・瀧音能之 『古代の出雲事典』 (新人物往来社 2001)
- ・水野祐 『古代の出雲』 (吉川弘文館 1972)
- ・和田萃 『日本古代の儀礼と祭祀・信仰 下』 (塙書房・1995)
- ・中野幡能 『八幡神仰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75)
- ・宮地直一 『八幡宮の研究』 (理想社 1956)
- ・飯沼賢司 『八幡神とは何か』 (角川書店 2004)
- ・宮井義雄 『歴史の中の鹿島と香取』 (春秋社 1989)
- ・東実 『鹿島神宮』 (学生社 2000)
- ・北野神社社務所 編 『北野誌』 (国学院大学出版部 1909)

## 오후 주제발표

<오후 주제발표>.....사회 서민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1세기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정책

발표자 : 최영호 (영산대)

토론자 : 박삼현 (건국대)

靖國神社와 日本新軍國主義

발표자 : 徐勇 (北京大)

토론자 : 강현사 (성신여대)

휴식

殉國과 殉教—犧牲의 宗教에 대한 질의

발표자 : 高橋哲哉 (東京大)

토론자 : 방광석 (성균관대)



# 21세기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정책

최영호 (영산대)

---

## 목 차

---

- I. 머리말
  - II. A급 전범 분사 문제
  - III. 정치가들의 참배 문제
  - IV. 대체 추도시설 건립 문제
  - V. 맺음말
- 

## I. 머리말

본 발표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여당 및 정부의 정책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일까를 논하고자 한다. 우선 서론에서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정치권의 정책 대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옛 군인을 비롯하여 일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제사하는 곳이다. 1869년 도쿄 초혼사(招魂社)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어 1879년에 야스쿠니 신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일본 패전 이전까지 국가 기관으로서 내무성이 인사를 관리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이 제사 업무를 관할했다. 그러나 패전 이후 1946년부터는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쿄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별 종교 법인이 되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메이지(明治) 시기의 일본 내전을 비롯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에서 일본 국가를 위해 죽은 것으로 된 246만 6천여명의 사망자가 합사(合祀)되어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야스쿠니 신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제사 의식에는 매년 4월에 열리는 춘계 대제와 10월에 열리는 추계 대제가 있다.<sup>1)</sup>

1945년 12월 점령당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소위 ‘신도(神道)지령’으로 불리는 지령을 내려 국가 신도, 신사 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존, 감독과 홍보를 폐지하도록 했다.<sup>2)</sup> 이것은 국가 신도를 폐지하고 정교(政敎)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고 군국주의 요소를 배제하려고 하는 점령정책의 목표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러한 점령정책의 연장

---

1) 靖国神社 홈페이지 <http://www.yasukuni.or.jp>;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의 「靖国神社」설명을 참고.

2) SCAPIN-448. 1945. 12. 15.

선에서 이듬해 제정 공포된 일본국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했다.<sup>3)</sup> 여기서 말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과거 일본제국의 종교였던 신사 신도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키고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여 국가를 완전히 세속적 원리에 입각하여 성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그러나 전후 일본의 재출발과 함께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움직임으로 우익 세력과 자민당에 의해 일어난 「국가 호지」 운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본유족회의 움직임이 중심이 된 것으로,<sup>5)</sup> 전쟁 전과 같이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의 관리 하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60년대와 70년대 대동숙(大東塾) 등 우익 단체가 자민당 정치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요구한 일이 있다. 우익 세력들은 음으로 양으로 「국가 호지(護持)」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1969년 1월 당시 일본유족회 회장이던 가야(賀屋興宣)가 탈종교화를 용인하는 조건으로 하는 국가 관리 법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우익 세력이 그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사토(佐藤榮作)와 다나카(田中角榮) 수상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등 로비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sup>6)</sup>

우익 세력의 움직임과 함께 자민당 내부에서도 유족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스쿠니 신사를 탈종교적인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국가의 관리 하에 두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종교성을 배제하고 수상의 감독 아래에 두면서 의례 행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자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이었다. 자민당 의원 입법으로 1968년 12월에 관련 법안 초안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 사회에서 정교(政敎)분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심의 대상은 되지 못하고 폐안에 이르기를 거듭했다. 6번째로 1973년에 제출된 법안은 심의동결 등을 거쳐 이듬해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이 법안 역시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치지 못하여 자동 폐안 되었다. 그 후 더 이상 야스쿠니 신사의 탈종교화에 관한 입법 움직임은 전개되지 않았으며 본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야스쿠니 신사와 별개의 종교성을 갖지 않는 국립 추도 시설을 건립하자는 논의로 발전해 왔다.

그 후 1975년부터는 야스쿠니 신사 수호 세력의 목표가 수상과 천황 등이 8월 15일에 행하는 ‘공식 참배’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1985년 이래 중국과 한국 정부가 A급 전범 합사를 이유로 ‘공식 참배’를 비판하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게 되었다. 이와

3) 일본국 헌법 제20조 1항은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적인 권력을 해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3항은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9조는 종교단체 및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금의 사용과 공적인 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4) 교야스 노부쿠니.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산해. 2005. pp. 40-41.

5) 일찍이 1956년에 유족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국가 호지」를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신사로 조직된 신사본청, 우익세력, 우파 정치세력이 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류교열.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보는 시각」. 동북아역사재단(편). 『역사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 266-267.

6) 堀幸雄.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1983. pp. 148-149.

함께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인 뿐 아니라 다수의 식민지 출신 군인 군속을 합사하고 있어 전후 처리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전쟁터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나중에 생환한 사람이 합사되는 등, 합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사됨으로써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적 권위성이 허상이라는 점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sup>7)</sup>

일본정부는 직접 관리를 했던 간접 개입을 했던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야스쿠니 신사 이외에는 일본의 전사자들을 추도할 시설이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일본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일본정부 스스로의 전쟁 반성 논리의 확대 등으로, 21세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sup>8)</sup>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는 일본 수상의 '공식 참배' 문제, A급 전범을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분사(分祀)하는 문제, 야스쿠니 신사에 대체하는 국립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문제, 등이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일본사회 내의 논쟁과 A급 전범의 합사로 인한 외교적 쟁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I. A급 전범 분사 문제

일본의 국회도서관은 지난 2007년 3월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을 합사하는 과정에 관한 비공개 자료들을 모은 『신편야스쿠니신사문제자료집』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도서관은 2006년 1월부터 국회의원들이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자, 야스쿠니 신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발굴에 착수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야스쿠니 신사가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자료와 함께, 후생성과 신사 간의 회합 내용 등 모두 808건, 총 1,200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자료집 내용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50년대부터 A급 전범의 합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sup>9)</sup>

과거 2005년 7월에도 시사 잡지 『AERA』 기사를 통해 일본 후생성이 1965년 5월에 각 지방 민생과장 앞으로 육군관계 전사자들의 야스쿠니 합사에 협력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1966년 2월에는 A급 전범 12명의 이름을 제신명표(祭神名票)에 기입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송부함으로써 합사에 대한 정부측의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자료집은 그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일본정부가 전범들의 합사에 관여했음을 밝히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자료집을 통하여 전쟁 전에 국가가 신사를 운영해 오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후생성이 신사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는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pp. 15-16; p. 41.

8)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논리와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뉴스』. 2007년 8월호.

9)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 논형. 2008. pp. 27-28.

정교분리의 원칙을 일본정부 스스로가 위반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전범 합사 문제를 은밀하게 추진해 온 것이 밝혀졌다. 다만 이 자료집에서도 A급 전범의 합사와 관련하여 1969년 ‘합사 가능’ 결정에서부터 1978년 ‘합사 단행’에 이르는 시기의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알게 하는 자료들이 빠져있다.

일본정부는 그때까지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을 합사한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자료집 제출에 관한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아베(安倍晋三) 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합사를 행한 것은 신사측이며, 후생성은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한 것 뿐이다”라고 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오자키(鹽崎恭久) 관방장관도 “후생성은 지난 군부 인사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회답해 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합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신사측에 있었으며 정부측이 강제로 추진할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후생성 인양원호국이 유족에 대한 원호 행정을 담당하는 과정에서,<sup>10)</sup>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깊이 관여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일찍이 1956년 후생성은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에 관한 협력에 대하여」라고 하는 통지문을 지방정부에 보내어, 신원 조사 등을 통해 합사 대상자 선정에 협력하도록 요청한 일이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추계 대체 직전에 합사를 하면서 누구를 합사해야 하는지 후생성에 조회했다. 이에 대해 후생성은 선정 기준<sup>11)</sup>을 정하여 해당하는 자의 신상 카드를 지방자치단체의 육군과 해군 복원 업무 담당부서에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모아서 야스쿠니 신사측에 보냈다. 이로써 제신(祭神)의 선정과 합사에 국민일체의 공동 작업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sup>12)</sup>

『신편야스쿠니신사문제자료집』 제출 직후, 아사히신문은 사실을 통해 전후에 들어 일본 후생성이 합사 문제에 다음과 같은 관여했다고 밝혔다.<sup>13)</sup> 1958년 4월 인양원호국 담당자가 야스쿠니 신사 사무소에서 열린 회합에서 신사측에게 BC급 전범자에 대해 “개별 심의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게다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합사하는 것은 어떤지 연구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다. 같은 해 9월의 회합에서는 도죠(東條英機) 등 A급 전범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때 이들의 합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고 해외에서 처형당한 BC급 전범자의 합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후생성과 야스쿠니 신사 사이에 회합이 있었으며, 1959년에는 A급 전범자의 처리는 유보하고 우선 BC급 전범자의 합사만을 단행했다.

이미 1953년 8월 유족원호법 개정에 의해 전범자들의 죽음이 법무사(法務死)로 인정되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조위금 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

10) 인양원호국은 1953년 7월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몰자 유족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몰자 1인당 2장의 왕복교통비 50% 할인권을 배부했다.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p. 27.

11) 후생성의 합사 대상 선정 기준은 유족원호법과 은급법에 해당하는 자들로 이 기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식 기준이다.

12) 大原康男. 『いわゆる「A級戦犯」合祀と靖国問題について』. モラロジー研究所. 2008. pp. 31-32.

13) 朝日新聞. 2007. 3. 30.

14)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소명출판. 2008. pp. 208-209.

게 그것도 비밀리에 전범자의 합사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 사회로부터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즉 전쟁 책임자들을 현양(顯揚)하는 일이 지난 전쟁을 긍정하고 전쟁 책임을 애매하게 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생성은 이미 1966년에 A급 전범자의 제신명표를 야스쿠니 신사에 송부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궁사(宮司)의 판단에 따라 합사를 미루고 있다가 1969년 1월의 관민 회합에서 A급 전범자 가운데 ‘수난자’ 12명에 대한 합사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다만 이때 외부 발표는 피하기로 했다. A급 전범자의 합사는 78년 10월에 가서 이뤄졌다.

A급 전범자 합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사회와 주변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거 8세기경에 이타키소(伊太祁曾) 신사에서 합사되어 있던 3개신을 각각 3개 신사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처럼 신도에서 분사의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sup>15)</sup>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측과 유족회측은 A급 전범자 분사 요구에 대해 “일본의 전통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모두 신이 된다” 혹은 “분사 주장은 시체를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sup>16)</sup>

야스쿠니 신사측의 분사 반대 견해는 2004년 2월 나카소네(中曾根康弘)가 아사히TV 프로그램에서 A급 전범자 분사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예로부터 신도에서는 분령(分靈)을 행하여 별도의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나, 비록 분령되었다고 해도 본래의 신령이나 분령된 신령이 전신격(全神格)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2,466,000여 신령 가운데 하나의 신령을 분령한다고 해도 본래의 신령은 존재하게 되며 일단 합사된 개개의 신령의 집합체인 전신격은 옳길 수 없다고 보았다.<sup>17)</sup> 일본의 우익 대부분은 이러한 절대적인 분사 반대론을 지지하고 있다.<sup>18)</sup> 현실적으로도 만약 야스쿠니 신사가 분사를 하게 되면 일본사회에서 뿌리 깊게 존재하는 합사 반대 움직임이 분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야스쿠니측이 여간해서 분사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유족회는 물론 자민당과 민주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A급 전범의 분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A급 전범으로 사형 당한 자들을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죽어간 병사 전사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야스쿠니 신사측의 행동이 야스쿠니 신사의 지지층이 되어 온 보수층에게 일부 위화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족회 내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렇다고 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외교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당분간 일본의 정치권이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A급 전범자 분사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기가 마련되어 대체 추모시설 등을 카드로 하여 정치권이 야스쿠니 신사측에 강력

15)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의「伊太祁曾神社」설명에 의함.

16)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pp. 215-216.

17) 靖國神社, 「所謂A級戦犯分祀案に対する靖國神社見解」, 2004. 3. 3. 오늘날에도 촛불에 비유하여 신사의 촛불을 나눈다고 해도 본래 촛불은 남는다고 하며 신사측의 ‘分靈不可’설을 옹호하는 주장이 있다. 上坂冬子・小林よしのり, 『日本人よ, もっと悪人になりなさい』, WACBUNKO, 2009. pp. 137-138.

18) 노 다니엘, 『우경화하는 신의 나라』, 랜덤하우스, 2006. pp. 270-273.

19) 赤澤史朗, 「전몰자 추도와 야스쿠니신사」, 『공익과 인권』, 제3권 2호, 2006. 8. pp. 79.

하게 분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측이 종래의 ‘전신격 불변’ 주장을 유보하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A급 전범자 부분 분사 논의를 받아들일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본다.

### Ⅲ. 정치가들의 참배 문제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 이후 2009년 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32명이 일본의 수상직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직 수상으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람이 총 14명이며, 미키(三木武夫), 후쿠다(福田赳夫), 스즈키(鈴木善幸), 나카소네, 고이즈미(小泉純一郎)는 8월 15일에 참배했다. 전후 역대 수상의 참배 회수와 참배일은 다음 표와 같다.<sup>20)</sup>

수상명	재임기간	야스쿠니 참배회수	야스쿠니 참배일
東久邇宮稔彦王	45.8~45.10	1회	45.8.18
幣原喜重郎	45.10~46.5	2회	45.10.23, 45.11.20
吉田茂	46.5~47.5 48.10~54.12	5회	51.10.18, 52.10.17, 53.4.23, 53.10.24, 54.4.24
岸信介	57.2~60.7	2회	57.4.24, 58.10.21
池田勇人	60.7~64.11	5회	60.10.10, 61.6.18, 61.11.15, 62.11.4, 63.9.22
佐藤栄作	64.11~72.7	11회	65.4.21, 66.4.21, 67.4.22, 68.4.23, 69.4.22, 69.10.18, 70.4.22, 70.10.17, 71.4.22, 71.10.19, 72.4.22
田中角栄	72.7~74.12	5회	72.7.8, 73.4.23, 73.10.18, 74.4.23, 74.10.19
三木武夫	74.12~76.12	3회	75.4.22, 75.8.15, 76.10.18
福田赳夫	76.12~78.12	4회	77.4.21, 78.4.21, 78.8.15, 78.10.18
大平正芳	78.12~80.6	3회	79.4.21, 79.10.18, 80.4.21
鈴木善幸	80.7~82.11	9회	80.8.15, 80.10.18, 80.11.21, 81.4.21, 81.8.15, 81.10.17, 82.4.21, 82.8.15, 82.10.18
中曽根康弘	82.11~87.11	10회	83.4.21, 83.8.15, 83.10.18, 84.1.5, 84.4.21, 84.8.15, 84.10.18, 85.1.21, 85.4.22, 85.8.15,
橋本龍太郎	96.1~98.7	1회	96.7.29
小泉純一郎	01.4~06.9	6회	01.8.13, 02.4.21, 03.1.14, 04.1.1, 05.10.17, 06.8.15
계		67회	

1979년 춘계 대체 직전에 각 신문들이 합사 사실을 보도하면서부터 일본인 대중들에게 A

20)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의「靖国神社問題」참조.

급 전범자 합사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까지 아무런 논란이 없이 수상의 참배가 이루어져 왔는데, A급 전범자 합사가 알려지면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과거 전쟁에 대한 인식 문제와 관련지어지고 이른바 정치적인 쟁점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일본정부에게 있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이른바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경우, 전후 총 67회에 걸쳐 수상의 참배가 이루어진 가운데, 오히라(大平正芳) 이후 29회에 걸쳐 정책적으로 수상의 참배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라, 스즈키, 나카소네로 이어지는 수상들은 정책 방향으로 취한 것은 ‘사적 참배’라는 명분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 하는 일이었다.<sup>21)</sup>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8.15일 참배를 포함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스즈키 내각의 발족 직후 8월 15일에는 환자 한 명과 다른 의견을 가진 각료 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상과 19명의 각료가 한꺼번에 참배하는 초유의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다.<sup>22)</sup>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한 이러한 사적 참배를 주장하는 ‘굴절된’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부수적 성향의 정치가와 유족 단체들이 ‘공식 참배’를 요청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이 1978년 1월부터 시작한 운동을 필두로 하여 시작된 ‘공식 참배’ 운동은 1982년 8월에 천만 명 서명을 달성하고 여기에 동참한 의원 수도 387명에 달했다.<sup>23)</sup>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여 나카소네는 자민당 정무조사회 내각부회 안에 오쿠노(奥野誠亮)를 위원장으로 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참배’의 위헌 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게 했다. 그 결과 종교성을 희박하게 하는 참배 형식을 고안해냄과 동시에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에 의한 ‘공식 참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sup>24)</sup>

나카소네가 ‘공식 참배’를 선언하고 1985년 8월 15일 새로운 형식으로 참배 의례를 마쳤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이 일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일본정부를 압박했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과거 주변국에 대한 침략전쟁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인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반발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정치 문제로서 뿐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서 정책적인 시야에 넣고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다루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수상의 ‘공식 참배’ 정책은 단 한 차례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A급전범자를 합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한정하여 즉 외교적인 타협으로서 ‘공식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오고 있다.<sup>25)</sup>

나카소네 이후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절제하는 가운데 고이즈미 수상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으며 임기 종료를 앞두고는 8월 15일에 참배했다. 21세기에 들어서까지 일본정부가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고이즈미는 2006년 8월 15일 아침 7시 반에 총리관저를 빠져나와 40분쯤에 야스쿠니 신사

21) 大原康男, 『いわゆる「A級戦犯」合祀と靖国問題について』, p. 46.

22)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pp. 218-219.

23)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p. 219.

24)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pp. 220-223.

25) 다카하시테쓰야,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사, 2005. pp. 68-71.

에 들어갔다. 참배에 대한 찬반 의견이 국내적으로 분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는 종전기념일 참배를 강행한 것이다. 재임 중 6번째 마지막 참배로서 이번에 그는 2001년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내세운 8.15 참배 공약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모닝 정장 차림으로 신사에 들어가 ‘내각총리대신 小泉純一郎’ 라고 장부에 기입했으며, 2005년과는 달리 본전(本殿)에 올라가 제단에 절을 했다. 헌금(獻花料)으로는 자비로 3만엔을 내놓았다. 이로써 현직 수상의 8.15 참배가 1985년 나카소네 수상 이후 21년 만에 재현된 셈이다.

고이즈미는 이날 오전에 총리실 출입 기자들에 대해 참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제까지 8월 15일을 피해 온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만은 피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그래도 비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8월 15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간 8월 15일을 피하기만 하면 외교적인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의 역사 인식의 한계를 잘 나타내는 것이었다. 결국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한 의견에 대해, 그는 이를 수용할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이즈미는 같은 날 낮에 정부가 주최하는 전국전몰자추도식에 나와 이제까지 매년 읽어왔던 문구를 그대로 반복했다.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고, 깊은 반성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반성’ 표현은 정치적 공약 준수를 위해 역사인식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 온 그의 가벼운 행보로 인하여 주변국 사람들에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공염불에 그쳤다. 고이즈미가 재임 기간에 걸쳐 보인 주변국을 무시한 정치적 퍼포먼스는 일부 일본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변국 국민에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신을 키웠으며 이것이 국민 상호간의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외교적 불협화음에 직면하여, 고이즈미 이후 자민당 정부는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절제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더욱이 올해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서는 각료의 참배까지 절제하고 있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한 주변국에 대해 자민당 정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배려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수상은 "나와 각료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생각이 없다"<sup>26)</sup>고 단언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처럼 민주당 정부의 주변국 배려에 따라 수상이 나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정치권 전반에 걸친 참배의 절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행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추계 대제에 즈음하여, 올해 10월 20일 비록 현직 각료들이 모두 빠지기는 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다수 포함된 가운데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는 의원 54명을 포함하여 69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은 이러한 이중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6) 연합뉴스. 2009. 11. 01.

장기적으로 볼 때, A급 전범자 분사의 움직임과 맞물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A급 전범자가 합사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해도 여전히 정권의 향방에 따라, 그리고 중일관계의 역학 변화 등에 따라, 또 다시 21세기 벽두에 고이즈미가 보인 퍼포먼스가 재연될 소지도 없지 않다. 그것은 일본의 정치권에서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내외적인 영향을 받아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정체성 찾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IV. 대체 추도시설 건립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국립 추도시설 건립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 문제나 A급 전범 합사 문제로 인한 사회적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특정 종교 색깔을 띠지 않는 국립상설 추도시설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다.

일찍이 1999년 오부치(小淵惠三) 내각의 노나카(野中廣務) 관방장관이 A급 전범자 분사를 제기하는 가운데 무종교 국립묘지를 신설하자는 구상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에는 정책적인 검토로 이어지지 않았다.<sup>27)</sup> 그러다가 고이즈미 내각 발족 직후인 2001년 6월, 정당 대표간 토론에서 야당측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체하는 추도 시설로 국내외 인사들이 거리낌 없이 추도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이것이 일본정부에 의한 정책적 검토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다나카(田中眞紀子) 외상도 대체 추도시설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다. 그 해 8월 야스쿠니 참배 직후 고이즈미 수상도 국립 추도시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12월에 ‘보고서’를 통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거국적인 추도를 위하여 국립 무종교 항구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추도의 대상, 과거 전쟁에 대한 평가, 야스쿠니 신사나 치도리가후치(千鳥ヶ淵) 묘원과의 관계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애매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이 ‘보고서’가 제출되자, 2003년 1월 일본 정부는 ‘보고서’가 제안한 시설 건립 등에 관한 문제를 구체화 하지 않고 실행 판단을 장래로 미루겠다고 하여 우야무야 시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를 대외적인 반발에 대한 시간 벌기로서만 이용한 것이다.<sup>28)</sup>

이와 함께 2005년 11월에 의원들로 결성된 ‘국립추도시설을 생각하는 모임’도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제안했다. 이 모임의 회장은 야마자키(山崎拓) 자민당 의원, 부회장은 후유시마(冬柴鐵三) 공명당 의원과 하토야마 민주당 의원이 각각 담당했다. 이 모임은 2006년 6

27) PHP研究所編. 『検証・靖国問題とは何か』. PHP研究所. 2002. p. 263.

28)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pp. 266-269.

월 15일에 발표한 제안서를 통해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무종교 국립 추도 평화기념 시설 건립을 요구했다.<sup>29)</sup>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의원은 50명에서 1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자키처럼 이 모임과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sup>30)</sup>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립 추도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대체 시설이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와는 달리 민간인 수난자도 추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야스쿠니 신사처럼 죽은 사람을 미화하는 측면이 없어, 국내외 인사 누구라도 참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sup>31)</sup> 현실적 대안으로 과거 히로히토(裕仁)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던 신주쿠교엔(新宿御苑)이 새로운 추도시설의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지만,<sup>32)</sup> 신주쿠교엔보다는 치도리가후치 묘원을 확충하자는데 보다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치도리가후치 묘원도 무연고 사망자의 묘역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대체 추도시설로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하는 추도시설로서 평화기념공원과 같은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자고 하는 견해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sup>33)</sup>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치도리가후치 묘원보다는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립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찍이 2001년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면서 당내에 NC(Next Cabinet) 내각부 부문 야스쿠니 문제 업무팀을 구성하고 스에마쓰(末松義規) 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국립 추도시설 건립 문제를 검토하게 했다. 그 결과 2003년 7월에 발표한 의견으로써 위헌 가능성이 높은 야스쿠니 신사와는 다른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관계자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작성과 함께 민간단체와 제휴하여 국민운동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sup>34)</sup>

한편 대체 추도 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국가의 추도 시설로서 야스쿠니 신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추도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유족이나 국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sup>35)</sup>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국가 가운데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는 기껏 해야 중국과 한국뿐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아시아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일부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 각료, 군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일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과 한국 이외의 국가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

29) 이때 山崎拓는 국립 추도시설 건립을 요구하면서 주변국 외교 수정을 쟁점으로 하여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판적인 福田康夫를 자민당 총재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毎日新聞「靖国」取材班. 『靖国戦後秘史：A級戦犯を合祀した男』. 毎日新聞社. 2007. p. 15.

30)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의「国立追悼施設を考える会」참조.

31)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의「靖国神社問題」참조.

32) PHP研究所編. 『検証・靖国問題とは何か』. p. 263.

33) PHP研究所編. 『検証・靖国問題とは何か』. p. 264.

34) 民主党. 「新しい国立追悼施設の設立について」. 2003. 7. 16.

35) 이면우. 「야스쿠니신사참배 : 야스쿠니문제의 원인과 해결」. 『세종정책연구』 제4권1호. 2008. 3. pp. 135-137.

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sup>36)</sup>

오늘날 일본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올해 8월 중의원 선거를 치루기 직전에도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는 다가오는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야스쿠니 신사와는 별도로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37)</sup> 하토야마는 8월 13일 민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급 전범자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와 각료가 참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주변국들의 반발 없이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국립 추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천황도 마음 편하게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sup>38)</sup>

그런데 집권 후 민주당 정부는 국립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최근 10월 중순 일본 내각부가 부처별로 취합한 2010년도 예산안을 분석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체할 국립 추도시설 건설비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sup>39)</sup> 이에 따라 하토야마 수상이 주장했던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설 문제는 최소한 2011년에 가서야 정책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권 교체 이후 일본정부가 얼마나 대체 추도시설 건설 문제에 적극적일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 온 주변국으로서는 하토야마 수상의 말 바꾸기에 불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계기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가 일본 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거나 외교적 차원에서 무종교적 참배의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일본정부가 국립 추도시설 건설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 않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A급 전범 분사 문제, 정치가들의 참배 문제, 대체 추도시설 건립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논했으며, 그와 함께 이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전망해 보았다. 끝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살펴보고, 본문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일본 정부의 전몰자 추도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은 과거 전쟁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러한 판단 보류에 입각하여 추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유보적인 입장은 일본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는 전쟁 평가를 둘러싼 대립이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이고 등거리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 모두에게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sup>40)</sup> 무엇보다

36) 大原康男, 『いわゆる「A級戦犯」合祀と靖国問題について』, pp. 56-57.

37) 민주정책연구원편, 『일본민주당 정책집』, 민주정책연구원, 2009. p. 6.

38) 중앙일보, 2009. 8. 14.

39) 産経新聞, 2009. 10. 15.

40) 赤澤史朗, 「전몰자 추도와 야스쿠니신사」, pp. 66.

도 무라야마(村山富市) 수상의 담화 이후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는 견해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중립적 성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암묵리에 과거 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0월 19일에 열린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대체에는 현직 수상과 각료가 일제히 참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집권할 때 참배를 자제해 온 자민당의 아소(麻生太郎) 전 수상이 다니가키(谷垣禎一) 현 총재 등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날 중국 정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중국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중국은 일본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며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sup>41)</sup> 일본 정부로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불만 섞인 논평을 받은 것이 못 마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언론은 다니가키가 총재 후보로 출마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숙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총재 당선 후 자신의 말을 뒤엎는 행위를 보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았다.<sup>42)</sup>

이처럼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계기로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 문제가 외교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당분간 민주당 정부는 수상과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함으로써 야스쿠니 문제를 외교적 쟁점화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국립 추도시설 건립 문제로 일본사회에 논쟁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은 쉽사리 벌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정부에게 있어서 국내외 요인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또 다시 봉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A급 전범 분사 문제, 정치가들의 참배 문제, 대체 추도시설 건립 문제 가운데서, 일본정부의 정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수상과 각료들의 참배를 자제시키는 정책이다.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문제 회피적인 정책으로, 비록 야스쿠니 신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외교적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이 어떠한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면 국립 추도시설 건립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야스쿠니 신사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개별 참배자에게는 국립 추도시설이나 야스쿠니 신사 가운데 어느 쪽을 참배할 것인가 자유의사에 맡기면서, 공식적인 참배는 국립 추도시설을 선택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인 정서에도 배려하고 위헌 시비 문제나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분사를 요구하는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

41) 연합뉴스. 2009. 10. 21.

42) Searchina. 2009. 10. 20.

## 참고문헌

- 고야스 노부쿠니.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산해. 2005.
-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 남상구.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논리와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뉴스』. 2007년 8월호.
- 노 다니엘. 『우경화하는 신의 나라』. 랜덤하우스. 2006.
- 다카하시데쓰야.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사. 2005.
- 류교열.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보는 시각」. 동북아역사재단(편). 『역사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민주정책연구원. 『일본민주당 정책집』. 민주정책연구원. 2009.
- 赤澤史朗. 「전몰자 추도와 야스쿠니신사」. 『공익과 인권』. 제3권 2호. 2006. 8.
- 아카자와시로. 『야스쿠니신사』. 소명출판. 2008.
- 이면우. 「야스쿠니신사참배 : 야스쿠니문제의 원인과 해결」. 『세종정책연구』 제4권1호. 2008. 3.
-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 논형. 2008.
- 연합뉴스. 2009. 10. 21; 2009. 11. 01.
- 중앙일보. 2009. 8. 14.
- Searchina. 2009. 10. 20.
- 上坂冬子・小林よしのり. 『日本人よ、もっと悪人になりなさい』. WACBUNKO. 2009.
- 大原康男. 『いわゆる「A級戦犯」合祀と靖国問題について』. モラロジー研究所. 2008.
- 毎日新聞「靖国」取材班. 『靖国戦後秘史：A級戦犯を合祀した男』. 毎日新聞社. 2007.
- PHP研究所編. 『検証・靖国問題とは何か』. PHP研究所. 2002.
- 堀幸雄.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1983.
- 朝日新聞. 2007. 3. 30.
- 産経新聞. 2009. 10. 15.
- 民主党. 「新しい国立追悼施設の設立について」. 2003. 7. 16.
- 靖国神社. 「所謂A級戦犯分祀案に対する靖国神社見解」. 2004. 3. 3.
- 靖国神社 홈페이지 <http://www.yasukuni.or.jp>
-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 SCAPIN-448. 1945. 12. 15.

## 「21세기 일본정부의 야스쿠니 정책」에 대한 토론문

박삼헌 (건국대)

본 논문은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진 현재의 일본에서 앞으로 야스쿠니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상의 공식 참배 문제, A급 전범을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분사(分祀)하는 문제, 야스쿠니 신사에 대체하는 국립 추도시설을 건립하는 문제 등 3가지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논쟁의 초점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문제에 대해 발표자가 정리한 논쟁의 초점과 이에 기초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설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발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야스쿠니 문제는 ‘국내 문제’의 성격보다는 ‘외교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전쟁책임, 식민지 잔재 청산 등과 같은 역사인식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야스쿠니 정책과 관련된 3가지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문제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29일 도쿄 고등법원 2심은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유족 측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즉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서 동원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유족 267명이 "무단으로 합사되어 인격권이나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일본정부에 전몰자 명부통지의 취소 등을 요구한 항소심에 대해 도쿄 고등법원은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유족 측의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靖国神社与日本新军国主义

徐 勇 (北京大)

---

## 目 次

---

- I. 靖国神社是近代军国主义的典型道具
  - II. 战后处置靖国神社法则的制定与破坏
  - III. 战后日本新军国主义的发展
  - IV. 靖国神社势力对于日本及东亚社会政治的挑战与危害
- 

靖国神社问题是中韩日等东北亚国家关系之间的焦点问题之一。对于靖国神社的研究，既需要结合史实辨识其军国主义的历史属性，也需要从现实社会政治生活中考察其与新军国主义势力的关系，及其对于日本社会以及东亚地区所造成的不安定因素，这样的具有关怀现实意义的研究工作，需要学界的共同努力。本文特提出一点新的分析，敬请各位指正。

## I. 靖国神社是近代军国主义的典型道具

靖国神社是近代军国主义的产物。没有近代的日本军国主义的建立及其对于传统宗教的利用，就没有靖国神社。

1868年明治维新之后，明治政府决定以萨，长，土藩藩兵为基础，组建日皇的“御亲兵”。4月6日，以日皇名义发布了施政纲领《五条誓文》和《宸翰》（御笔信），规定日本对外总方针是：“经营天下，安抚汝等亿兆，欲开拓万里波涛，布国威于四方。”<sup>1)2)</sup>1872年以日皇名义发布《征兵诏书》，政府发布《布告》与《征兵告谕》，加快了建立政府军队的步伐。1880年11月山县有朋向日皇呈《邻邦兵备略》，强调扩充对清国与朝鲜的军备，强兵政策优于其它一切施政措施。1888年5月师团制条令颁布后新式师团的编成，取代原有“镇台”制。镇台一词在幕末既有“江户镇台”、“大阪镇台”之用。明治初年随戊辰战争结束，至1872年先后设置东京、大阪、镇西（小仓）、东北（仙台）等镇台，为安内守备型军制。而师团制的组建“是为外征所必需的近代军备的大幅度强化，”着眼点为出兵朝鲜、清国之用。<sup>3)</sup>

---

1) 《大日本外交文書》第1卷第1册，第557页；译文参考信夫清三郎：《日本外交史》上，商务印书馆，1980年，第121页。

2) 大山梓：《山县有朋意见书》，原书房，1966年，第57页。

3) 参考松下芳男《明治军制史论》（上下）、森松俊夫《图说日本陆军史》，户部良一《逆说の军队》，

为推行对外用兵的强势军备政策，1878年设参谋本部直属于天皇，掌管作战、用兵等军令大权，又规定军令长官有关军令事项不经过内阁而直接上奏天皇，确立了“统帅权独立”原则。1889年“钦赐”明治宪法规定天皇总揽统帅权，1900年规定了陆海大臣现役武官专任制。1907年4月4日天皇正式批准了《帝国国防方针》、附件《国防所需兵力》以及《帝国军队用兵纲领》。这些文件规定了“帝国国防以攻势为根本原则”原则，确立了日本进攻型对外战略，也强化了近代日本军国主义体制。至大正时期，军部控制了国家政权，有如尾崎行雄、岛田三郎等人所揭示：“直属天皇的机构中，属于文官者四个，而属于武官者竟达到四十一个”。<sup>4)</sup>所以，从明治时代开始的日本军部的政治支配及其势力的不断强化，所造成的结果，有如亨廷顿指出：“日本拥有世界上‘最为政治化的军队’”。<sup>5)</sup>即完全支配国家政治的军队。

在近代日本军国主义发展的这一进程中，还有从社会、教育及文化精神多方面的强化战争动员体制。最初是为了追悼在戊辰战争中的官军战死者，1869年建立东京招魂社，当年举行第一次祭祀仪式，祭奠幕府末期以来死於内战「官军」方面的3,588名战死者，1879年改称靖国神社。神社采用了传统的神道形式，费用完全由官费开支，成为了国家神道的中心神社。<sup>6)</sup>日本原始宗教具有自然崇拜与多神崇拜的特征，神道由原始宗教演变而来，发展过程中吸收了中国的佛教和儒学，出现了不小的变革，在中世纪与天皇制结合形成国家神道。明治维新后新政府明治政权充分利用神道为新政府服务，于是神道的地位迅速提高，而皇室也利用古典神话传说中，宣传天皇是神的万世一系的子孙。

1868年明治维新后，为确保神道的中心权威地位，明治政府独尊神道，进行“排佛毁释”活动，打压其他宗教。又设神祇官地位在太政官之上。1870年一月颁《大教宣布诏书》，设宣教使：“敬神明，明人伦，使亿兆正其心，效其职，以奉事朝廷”。1871年官职改革，神祇官降为神祇省，1972撤省其祭典事项归宫内省，宣教事项归教部省。1872年废神祇省宣教使等。1875年宣布保护信教自由，但国家神道地位不断强化。近代日本国家神道是在明治政权的支配下，根据内外政治的需要而发展起来的。

作为靖国神社的核心组成部分，在神社东侧于1882年（明治十五年）设置了一座军事博物馆，名为“游就馆”。1910年（明治四十三年）大规模扩建。“游就馆”在战前和战时主要陈列从各国掠夺来的战利品，炫耀皇军的“赫赫战功”。战后多展示战死者的遗物，如神风“特攻队”队员的遗书等，以彰显“英灵”。

按日本学界考察，前近代日本曾接受佛教“怨亲平等”思想影响，形成祭奠敌我双方战死者的习惯。但明治政府在1869年建立神社祭祀的阵亡者，仅限于政府军的阵亡者，而对“贼军”即前幕府军和反政府军的战死者、包括战死的外国人没有受到祭奠。如著名的西乡隆盛等等。所以，一些日本著名的学者梅原猛等指出，靖国神社所谓的传统文化，其实是改变或断绝了原有的祭祀战死者的习惯，背离了日本固有的文化传统。

靖国神社不仅在本土为战争服务，还在殖民地统治方面为日本军国主义发挥了极大作用。日本在

---

等等。

4) (日)信夫清三郎：《日本外交史》下，商务印书馆，1992年，第483页。

5) S.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 - Military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p126

6)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7页。另参见大江志乃夫《靖国神社》等。

殖民地区分别建立了数量众多的神社，据统计在韩国至1937年建368座，在中国东北至1940年建有1370座，在台湾至1941年18座。<sup>7)</sup>另据研究者统计，日本曾在推行“一村一社”规定，“实施强制的神社参拜，使当地陷入‘诸神的侵略’状态”。<sup>8)</sup>上述殖民统治手段的实施，进一步巩固了靖国神社所代表的国家神道，强化了靖国神社地位。

随着近代日本的大量对外用兵，靖国神社始终是对外侵略的精神与文化堡垒。神社把战争中为天皇牺牲的人作为神来祭祀，日皇也参与祭祀。据统计自1929年4月的为举行出兵山东的战死者合祀的临时大祭开始，至1945年4月，日皇昭和所参拜达20次之多，为“近代三名天皇之最”。<sup>9)</sup>直接利用神社为侵华及对于整个亚太地区的侵略战争服务。

在礼拜等精神文化形式之外，神社还在器物展示方面发挥了决定作用。日皇裕仁于1935年颁发的裁可的第三百号敕令，规定了对于靖国神社附属游就馆令的改定规则，其第一条规定：“靖国神社附属游就馆搜集与保存能够认识有关战役、事件等之纪念品、及武器沿革之物件，以供军事上的参考，且为推进国防精神的养成及军事知识的增进而向观众提供观览场合”。其第三条规定“馆长需秉承陆军大臣及海军大臣之监督以掌理馆务”。<sup>10)</sup>所以，靖国神社完全是为战争服务的道具

## II. 战后处置靖国神社法则的制定与破坏

1941年12月7日（星期日）清晨（夏威夷时间），日本海军联合舰队偷袭了美国夏威夷的珍珠港海军基地，同时攻击了美、英、荷在太平洋的属地，太平洋战争爆发。次日，美、英、加、荷、新西兰、自由法国等国向日本宣战。翌年1月1日，由美、英、苏、中四国领衔、26个国家签署的《联合国国家共同宣言》正式发表。签字国“保证运用其军事与经济之全部资源”对抗法西斯“三国同盟”，其第二条规定：签字国“不与敌国缔结单独之停战协定或和约”。<sup>11)</sup>宣言的发表标志着反对日本军国主义战争与纳粹德国的国际统一战线正式形成。

1943年12月1日美英中三国首脑签署的《开罗宣言》正式发表，要求“日本无条件投降”。<sup>12)</sup>1945年4月25日，在旧金山举行了联合国制宪会议，通过了《联合国宪章》等法规。联合国的成立及其宪章的制定，确立了战后国际秩序基本准则，巩固了处置日本等战争责任国的政治基础。7月17日至8月2日美、英、苏三国在柏林郊区的波茨坦举行了战时第三次首脑会议。7月26日，发表了由美国起草、英国赞同并邀请中国参加的《波茨坦公告》，敦促日本“立即无条件投降”，公告第六条表明了处置日本军国主义的基本目标：“欺骗及错误领导日本人民使其妄欲征服世界者之威权及势力，必须永久剔除，盖吾人坚持非将负责之穷兵黩武主义驱出世界，则和平安全及正义

7) [美]Helen Hardacre著《神道与国家》，（台北）金禾出版社，1995年，第126页。

8)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111-112页。

9)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9页。

10) 御署名原本·昭和十年·勅令第三〇〇号·明治四十三年勅令第百九十二号（靖国神社附属游就馆ニ関スル件）改正。另参考：御署名原本·昭和二十年·勅令第五三二号·靖国神社附属游就馆令廃止ノ件。见（日）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アジ歴）：<http://www.jacar.go.jp/>。

11) 世界知识出版社编：《反法西斯战争文献》，1955年，第34页。

12) 1943年12月3日桂林《大公报》，又见《国际条约集》（1934—1944），世界知识出版社，1961年，第407页。

之新秩序势不可能。”<sup>13)</sup> 1945年8月15日日皇裕仁发表广播讲话，宣布接受美军公告无条件投降，同年9月2日，日本外相重光葵和日军参谋总长梅津美治郎等代表日皇和日本政府在投降书上签字。投降书第一条确认：日本接受“中、美、英共同签署的、后来又有苏联参加的1945年7月26日的《波茨坦公告》中的条款。”至此，在第二次世界大战中产生的《中国对日宣战布告》、《开罗宣言》、《波茨坦公告》和日本《无条件投降书》等文件，构成国际社会所共同确订的有碍日本问题的法规体系，是战后处置日本战后政治以及靖国神社等问题的国际法依据。

战后为实施盟军对日政策，1945年12月27日由澳、加、中、法、印、荷、新、菲、苏、英、美等11国组建了远东委员会及盟军管制日本委员会。1947年6月19日，远东委员会制定出《远东委员会对投降后日本之基本政策的决议》，确定对于投降后日本的政策最终目标是：“保证日本不再成为世界和平与安全之威胁”，要求“尽速树立一民主和平之政府”，为达此目标，规定了“日本应完全解除武装与军备。并完全消灭其军部权力与军国主义之影响；严格取缔一切表现军国主义与侵略精神之制度”等等。<sup>14)</sup>该决议坚持了战时制定的对日政策大方向，明确了处置日本军国主义体制问题的基本原则。

但是，上述盟军在战时以及战后初期均一致确认的对日基本原则，在美军的主导下逐步发生了改变。日本政府无条件投降之后，麦克阿瑟奉杜鲁门之命，以盟军最高司令官的身分到达日本实施占领。美国充分利用了单独占领日本的有利态势，推行有利于美国自身利益的占领政策。随着战后世界局势变化，主要的由于中国爆发内战及美苏两国的冷战爆发，美国的对日政策逐步发生转变。杜鲁门总统强调：“日本的重要性是与中国形势的发展结合在一起的”。<sup>15)</sup>为将日本建成美国对抗共产主义的防波堤，美国加速推进对日媾和。麦克阿瑟也提出美国应与日本缔结和约，如果遭到苏联等国反对，美国也可与日本单独媾和。

1950年6月朝鲜战争爆发，日本立即成为美军侵朝的重要基地，促成美国对日政策加速转向。1951年3月23日，美国向远东委员会成员国提交对日和约“临时草案”，8月15日正式公布所谓美英《对日和约草案定本》，随于9月4日在美国旧金山市召开对日媾和会议。参加这次会议的国家包括日本以及苏东国家在内共有52个。会议排斥了海峡两岸的中国政府，也拒绝了苏联代表的强烈批驳，9月8日举行和约签字仪式。除苏联、波兰、捷克斯洛伐克3国拒绝之外，其余48个出席会议的国家代表先后签字。《对日和约》是一个适应于美国利益而违反国际协定、严重侵犯中苏等国主权的和约。1952年4月28日《旧金山和约》、《日美安全条约》和《日美行政协定》同时生效。结束了美国对日本全面军事占领时期，日本取得主权国家地位，美日两国确立了以军事同盟为基础的日、美特殊关系。美国根据和约放宽了对于日本军国主义的体制的改造，大批战争罪犯逃避了责任审判，重新活跃于日本政坛，同时由于美国允诺日本拥有“自卫”权和美军无限期留驻日本，但没有限制日本武力的规定，这使日本获得了实际的重新武装的条件与机会。朝鲜战争的爆发刺激了日本经济的“军需景气”，50、60年代日本经济发展迅速，使一度潜伏的军国主义势力重新活跃，战犯政治家担任国家要职，战后日本新军国主义迅速滋生。

在上述政治环境之中，靖国神社绝地逢生，并迅速活跃于政治舞台。1945年12月15日，盟军总司

13) 世界知识出版社编：《国际条约集（1945-1947）》，1961年版，第77-78页。

14) 《日本问题文件汇编》，世界知识出版社，1955年，第13页。

15) 宋成有、李寒梅等《战后日本外交史》，世界知识出版社，1995年，第71页。

令部发布了《关于废除日本政府对国家神道和神社的保证、支持、保全、监督与公布消息的备忘录》，简称为《神道指令》。1946年元旦，日皇裕仁发《人间宣言》否定自身神格诏书。1947年5月3日战后《日本国宪法》生效，以国家大法的方式确立宗教自由，政教分离（包括国家机构及国家预算）原则。其第20条规定：保障人人均有任何宗教自由，任何宗教团体不得接受国家特权或使用政治威权。…国家及其所属机构，不得从事宗教教育或其他宗教活动。第89条规定：公款及其他国家财产不得供任何宗教组织或团体使用、或为其利益或维持之用，也不得供不在政府控制之下的任何慈善、教育或救济事业之用。

根据战后上述法规与国家根本法的规定，神道为普通“宗教”，政府停止一切对神社特殊的保护、监督，停止所有的财政的支持，废除神官训练机构，撤公立讲学馆大学（训练神官），私立国学院大学继续存在；禁止学校宣传神道讲义，撤销学校奉祀的天皇像及教育敕语；还有从教科书中去掉一切与神道有关的记述，公务员及一般国民都有不参加神道活动的自由，废除以公职人员身份参拜靖国神社的要求等等。此后，靖国神社如果再以国家的祭祀场所名义出现，就会违背“政教分离”的原则，就应该遭到取缔。

此外，联合国占领军总司令部（GHQ）曾将与各地的护国神社一样，同视之为“军国主义的神社”，并准备将其废除。1950年5月，规定全国的护国神社要削除“护国”之名，祭祀对象不只是战没者，而需拓展到公共利益范围的亡人，以消除其军国主义的色彩。<sup>16)</sup>但在东西冷战对立格局下，靖国神社最后还是逃脱了被废除的命运。

靖国神社在所谓宗教法人的外衣之下得以存续，在战后特别是在美国的单方面对日媾和和约签字之后，获得了迅速的恢复与发展。至1951年10月18日的所谓“大祭”，吉田茂首相参拜神社，两天内参拜者人数高达35万。日本学者指出：“51年10月的例大祭和吉田茂首相的参拜，宣告了神社的‘复活’”。<sup>17)</sup>1952年5月，由政府主持、日皇和皇后都参加了在新宿御苑举行了全国性的追悼战死者的仪式，10日日皇和皇后又参拜了靖国神社。同时，靖国神社还得到了战后首次获得的3万坪土地。在这一系列活动中，日本社会对于当年侵略战争的评价开始出现了微妙的变化，所谓“对于殉国的英灵必须进行彰显”等认识开始流行，患有主张要把靖国神社作为彰显英灵的神社。

战后的右翼复辟势力还提出了旨在恢复神社国有化的主张。1955年后，日本政界出现了试图将靖国神社“国营化”的动向，自民党五次提出《靖国神社法案》，要求改为“特殊法人”，置于首相的直接监督下，由国家拨出专款支付靖国神社的祭祀费用。1956年1月25日日本遗族会提出了要求国家负担祭祀费用的决议。至1969年正是靖国神社创建一百周年，围绕靖国神社“国营化”的争论，从社会到国会始终十分激烈。在推动靖国神社“国营化”的过程中，自民党提出的《靖国神社法案》对日本社会的影响最大。但是，这一法案6次向国会提出，6次被否决，说明右翼主张在社会上尚有极大阻力。

战后靖国神社利用募集到的越来越多的经费，每年举办祭祀活动。政府官员进行参拜，按内阁法制局就区分私人参拜与正式参拜作出了解释，明确提出了作为“私人参拜”的四条原则，即：1、在参拜前表明系私人立场；2、不乘坐公用车辆前往靖国神社；3、不在登记簿上书写在“公”的机构中的职务名称；4、不带随员。内阁法制局认为，符合上述四项原则的就属于“私人

16)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17-18页。

17) 田中伸尚：《靖国の战后史》，岩波，第28页。

参拜”，而政府官员“私人参拜”不违法的，而“正式参拜”不容置疑是违反宪法第20条的。

1953年8月，日本政府修订《恩给法》，恢复了被停止的军人恩给（经济补贴）。同年又修订遗族援护法，对于因战争罪行而致刑死和狱死者都“承认为公务死，于是战犯遗族与普通战没者遗族一样，都得到了国家的经济援助。这实际是为战犯被合祀到靖国神社开辟了道路”。<sup>18)</sup>作为神社的祭神，也有越来越多的战死者被合祀。值得注意的是，在战后的审判中被确定为B、C级战犯而死亡的那些人，也作为祭神被登记到灵玺簿上得到合祀。

战后靖国神社合祀的对象，是由厚生省和都道府县的协助制成“祭神名票”交给靖国神社入祀。据统计战败之前的45年4月，被祭祀人数为375 000人，战后1956年秋经由厚生省通知新入祀名单112 609名，其后人数急剧增加，至2001年累计达2 466 364名。<sup>19)</sup>这些“选灵”除去在日本国内战争的战死者（14, 722人）外，绝大多数都是在对外战争、特别是对中国的侵略战争和太平洋战争中一般的、以及被判决为战犯的战死者。

神社还设置了军犬、信鸽、以及军马的悼念偶像，毫无疑问这些自然界的生命都被征用于军国主义战争。按如华北地区作战，按日军战史记载，晋东方向日军人马死伤甚多，致使“在装甲车上也可以长时间感受到漂浮的尸臭，可谓十里腥风”，军部参谋井本解释，尸臭“主要是我军的军马尸体”所散布。<sup>20)</sup>

关于A级战犯被合祀到靖国神社的问题，靖国神社公开否定首先应该认定他们的战争责任，公开宣传战犯是为国家尽忠的人，是昭和的殉难者。在合祀到靖国神社之前，武藤章早已经被合祀入熊本的护国神社，松冈洋右被合祀在山口的护国神社。进而将他们专门合祀到靖国神社，显然是对当年审判战犯的抗议，完全违背了日本政府曾经表示过的对东京审判的认可。厚生省早在1966年就将14名甲级战犯的姓名填写到祭神名单，不过神社方面觉得时机尚早，不能操之过急暂压下来，至12年之后的1978年入祀。据研究者考订，合祀的甲级战犯广田弘毅前首相既不是军人，也不是军属，显然有别于靖国神社的合祀条件。由此可见，甲级战犯合祀的问题主要责任在日本政府，厚生省是主办机构，直接地违反了战后宪法规定的政教分离原则。1985年首相中曾根康弘参拜靖国神社，小泉在其任内连续参拜。参拜的两个要害：一是战争、战犯因素；二是违背政教分离原则。

从上述可知，战后所确立的处置靖国神社的政教分离的法制规则、及其所包含的和平原则，虽然法规尚存，实际上已经遭受巨大冲击，名存实亡。

---

18) 田中伸尚：《靖国之战后史》，岩波，第38页。

19) 田中伸尚：《靖国之战后史》，岩波，第68页。

20) [日]井本熊男：《从作战日志看中国事变》，芙蓉书房，昭和53年，第140页

### III. 战后日本新军国主义的发展

日本战前是典型的法西斯军国主义国家，基础深厚而牢固，而战后的民主改革由于诸多因素不够彻底，这是战后日本新军国主义产生的重要条件。第二次世界大战结束后，以1947年邱吉尔的“铁幕演说”为标志，揭开了世界冷战序幕。自此，为了使战败后的日本成为西方社会的一员，美国较大幅度地修改对日占领政策，并为恢复和利用日本的力量而放松了对其军国主义势力的深入追究。

在战犯审理上，东京审判首批判处甲级战犯死刑7人，其后据日本学者统计，盟军在远东太平洋地区50余个法庭起诉日本战犯5000余人。<sup>21)</sup>50年代中华人民共和国在沈阳、太原审判时期所拘押战犯1108人大部释放，起诉45人，死刑一人也没有。1949年12月，苏联伯力审判曾判处山田乙三战犯等12人有罪。与此相比较，纽伦堡法庭审判德国战犯首批处死12人，其后至80年代中期，按日本学者统计资料，盟军方面在欧洲各地审判法西斯战犯共达8万余人。<sup>22)</sup>

对于法西斯社会力量的追究方面比较，美国在日本社会各界“整肃”法西斯骨干分子约20万人，而德国美占区登记人口1318.03万人，被起诉者344.18万人，占总数26.2%，正式判决达94.5万人，占人口总数7.2%。<sup>23)</sup>苏东各国对社会各界纳粹战争嫌疑犯的追究也是极其严厉的。所以相比较而言，日本各类战犯被起诉人数少，量刑轻，社会追究面小，而且追查时间短。欧洲各国(含东德、西德)政府对纳粹战犯的追究至今仍在进行，而对日本战犯的追查自50年代中期之后便大体停止了。日本一直没有参加联合国1978年关于追究战争犯罪没有时效的限制的决议。

日本战犯恢复政治自由极快，战犯经历不但受阻碍，而且往往成为受欢迎的政治资本。

战犯重光葵的沉浮极富有启示意义，重光葵参与了整个15年侵华战争，战后作为首批28名甲级战犯受审，但量刑极轻，只判处7年，1950年假释出狱，再度积极参与社会政治活动，1952年担任改进党总裁，1954年出任鸠山内阁外务大臣，其后最高职务任过内阁副首相，1957年病死。其他各类具有战犯经历或战争嫌疑犯身份而担任社会要职者亦不在少数，日本学者称他们为“战犯政治家。”<sup>24)</sup>“战犯政治家”的活跃，不但直接决定了日本的内外政策，还造成了一种“战犯不臭”、“战犯吃香”的极恶劣的社会影响。

日本战犯在战后审判中被追查得不彻底，同战后中国和整个远东地区时势发展也有密切关系。抗战胜利不久，中国便爆发全面内战，直到1949年底国民党政权退出大陆。在这近5年时间内，受日本侵略战争之害最深的中国，无暇顾及对日本战争责任的追究，而由美国完全包办了对日战后管制。50年代朝鲜战争爆发，美国为自身需要而扶植日本东山再起，直接保护了日本军国主义。进入50年代后，统一了中国大陆地区的中华人民共和国政府被美、英等西方各国排斥在国际事务之外，而孤守台湾一隅的国民党“政府”没有力量，只是仰美国鼻息而求生存。在这种形势下，中国始终未能对日本的战后改造作出直接的贡献，也未能对日本军国主义的战争罪责给予深入追击，致使一部分日本军国主义势力极容易地潜伏生存下来。

21) (日本)历史科学协议会编《历史评论》1988年8月号，第71页。

22) 日本历史研究会编《历史学研究》、1989年11月号，第38页。

23) 日本历史研究会编《历史学研究》，1989年11月号，第35页。

24) 日本历史研究会编《历史学研究》，1993年12月号，第6页。

日本战后军事力量的长足发展，其本身是社会政治诸问题的产物，同时也刺激了新军国主义势力的膨胀。日本战后宪法第九条明文规定“不保持陆海空军及其他战争力量，不承认国家的交战权。”但实际上这一规定已经“空心化”。在自卫队的名义之下，日本建立了陆海空军事力量。自90年代中期开始，日本军费的绝对数字已经长期位居世界第二。日本虽然目前不拥有核武器，但日本已经拥有大量的原材料的储备，在运输工具方面日本已研制H2火箭成功，它可以将卫星送上太空轨道，当然也可能在某种时候将核弹头投掷到地球上的任何地点。如果没有战后宪法及国际社会的诸多制约，日本随时可以跻身于核大国之列。

从军队规模看，现役人数并不多，约28万左右，但军官与士官比例竟占69%以上，一旦实施动员，便可迅速扩张为上百万大军。这支名为自卫队的武装部队，组织精悍，装备先进。其中海军力量在80年代便拥有世界第一的扫雷能力、世界第二的反潜能力(次于美国)，世界第三的防空能力(次于美、苏)，作战舰艇吨位居世界第四。各国舆论界认为日本海军综合力量是东亚地区第一海军大国。在空军方面也拥有“世界第一流空军。”

关键是日本在战略规划领域亦出现逼人之势，在战后初期和50年代日本军事力量尚未发展之前，日本还谈不上明确而公开的战略构想。其后随着陆海空军事力量的发展完善，形成了一整套被称为“专守防卫”的独具特色的防卫战略。到80年代，日本的专守防卫战略实际上已经被废弃。日美双方从保卫者与被保卫者的关系逐渐演变为平等合作各有分工的战略伙伴关系。日本的防御界限和范围，最初只要求“本土防守”，继而要求歼敌于“水际滩头”，进而再要求“海上击破”，并且应作“前方早期处置”，甚至应先发制人，对敌方集结基地实施“先期攻击”或“抵近攻击”。日本80年代“早期击破”战略思想已经是一种“最小限度的威慑战略。”<sup>25)</sup>而到了新世纪，通过确立“有事法制”等体制，进一步巩固了“先期攻击”或“抵近攻击”等战略原则。这种带有“威慑”性质的战略思想，不能不使人回忆起，19世纪末山县有朋关于“主权线、利益线”的要求，还有1907年《帝国国防方针》所规定的“帝国国防以攻势为根本原则”。

日本军事力量的长足发展及其战略方针的强化，已被越来越多地使用于国际事务之中。自1992年6月制定关于“同联合国维持和平活动合作法案”，其后向亚洲、非洲各地大量派出陆空海武装部队进行所谓“维和”。如果说上述行动中，日本打出的旗号是“维持和平”与“国际合作”的话，在另一些行动中，则是以赤裸裸的武力处置国际纠纷并维持自身的权益。日本在黄海公然击沉所谓身份不明的可疑船，钓鱼岛问题亦为突出之例，日本竟出动军舰，鸣险示警，以武力加以驱逐中国(含台湾地区)渔船，并导致香港保钓人士陈毓祥罹难。其行动同日本宪法第九条规定的“永远放弃以国家权利发动战争、武力威胁或使用武力作为解决国际争端的手段”原则是完全悖离的。日本具有武装成为超级军事大国的巨大实力，并已初步完成了有事立法等超越和平宪法运用武力的法权准备。日本借口反恐和北朝鲜威胁，大力推行强军战略，向印度洋并向伊拉克等地出兵，这是日本走向军事大国的标志性举措。

日本军事力量的发展，毫无疑问已经勾划出了一个新军国主义的军事大国态势。所谓新军国主义，乃是存在于当前日本的一种与战后改革所确立的和平民主原则相对抗的势力；它公开、直接为战前的军国主义翻案，在社会、政治、军事诸多领域拥有不可低估的实际力量。而靖国神社问题，正是战后日本兴军国主义的集中表现。日本的战后道路与原西德走过的道路，即经过认真反省

25) 潘俊峰等《日本军事思想研究》，军事科学出版社，1992年版，第456页。

而得到国际社会认同的办法不同，日本对历史“缺少反省”，同时在现实的政治、军事领域坚持强硬的右倾化立场以进行“政治总决算”，力图跻身于世界政治军事大国之列。这不能不招致亚洲各国的批评。

过去的日本军国主义造成了东亚历史上前所未有的战争惨剧，留下各民族间永远的记忆伤痕；而日本新军国主义的滋生，炮制出了靖国神社等严重的政治外交问题，正是战后日本兴军国主义的集中表现。东亚地区现今所出现的政治困惑，也使日本国内的民主、进步力量面临严峻挑战，处于艰难境地。

#### IV. 靖国神社势力对于日本及东亚社会政治的挑战与危害

毫无疑问，靖国神社作为军国主义的历史产物应该加以废除，战后盟军曾经着手处置神社。1945年9月11日，日皇裕仁签署公布的“敕令第五百三十二号”宣布：“朕关于废止靖国神社附属游就馆令之件，裁可并于此公布之”。<sup>26)</sup>不过由于前述诸多因素，这一工作未能继续下去。

废除靖国神社应该是日本和平民众的长远利益所在。这也是20世纪日本的重要政治家石桥湛山的重大主张。石桥也是战争遗族，他的次子作为海军中尉1944年在太平洋上的一个小岛上战死。他在战后的1945年10月13日为《东洋经济新报》撰写的社论指出：“大东亚战争是给日本人带来了世世代代抹不去的耻辱的战争。把国家推到了几乎崩溃的边缘。使日本在中日甲午战争及日俄战争中得到的成果一扫而空。尽管很遗憾，但是我们已经很难将那些在这一战争中献出了生命的日本人再作为‘靖国之神’来看待了”。<sup>27)</sup>石桥主张废止靖国神社，“建立真正的放弃武装的和平的日本，同时为世界作出贡献”。石桥的主张，出自于日本长远利益的深层思考，因为“就这样让靖国神社继续存续下去的话，可以说是镌刻让后世国民‘屈辱和怨恨的纪念’，这不会是国家未来所‘完全欢迎’的”。<sup>28)</sup>

但是战后和平势力的主张未能贯彻，神社被保存并迅速发展。但是靖国神社的管理者宣布：从日清、日俄战争，再从第一次世界大战到“大东亚战争”，“都是为了近代国家的建立，为了我国的自存自卫，即令从世界史范围看，也都是为了达成与皮肤颜色没有关系的自由而平等的世界、所不可避免的战争”。并强调神社的两大立场：“游就馆之使命、即基本着眼点就在于：彰显英灵之武勋与遗德，澄清英灵所迈步之时代的近代史真谛”。<sup>29)</sup>

那么神社要彰显什么真谛呢？进入游就馆陈列馆大厅就能看到的零式战机，这种战斗机首先使用于轰炸当时中国的临时首都重庆，从这种战机提倡出来的“零战精神”就是日本侵略精神。神社还展示日本在侵略东南亚时所使用的火车头，还有日本的军马和军犬等。靖国神社里有很多树木，有一些是战前军人栽种的，把日军的作战单位赫然作为树木的命名。靖国神社里的樱花树也被确定为东京地区樱花节的开端标志。

26) 御署名原本·昭和二十年·勅令第五三二号·靖国神社附属游就馆令废止ノ件。见(日)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アジ歴)：<http://www.jacar.go.jp/>。

27)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4页。

28)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4-5页。

29) 靖国神社编：《靖国神社游就馆图录》，平成十一年，序第2页。

在欧洲街头，纳粹党卫军不可能重现更不可能列队游走，但在东京、在靖国神社，在每年的8·15等重大节日，有旧军人也有战后出生的右翼，身着战时旧军服，列队招摇过市。

著名学者梅原猛先生向世人提出了如下警示：“我认为首相参拜靖国无异于想要使大教院的亡灵复活。作为一国的首相，至少应该具有倾听有识之士的意见、反省自身偏见的理性。无视权威宪法学者和宗教学者的意见，也不考虑外交影响，现在甚至拒绝司法机构的裁决而继续参拜靖国神社，总有一天会招致理性的复仇。令人担忧，小泉首相是不是在重蹈发动冠冕堂皇的鲁莽战争、即使败局已定也不住手、最后使得日本生灵涂炭的东条（英机）首相的覆辙”。<sup>30)</sup>

日本读卖新闻社社长渡边恒雄指出，靖国神社所代表的神道不仅具有反文化的性质，是对传统宗教的背叛，也是作为战争的神社存在的，而不是宗教的标志。即使是日本的神风特工队也是被强迫的，那是对日本人民的战争摧残折磨。在日本靖国神社的旁边搞个怪异的游就馆，鼓吹日本零式战机有着世界上最猖狂的无差别轰炸，否定日本的侵略历史，都是极其有害的。渡边还指出：“我迁居靖国神社近旁，常常到靖国神社散步。但是至今为止都没有去参拜过。靖国神社正殿的旁边，就是怪异的游就馆。在这座礼赞日本军国主义的设施中，来参观的孩子们说“日本在此前的战争中胜利了”。靖国神社经营的，就是一座陈列煽动、赞扬军国主义的展示品的博物馆”。<sup>31)</sup>

在靖国神社陈列了一个所谓的台湾人请愿书——台湾“原国民”郑春和的所谓请愿书，要求以殖民地时期的日本人身份回归日本治下，这充分表明日本右翼要求重新占领台湾的新军国主义的思想。这些材料被印成小册子，据估计从1993年到现在至少发行了几百万本，产生了非常恶劣的影响。近年日本搞了有事法案，台湾海峡被纳入其中。所以，靖国神社不只是历史问题，是现实问题，也不是一个神社问题，而是涉及到日本整个政治动向等诸多方面的问题。

需要指出，靖国神社并不是孤立存在的，在战后新军国主义的发展过程中，日本许多地方都有类似的战争祭奠物。如在所谓日皇故乡宫崎，有“皇军发祥之地”纪念碑，还有始建于1940年而1964年恢复重建的宫崎“八弘一字”塔。在广岛县的江田岛，有一座海上自卫队干部候补生学校，学校继续推进战时军国主义精神教育，陈列了特殊潜艇使用的气罐制成的花瓶，悬挂了东乡平八郎的手迹：“皇国兴废在此一战，各员一层奋励努力”。

美国的学者指出：“这军国主义气息甚至在世纪之末还继续保持着，特别是靖国神社和其县级分支神社”。现今一些自卫队军人也拟被神化供奉，“自卫队员神话案更为资助靖国神社打下基础。似乎一待国际环境改善，在不致引起严重批评时，日本政府便会立即发动与神道的旧有关系”。<sup>32)</sup>

靖国神社是近代日本军国主义的产物，至今仍继续供奉战犯，接受右翼政治家和右翼势力的参拜，公开歪曲历史，歌颂近代以来的对外侵略战争及其好战黩武主义。靖国神社又是日本新军国主义新的表现符号，在多方面继续推动日本新军国主义势力的不断发展，是威胁东亚和平、破坏中日关系的右翼势力的大本营。总之，按照靖国神社势力的发展方向，毫无疑问将把日本引入歧途，这是东亚各国、也是日本国民都应该继续加以警惕的。

30) 梅原猛：〈招致理性复仇的靖国参拜〉，见《朝日新闻》2004年4月20日夕刊。

31) [日]《读卖新闻》集团董事长兼主笔渡边恒雄与《朝日新闻》社论主笔若宫啓文对谈录，见[日]朝日新闻社《論座》2006年2月号，第28页。

32) [美]Helen Hardacre著《神道与国家》，（台北）金禾出版社，1995年，第210-211页。

## 参考

松下芳男《明治军制史论》（上下）、森松俊夫《图说日本陆军史》，户部良一《逆说の军队》，等等。

（日）信夫清三郎：《日本外交史》下，商务印书馆，1992年，第483页。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7页。另参见大江志乃夫《靖国神社》等。

[美]Helen Hardacre著《神道与国家》，（台北）金禾出版社，1995年，第126页。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111-112页。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9页。

御署名原本・昭和十年・勅令第三〇〇号・明治四十三年勅令第九十二号（靖国神社附属遊就館ニ関スル件）改正。另参考：御署名原本・昭和二十年・勅令第五三二号・靖国神社附属遊就館令廃止ノ件。见（日）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アジ歴）：<http://www.jacar.go.jp/>。

世界知识出版社编：《反法西斯战争文献》，1955年，第34页。

1943年12月3日桂林《大公报》，又见《国际条约集》（1934-1944），世界知识出版社，1961年，第407页。

世界知识出版社编：《国际条约集（1945-1947）》，1961年版，第77-78页。

《日本问题文件汇编》，世界知识出版社，1955年，第13页。

宋成有、李寒梅等《战后日本外交史》，世界知识出版社，1995年，第71页。

田中伸尚：《靖国の战后史》，岩波，第38页。

田中伸尚：《靖国の战后史》，岩波，第68页。

[日]井本熊男：《从作战日志看中国事变》，芙蓉书房，昭和53年，第140页

（日本）历史科学协议会编《历史评论》1988年8月号，第71页。

日本历史研究会编《历史学研究》、1989年11月号，第38页。

日本历史研究会编《历史学研究》，1989年11月号，第35页。

日本历史研究会编《历史学研究》，1993年12月号，第6页。

御署名原本・昭和二十年・勅令第五三二号・靖国神社附属遊就館令廃止ノ件。见（日）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アジ歴）：<http://www.jacar.go.jp/>。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4页。

田中伸尚：《靖国の戦後史》，岩波新書，第4-5页。

靖国神社编：《靖国神社游就馆图录》，平成十一年，序第2页。

梅原猛：『招致理性复仇的靖国参拜>，见《朝日新闻》2004年4月20日夕刊。

[日]《读卖新闻》集团会长兼主笔渡边恒雄与《朝日新闻》社论主笔若宫啓文对谈录，见[日]朝日新聞社《論座》2006年2月号，第28页。

[美]Helen Hardacre著《神道与国家》，（台北）金禾出版社，1995年，第210-211页。

# 「靖國神社와 日本新軍國主義」에 대한 토론문

강현사 (성신여대)

본고는 靖國神社가 지니고 있는 군국주의 속성을 역사적 사실로서 밝혀내고, 그것이 신군국주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곧, 야스쿠니신사가 메이지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신도로 변하면서, 군국주의를 위해 지대한 역할을 발휘하였음을 식민지에서의 신사 건립, 천황의 참배, 유슈칸의 사례로 입증하였다.

아울러 냉전체제아래서 미국 전략이 변하여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으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연합국의 조치가 점차 변질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전범들이 쇼와(昭和)의 순난자(殉難者)로 미화되고,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른 미일안보체제의 변화로 인해 신군국주의의 부활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발표자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무토 아키라(武藤章)는 일찍이 구마모토(熊本)의 호국神社에 합사하고, 마츠오카 요우스케(松岡洋右)는 야마구치(山口)의 호국神社에 합사한 이후에 다시 야스쿠니 신사로 합사를 하였는데, 한번 합사를 한 이후에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미 합사된 식민지 희생자(조선인 대만인)도 분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2. 일본정부는 戰後 야스쿠니 합사과정에서 후생노동성의 명부 제공을 神社측의 요청에 따른 단순한 행정협조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범의 합사에 따른 책임을 일본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3.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야스쿠니 神社를 폐지하는 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일본 민중들의 장구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를 종교시설이나 일반 현충시설과 차이나는 軍國主義 神社로 보는 한국과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10%만이 이 같은 입장이고, 2/3는 “전사자를 추도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역사인식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발표자의 의견은?

4.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제를 정점으로 식민주의와 침략주의를 미화하는 일본 우익의 정신적 총본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야스쿠니 신사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격화된 천황제 부활, 헌법 개정의 움직임, 군사대국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 殉国と殉教 - 犠牲の宗教への問い

高橋哲哉（東京大）

---

## 目 次

---

- I. 英霊の血とキリストの血
  - II. キリスト教の戦争と犠牲死
  - III. 悲劇的英雄と信仰の騎士
  - IV. キリスト教の「犠牲」を問う
- 

## I. 英霊の血とキリストの血

考察の出発点として、アジア太平洋戦争末期に日本語で書かれた一つの文章を見たい。それは日本基督教団が発行していた新聞『日本基督教新報』に1944年4月11日付で掲載された「靖国の英霊」という論説文である。

日本基督教団は現在でも日本のプロテスタント系教団の中でも最大の教団として存続しているが、それが創設されたのは1940年であった。日本政府は1939年、キリスト教や仏教など当時の日本の宗教をすべて国家の統制下に置くために宗教団体法を制定したが、日本基督教団はこの法律のもとでプロテスタントの主要宗派が国家に協力するために統一されてできた教団であった。その初代統理となった富田満は、1938年に朝鮮のキリスト者朱基徹牧師らに神社参拝を強要した人物であり、また日本基督教団は1944年、「日本基督教団より大東亜共栄圏に在る基督教徒に送る書翰」なるもの発出し、「全世界をまことに指導し救済しうるものは、世界に冠絶せる万邦無比なるわが日本の国体であるという事実を信仰によって判断」することをアジアのキリスト教徒に求めている。

さて、「靖国の英霊」には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

南海の涯に、大陸の奥に大君に命を捧げ奉つた忠誠勇武の英霊二万五千を迎へ祀る招魂の儀に、帝都は今厳粛の気をみなぎらしている。

満開の桜はあたかも雄々しく護国の華と散つた大和男の子の忠魂を讃えるが如く、はらはらと散り行くのである。宣長のあの名歌が今日この頃ほど実感として浮びあがる時はない。昨年の大祭にも記者は宣長の歌に触れたが今年は一とお実感胸に迫る気がするのである。

戦はいよいよ深酷化し、決戦につぐ決戦ときびしい戦いは展開される今日、国民の生活は

捧げられた血によつて護られているのである。感激何によつて応うべきかを知らない。

この血の尊さは英霊を神と祀る日本の伝統のみがよく知るところである。国に捧げられた血を尊しとする精神は他国にもあるであろう。記念碑を造り、道行く人は帽をとつて敬虔に礼を捧げるであろう。しかしこの血に最高の意義を見、祭神と讃える精神は、我が日本において他にはない。

これは国民のうちに、こうした血に高く深い意味を見出し得る国民性の優秀性を示していると同時に、否むしろ尊い血を捧ぐる人々の尊い心ばえが、戦場において他国人の知らぬ高さにもまで昂揚して、国民をして跪拜せしめずんば止まぬ尊さを現しているからである。ひとたび大君のお召しにあつかった瞬間、この武人は啓示としてかしくみ御うけ申上げる。この時からこの武人には、国に捧げつくす清く尊い血が生きる。武人の脈管に流るる血には新しい意義が生ずる。勿論この心は日本国民にすべて存在する伝統である。しかし特にお召しにあつかった瞬間は、これを鮮やかに自覚した新しき時であり、宗教的再生にも比すべきものである。記者は幾度かこういう不思議と思わるほど荘厳にして力にみちた新しき厳かな自覚の武人の前に、襟をただし頭をたれ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態度から、この尊い殉国の血を靖国の英霊として祀る心がおこるのは当然である。かく護国の英霊には深酷な意義がある。この祭の日が国民的大祭として国民みな厳粛な気にみちるのも当然である。尊い血の意義の深酷な意義の自覚こそ、我国の誇るべき一つであらう。[引用終わり]

1944年の春、靖国神社で行われた臨時大祭に際しての文章である。このときの臨時大祭では、南太平洋や中国で日本の兵士として天皇に命を捧げた戦死者二万五千人を新たに合祀する招魂祭が挙行された。記者によれば、日本国民の生活はこれら英霊たちの「捧げられた血」によつて成り立っている。「血」はここでは「犠牲」(sacrifice)を象徴しているが、単に「捧げられた血」が尊いというだけでなく、その「血」に「最高の意義」を見てそれを「神様と讃える」のが靖国神社だという。すなわち靖国とはまさに「犠牲の宗教」なのである。

ここまでの記述の中に、キリスト教を想わせるものは何もない。まるでプロテスタント信者によつてではなく神道家によつて書かれたものであるかのように、この文章は靖国の論理をただ率直に表明しているだけである。

ところが、記事はこう続く。

基督教は血の意義を最も深く自覚した宗教である。殆ど唯一と云つてもいいかも知れない。即ちキリストの血こそ救済の根元であるからである。ヘブル書の記者は『永遠の御霊により瑕なくして己を神に捧げ給ひしキリストの血は我らの良心を死にたる行為より潔めて活ける神に仕えしめざらんや』(ヘブル書九、十四)と云ひ、血の意義を顕揚している。基督者はこの血の尊さに醒めさせられて新しくされたのであることはあらためて申すまでもない。

血の意義の深さを伝統として有した初代日本基督者が、キリストの血の意義に初めて触れた時心躍つたのは当然である。キリストの血に潔められた日本基督者が、護国の英霊の血に深く

心打たれるのは血の精神的意義に共通なものがあるからである。血の意義の深い自覚に共通なものがしみ湛え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

其故、今、靖國の大祭を迎え、我等日本基督者の血は、厳肅な感激と殉国の良心にたぎり立つのを禁じ得ない。自制を困難とする程の感激がほとぼしり出るのを禁じえない。

路上屢々遺族章をつけた方々とゆきかい、見知らぬ人々ではあるが、思わず脱帽せずにはいられない。

靖國の英霊を案じる道は敵撃滅の一途あるのみである。一毫のすきなき誠忠の思いもて、与えられた立場から御奉公してゆかねばならない。我々のたぎり立つ血のはげ道は、英霊の血と深く相通じている。[引用終わり]

これは無惨というほかはない文章である。当時の日本のキリスト教徒が、単に日本人として国家の戦争に協力したというだけでなく、彼らの信仰そのものが解体し、靖國信仰、国家神道と一体化していたことはここに明白である。何千、何万という戦没兵士を次々に「神」にしていく靖國神社と、三位一体の唯一の神を信じるキリスト教が、なぜかくも易々と一体化されてしまうのであろうか。

ここで両者を結びつけているのは「犠牲」の論理であり、「犠牲」の象徴としての「血」の論理である。キリスト教はイエスが十字架上で処刑され、血の犠牲となることによって人類を救済したのであるから、「血」すなわち「犠牲」の意義を最も深く自覚した宗教である。そこから、日本人が「血」の「犠牲」の意義を最高度に自覚した証拠である靖國の英霊の「血」とキリストの「血」が重ねあわされる。日本のキリスト教において、人類の救済のために流されたキリストの血の犠牲の意義と、日本と世界の救済のために流される靖國の英霊の血の意義が一つになる、というわけである。

実際、1943年9月10日付の『日本基督教新報』には、「殉国即殉教」という論説文が掲載されていた。

もし殉教の意味を、聖書本来の意味に解すれば、それは現在この大戦の真只中において、切実に求められているものと言わねばならない。聖書に従えば殉教とは、生命を賭して福音を立証することである。それはただ宗教闘争に死することばかりを意味しない。生命を賭して福音を立証することであれば、それはみな殉教である。今は国民総武装の時である。我々一億国民は、皆悠久の大義に生き、私利私欲を捨てて、ひたすら国難に殉ずることを求められている。しかるにこの国難に殉ずるところにこそ、福音への立証があり、殉教がある。これは殉国の精神を要する時である。全国民をして、この精神にみたましめよ。[引用終わり]

「殉国」即「殉教」。 「殉教」即「殉国」。 国家の戦争で戦死して国に殉じることが、ただちにキリスト教者としての殉教になる。国家のための死と神のための死が犠牲の論理の共通性によって一体化さ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

## Ⅱ. キリスト教の戦争と犠牲死

ところで、キリスト教がこのように靖国化してしまったのは、日本の特殊事情によるものであろうか？ 決してそうではあるまい。西欧において、かつて十字軍の時代に、聖王ルイ九世の軍に従って異教徒と戦い、戦死した兵士は「殉教者」として遇された。キリスト教徒にとって戦争で戦って生命を失うことが「殉教」の名に値するという思想は、決して珍しいものではない。

著名な中世史家エルンスト・カントロヴィッチは、「西欧中世思想における祖国のために死ぬこと」という論文（1951年）で、次のような例を紹介している。一九一四年に第一次世界大戦が勃発し、ドイツがベルギーを侵略し占領すると、ベルギー・カトリックの首座大司教だったメルシエ枢機卿は、「祖国のために死ぬ兵士は、殉教者であるとみなしていいかどうか？」という質問を受けた。ベルギーの愛国者であった枢機卿はこの質問に、クリスマス当日の12月25日、次のように答えた。

だれか勇敢な者が、祖国の名誉を守り正義の侵害に復讐するために、意識的に自分の生命を犠牲にする場合、彼が永遠の生命にあずか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あなたがたが私の考えをたずねるのであれば、私はためらわずに次のように答える。すなわちキリストは疑いなく、その軍事的な武勇をたたえるであろうし、またその兵士には、キリスト教徒らしく甘受されたその死によって、魂の救済が保証されると。[引用終わり]

「意識的に自分の生命を犠牲にする」と訳した文章は、原語では *consciously gives his life to defend the honor of his country*（祖国の名誉を守るために自分の生命を意識的に与える）となっている。これは、祖国の危機に際して、権威あるカトリック最高位の枢機卿が、「祖国のために死ぬこと」（*pro patria mori*）すなわち「殉国」は、「信仰（神）のために死ぬこと」すなわち「殉教」と一つであることを認めた、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この立場が、『日本基督教新報』の「殉国即殉教」の立場と同じ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

メルシエ枢機卿のような考え方は、カントロヴィッチによれば、中世にまで遡って跡付けることができる。たとえばイングランド王アーサーの戦争に際してカーリーアン司教の聖ドゥブリキウスが行なった演説の一説。

汝らの祖国のために戦え。たとえ死が汝らに降り懸かろうと、祖国のための死さえも甘受せよ。実に、死そのものが勝利であり、魂の救済手段である。なぜならば、誰であれ同胞のために死を被る者は、自らを生ける犠牲として神に捧げる者であり、同胞のために自ら命を捨てたもうたキリストに明らかに倣う者だからである。[「ヨハネの第一の手紙」3章16節]。それゆえ、もし汝のなかの誰かがこの戦いで死を被るときは、その死を、彼が犯したすべての罪の償いと、赦免としよう。[引用終わり]

ここでは祖国のための犠牲死すなわち殉国が、『日本基督教新報』「靖国の英霊」と同じように、十字架上で処刑されたキリストの犠牲死になぞらえられている。祖国のために死ぬ者はキリ

ストの犠牲死にならうのであり、それによって罪が償われ、赦免され、救いが得られるのである。

周知のように、パウロは教会をイエス・キリストの身体にたとえ、イエス・キリスト自身は教会の頭だとした。ここからローマ・カトリック教会をキリストの「神秘体」(corpus mysticum)になぞらえる見方が公的權威を獲得した。カントロヴィッチの説明によれば、この「神秘体」の觀念がやがて「国家」にも適用されるようになり、「キリストを頭とする教会の神秘体」が「君主を頭とする国家の神秘体」によって置き換えられることになる。ここに、靈的な「神秘体」(教会)と世俗的な「神秘体」(国家)、神秘体の宗教的な頭(イエス・キリストあるいはその代理人としての教皇)とその世俗君主的な頭(王)、神ないし教会のための自己犠牲(宗教的な殉教)と王ないし国家のための自己犠牲(「祖国のために死ぬこと」としての殉国)とのパラレリズム(並行関係)が成立する。こうして、教会という神秘体のための死が殉教として聖化されるのと同じように、国家という神秘体のための死も殉国として聖化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

後の教皇ピウス二世は1446年にハプスブルク家の皇帝フリードリヒ三世に献上した論考のなかで、次のように述べたのである。

国家が要求するときはいつでも、国家の神秘体の頭である君主自体も、その生命を犠牲にする覚悟ができ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手や足——それは国家では市民である——も、全体の体の利益のためなら切断されることもあるというのは、それほど過酷とはいえないだろう。

このように見れば、戦時下の日本のキリスト教の論理と、十字軍や国家の戦争を支えた西欧のキリスト教の論理との間に、どれだけ本質的な違いがあるのか、疑問である。いずれにおいても、祖国のために自己を犠牲にして死ぬなら、それは即殉教となり救済となる、と説く点に変わりはない。「殉国すなわち殉教、殉教すなわち殉国」という事態は、要するに、キリスト教と国家が「犠牲の論理」を内包する点で同型性をも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近代国民国家において国家のために死ぬこと＝殉国が聖なる行為とされ、それを行なう者が聖化・聖別される構造は、キリスト教において神の国のために死ぬこと＝殉教が聖なる行為とされ、それを行なう者が聖化・聖別される構造と完全に重な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

さて、しかしながら、キリスト教の歴史を通してこのような実態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と異質な信仰観がキリスト教の中になかったかといえ、そんなことはない。事実、ドイツ軍占領下のベルギーでメルシエ枢機卿のあの言葉が発せられたときに、これに反対する言葉がフランスのビヨ枢機卿によって発せられた(1915年3月25日)。

祖国の正義のために意識的に死ぬという事実だけで『救済が十分に保証される』ということは、神を祖国に取り替えることを意味し、……また、何が神であるか、何が罪であるか、そして何が神の赦しであるかを忘れることを意味する。

いずれもドイツ軍の侵攻を受けたベルギーとフランスで、いずれもカトリックの枢機卿とい

う高位にある人物が、このようにまったく違う見解をもって対立したということは注目に値する。カントロヴィッチはここで、「ここに内包された問題は、歴史的かつ哲学的な両方の背景を持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以下では、この違いを解明するために、哲学的議論の助けを借りることにしたい。

### Ⅲ. 悲劇的英雄と信仰の騎士

キルケゴールは1843年に偽名で出版した『おそれとおののき』という書物の中で、聖書の「創世記」第22章にあるアブラハムによるイサク奉獻の物語を取り上げている。注目したいのは、キルケゴールがそこで、アブラハムの決断の中に「信仰の騎士」の在り方を見て、これを「悲劇的英雄」から区別している点である。

悲劇的英雄の代表例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のは、エウリピデスの悲劇『アウリスのイピゲネイア』に出てくるギリシャ王アガメムノンである。トロイアとの戦争でアウリスの港に集結したギリシャ軍の船団が強風のために出撃する事が出来ないでいると、予言者が告げて言うには、アガメムノンの娘イピゲネイアを犠牲、生け贄に献げれば神の怒りが解けて軍団は出撃できる、そして戦争に勝つことが出来る、と。アガメムノンはそれを聞いて苦悩するが、ギリシャ軍の総大将として決断を下し、娘イピゲネイアと王妃クリュタイメストラに事の次第を告げる。母と娘は悲嘆に暮れるが、イピゲネイアは結局、健気にも父のため、国家のために犠牲になることを受け入れ、アガメムノンの刃がイピゲネイアに振り下ろされる。まさにその瞬間、イピゲネイアは牝鹿と入れ替わり、イピゲネイア自身は遙か彼方へ運び去られる。

他方、聖書「創世記」第22章では、アブラハムは愛する独り子イサクをホロコースト（全焼の捧げもの）にせよ、との神の命を聴く。そして、誰にも告げずに息子イサクと神に支持された山頂に行き、イサクを薪に縛り付けて、刀を振り下ろす。すると、天使の声で「その子に手を下すな。何もしてはならない。あなたが神を畏れるもの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からだ。あなたは、自分の独り子である息子すら、私に捧げることを惜しまなかった」と聞こえる。アブラハムはイサクを犠牲にせず、代わりに、近くにいた牡羊をホロコーストに捧げた。

アブラハムのイサク奉獻の物語と「アウリスのイピゲネイア」は、一面ではきわめてよく似ている。アブラハムもアガメムノンも、愛する我が子を犠牲に献げることが決断し、行為に及ぶ。しかし最後の瞬間に、いずれも殺人行為は回避され、代わりにアブラハムの場合は牡羊、アガメムノンの場合は牝鹿が犠牲に献げられる。構造的な同型性は明らかである。

ところが、キルケゴールによれば、ここには決定的な違いがある。アガメムノンは自らの苦悩をクリュタイメストラやイピゲネイア自身に明かし、そして共に泣くことが出来る。そしてその決断は、王として国家のために最愛の娘をも犠牲に献げた英雄的行為として讃えられ、国家と民族の歴史に永久に刻まれるものになる。

他方、アブラハムはその決断を、妻であるサラ、そしてイサクにも、そして他の誰にも明かすことが出来ない。なぜなら、アブラハムの行為は倫理的に見れば、息子の殺害という最もおぞま

しい犯罪であり、それ以上のものではないから、誰にも理解されない。したがって、アブラハムはたった一人で決断の責任を負い、神の前に単独者として立た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れが信仰の行為なのだ、とキルケゴールは言う。

アガメムノンは、父と娘の倫理を犠牲にしても、国家・民族という上位の倫理的なレベルで慰めを得ることが出来るが、アブラハムは倫理そのものを犠牲にして、倫理を超える信仰の立場に立たなければならぬために、人の世の慰めは断念しなければならない。キルケゴールは、人の世の慰め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ところに、「悲劇的英雄」と「信仰の騎士」という二つのカテゴリーの決定的な違いを見出している。

キルケゴールは悲劇的英雄の例として、アガメムノンの他に二つの例を挙げている。一つは旧約聖書の士師記に出てくるエフタの例、もう一つは古代ローマのルキウス・ユニウス・ブルートゥスの例である。

エフタはイスラエル人の将軍として、アンモン人と戦って勝利するために娘をホロコースト（全焼の犠牲）として献げる。ブルートゥスは、共和政ローマ初代の執政官として、国を揺るがす陰謀に荷担した息子を法に従って処刑する。アガメムノンとエフタとブルートゥスに共通するのは、国家のために息子や娘を犠牲にして国家の英雄としてその歴史に刻まれること、そして人の子の親としての悲しみを国家的名誉によって乗り越えるということにほかならない。

このキルケゴールの議論の中に、靖国的な信仰と、キリスト教の信仰すなわち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の神への信仰との本質的な違いが見出せ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アガメムノンのような悲劇的英雄は、戦争に際して国家のために家族の犠牲を甘受する、また家族を失う自らの犠牲を甘受する。そのことによって世俗の栄誉を勝ち得る。そしてそのことによって慰められる。アブラハムの方は、倫理の次元では絶対に慰められないが、悲劇的英雄は慰められるのである。ここに、分かりやすいがしかし決定的な違いが存在する。

靖国の母、靖国の妻、一般に靖国の遺族の場合、そして靖国の英霊自身も、本質的に「悲劇的英雄」のカテゴリーの中に収まっている。靖国信仰については、どれほど好意的な解釈をしてみても、国家や民族の論理や倫理を超えられない。たとえば仮に靖国神社が言うように、日本の戦争は侵略戦争ではなく、自存自衛の戦争だったとか、アジア解放の戦争だったとか、そういう正しい戦争だったと解釈した場合、靖国の英霊は国を守って死んだ、祖国の防衛のために自らを犠牲にした、アジア解放という正義のために自らを犠牲にしたことになりそうであるが、仮にその場合でも結局、靖国信仰は、キルケゴールの言う国家や民族の倫理の枠内に留まっているのである。靖国の遺族が、家族を兵士として国家に差し出し、戦死に至ってもその悲劇を名誉として称えられ、靖国の英霊と祀られることによって慰めを得るのは、まさに、靖国信仰と言われるものが、アブラハム、キルケゴール的な信仰ではないことを物語る証左であろう。

このように見れば、戦時中の日本におけるものであれ、西欧の十字軍やキリスト教国家、また近代国民国家におけるものであれ、戦争における国家や民族のための死を、キリスト教信仰と重ねること、すなわち「殉国即殉教」といった思想は、異なる者の混同ないしすり替えにすぎ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

## IV. キリスト教の「犠牲」を問う

さて、キルケゴールの議論で、キリスト教信仰が「殉国」の次元に収まりえない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としても、ことは単純ではない。というのは、この同じキルケゴールの議論によって、キリスト教が本質的に「犠牲の宗教」であることもまた確認されるからである。

ユダヤ教を背景に二十世紀後半に有力な「倫理」の哲学を展開したエマニュエル・レヴィナス(Emmanuel Levinas)は、キルケゴールがアブラハム物語をイサク犠牲の決断を中心に解釈したことを批判し、「倫理」そのものを犠牲にすることは危険だと主張した。レヴィナスによれば、この物語の頂点は神によってイサクの犠牲が止められることにあり、そのメッセージは、一切の人身供犠(human sacrifice)を廃棄すべしという「倫理」的なものなのである。

しかし、レヴィナスのような解釈では、アブラハムがイサク犠牲を決断しその行為を開始したからこそ、神はアブラハムが「神を畏れる者」であることを認め、犠牲の中止を命じたという点が、軽視されている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神がアブラハムを止めたのは、アブラハムが決断し行為に及んだからであり、アブラハムが決断せず、神の命令をサボタージュしていたならば、信仰の証は成立しなかったのである。ということは、ここでは「犠牲」が、信仰の成り立つ本質的条件として、信仰の中に構造的に組み込ま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たしかに、ここで犠牲は事実としては起らなかった。しかし、「超越論的」には起こったのである。キルケゴール的に理解されたキリスト教にとっては、「犠牲」がその超越論的条件になっ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とすれば、ここに、キリスト教の歴史において「殉教」と「殉国」が混同され、すり替えられることが多かった、構造的な理由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悲劇的英雄」と「信仰の騎士」とをどれほど厳格に区別しようとしても、キリスト教の中から両者の混同が根絶しがたく生じてきてしまうのは、キリスト教が本質的に「犠牲の宗教」である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

アブラハム物語におけるイサク犠牲は、ユダヤ教、キリスト教、イスラム教の3つを指す「アブラハムの宗教」に共通の信仰上のモデルである。しかしキリスト教に限って言えば、イサクの犠牲はイエス・キリストの「犠牲」の予型であるという解釈が伝統的に行われてきた。キリスト教の中心に、ナザレのイエスが十字架上で刑死したのは人類の罪を贖うための「犠牲」死であったという贖罪信仰がある限り、キリスト教は「犠牲の宗教」として、信仰のための「犠牲」を永遠に必要と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犠牲の宗教」ではなく、犠牲なき宗教、犠牲なきキリスト教でなければ、「殉国」と「殉教」の共犯関係から抜け出すことは不可能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しかし、いったい、犠牲なき宗教、犠牲なきキリスト教なるものは、ありうるのであろうか。

この問題を追究することは、明らかに本稿の範囲を超えている。

# 「殉國과 殉教-희생의 종교에 대한 의문」에 대한 토론문

방광석 (성균관대)

## 1. 논지의 이해

‘희생’의 논리를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앙’과 기독교의 관련을 살펴본 것.

1) 일본기독교단 발행 『일본기독교신보』의 논설문 「야스쿠니의 영령」, 「殉國 즉 殉教」 : 호국 영령의 피와 기독교의 피는 정신적 의의에 공통점이 있음. 생명을 던져 복음을 입증하는 것이 殉教라면 국난 시에 殉國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입증이므로 殉教.

2) 칸트로비치의 「서구 중세사상에서 조국을 위해 죽는 일」: 벨기에의 메르시 추기경은 “조국을 위해 죽는 殉國은 신앙을 위해 죽는 殉教와 마찬가지로”라고 주장. 프랑스의 비요 추기경은 ‘조국을 위해 죽는 것’과 ‘신을 위해 죽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

3) 키에르케고르의 『두려움과 전율』 :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신앙의 기사’, 트로이전쟁에서 그리스왕 아가멤논이 자신의 딸을 제물로 삼으려 한 것은 ‘비극적 영웅’. 야스쿠니의 영령은 본질적으로 ‘비극적 영웅’으로 국가와 민족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함. 전사의 ‘殉國 즉 殉教’의 사상은 상이한 양자를 혼동 내지 바꿔치기.

4) 기독교의 역사에서 ‘殉教’와 ‘殉國’이 혼동된 적이 많은 것은 본질적으로 ‘희생의 종교’이기 때문. 속죄신앙이 있는 한 기독교는 신앙을 위해 ‘희생’을 영원히 필요로 함. 그렇다면 ‘殉國’과 ‘殉教’의 공범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가.

## 2. 질문과 의견

1) 殉教와 殉國의 차별성 : 기독교의 殉教는 예수 혹은 선교사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등 대부분 피살에 의한 殉教. 야스쿠니신앙에서 자발적으로 殉國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기독교에서의 殉教를 동일하게 볼 수 있나?

2) 殉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 십자군전쟁이나 태평양전쟁 등 전쟁 시와 다른 평화 시 殉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본기독교단이 1967년 ‘전쟁책임 고백’을 한 이후 殉教와 殉國에 대한 견해는?

3) 殉教와 희생의 구별 : ‘희생자’(죽임을 당한 자)처럼 ‘희생’이 ‘殉教’의 의미로 사용되는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희생’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하는 의미로 사용됨. 기독교에서도 殉教는 예외적인 것으로 평상시 강조하는 희생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4) 외국 특히 한국과의 비교 : ‘殉國’에 대한 현상은 일본만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근대국민국가에서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殉國을 현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추모·위령시설, ‘의사’·‘순국선열’에 대한 추념 등). ‘殉國’ 논리에 대한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대응의 차이.

\*참고-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2008.



## 번역문

일본 고대의 神社와 祭神

瀧音能之 (駒澤大)

야스쿠니 神社와 일본의 신(新)군국주의

徐 勇 (北京大)

殉國과 殉教

高橋哲哉 (東京大)



# 일본 고대의 神社와 祭神

瀧音能之 (駒澤大)

---

## 목 차

---

### 들어가며

I. 伊勢神宮과 出雲大社

II. 宇佐神宮의 경우

III. 鹿島神宮과 香取神宮

### 나가며

---

## 들어가며

일본 고대의 신앙으로는 죠훈시대의 애니미즘이나 야요이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벼농사를 배경으로 등장한 水神·風神·山神信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행하는 장소인 社殿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다.

神이 祭神으로 鎮座하는 社殿의 형성은 언제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개 고분시대, 즉 5세기 전후 무렵에 신사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무렵에 대표적 신사인 伊勢神宮이나 出雲大社라 칭하는 古社가 社殿을 갖추게 되었다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 신에 대한 일본 고대인의 신앙, 즉 神祇信仰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현대적 신사 형태의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 학술회의의 주제인 야스쿠니신사도, 그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단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고대의 신사와 성격 면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최대의 차이는 제신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제신으로 삼고 있다. 즉 死者를 신으로 삼아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일본에는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은 없었다고 이해된다. 예를 들어, 고대의 제사 및 神祇信仰에 대한 연구자인 岡田精司氏는 『神社の古代史』 (大阪書籍, 1985년) 에서 「신사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 고분 시대 후기부터 나라시대 무렵」의 상황으로 「神과 死者의 靈은 원래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자 개인의 영혼이 신으로 받들어 모셔지는 것은 옛날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오카다씨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와 같은 제신의 존재는 적어도 나라시대, 즉 8세기 경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기초로 삼아 아래에서 고대 신사에서의 제신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I. 伊勢神宮과 出雲大社

우선 처음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의 예로서 伊勢神宮과 出雲大社를 들어 각각의 제신에 대해 고찰하고 싶다.

伊勢神宮은 内宮과 外宮으로 이루어지며 내궁의 제신은 天照大神, 외궁의 제신은 豊受大神이다. 그 역사를 보면 『日本書紀』 崇神天皇 6년에 그 때까지 궁중에서 제사 지내고 있던 천조대신을 大和 笠縫邑에 磯域神籬를 세워 제사 지냈다고 되어 있다. 원래 이 기사는 전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神籬를 세웠다고 되어 있기에, 이 단계에는 社殿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이어서 崇神의 뒤를 이은 11대 천황인 垂仁 25년 3월에, 황녀인 倭姫命에게 탁하여 제사 지낼 장소를 찾던 때에, 近江·美濃를 거쳐 伊勢의 五十鈴川の 상류에 齋宮을 지었다 한다. 이것이 바로 皇大神宮, 즉 내궁의 기원이라 여겨진다.

한편, 外宮은 『止由氣宮儀式帳』에 의하면, 雄略天皇의 꿈에 天照大神의 계시가 있어 어전을 받드는 신으로, 웅략천황 22년 9월에 丹波国 比治의 眞名井原으로부터 이세로 자리를 옮겨 진좌한 것이 豊受大神宮, 즉 외궁의 기원이라 되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전승이라 보아야 할 내용이며, 역사적 사실로서 그대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天照大神의 경우, 천조대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豊受大神도 인격신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신이었다. 무릇 天照大神은 국토의 탄생을 행한 이자나키신이 황천국에서 도망쳐 돌아온 뒤에 미소기를 행하여 태어난 신이었다. 즉, 미소기를 행한 뒤 이자나키신의 왼쪽 눈에서 탄생한 것이 천조대신, 오른쪽 눈에서 탄생하였던 것이 月讀神, 코로부터 탄생한 것이 스사노오신으로 되어 있다. 이자나키신의 좌우 눈에서 천조대신과 월독신이 태어난 것이고, 이것은 신의 양쪽 눈에서 일·월 양신이 탄생한다는 신화상으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다. 따라서 일본 신화의 경우에도 필시 이러한 일신과 월신이라는 양신을 축으로 하는 신화체계가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古事記』·『日本書紀』를 보면, 이자나키의 코로부터 스사노오신이 태어나고 있어, 세 신이 三貴子로 취급되고 있다.

일신·월신이라는 틀 속에는 스사노오신이 끼어들었다는 생각의 근거로서 월독신과 스사노오신과의 사이에 보이는 지배 영역의 중복도 놓칠 수 없다. 즉, 월독신은 「夜의 食国」을 위임 받은 데 대해, 스사노오신은 「海原」의 지배를 명 받는다. 「夜의 食国」이란 어둠의 세계이며, 죽은자의 나라라는 이미지와 겹쳐진다. 또한 「海原」도 해상 타계관을 비롯하여 사자의 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즉, 월독신과 스사노오신의 경우, 각각의 지배 영역에 중복이 보이고, 게다가 三貴子 탄생 뒤의 기·기신화의 이후 스토리 전개에 따르면, 월독신은 자취를 감추고 오로지 스사노오신만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기신화는 기본적으로는 일신과 월신이라는 구조가 있고, 일신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이며, 월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월독신과 스사노오신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월신에 해당하는 신으로 월독신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스사노오신이 등장하는지가 문제로 등장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스사노오신이 한반도에서의 도래신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스사노오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제철신이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한반도로부터 제철 기술을 가지고 도래해 온 백성들이 믿던 신이 스사노오신이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겨진다.

그 도래인들이 일본 열도에 도래한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기신화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신(日神)으로서의 천조대신·달의 신으로서의 월독신이라는 체계가 완성된 이후의 일이라 여겨진다. 즉 이런 해와 달 두 신의 체계가 완성된 이후에 스사노오신이 등장했을 것이다.

따라서 천조대신은 그 신명표기에서도 짐작되듯이, 그 성격에는 일신 즉 태양신이라는 요소가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태양신을 인격신화한 것이 천조대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조대신이 기기신화 속에서 천황가의 선조신이자 최고신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기기신화를 보아도 천조대신이 高天原의 주재신으로서 처음부터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기기신화 속의 신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카미무스히신(タカミムスヒ神)이 고천원의 주재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부터 천조대신이 고천원의 주재신이 되고, 기기신화 속에서 중심적인 신이 되어 갔는가. 그 시기를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통(持統)기를 하나의 전기로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기신화 중에서도 최대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国譲り신화와 그것에 이어지는 천손강림신화를 보면, 천조대신과 그 명령을 받고 지상에 강림하는 손자인 니니기(ニニギ)라는 祖母-孫의 관계가 보인다. 이는 지통천황으로부터 손자인 문무천황(文武天皇)으로의 양위를 보다 정통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화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지통천황의 시대, 즉 7세기 후반에 천조대신의 위치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출운대사의 예를 들어 제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출운대사의 제신은 물론 오오쿠니누시신이다. 출운대사의 창건 유래는 신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면, 『고사기』의 国譲り부분에, 고천원 측의 요구대로 지상의 나라를 양보하는 대신에 자신의 궁전을 天つ神の御子の 것처럼 큰 기둥을 단단히 세우고 치기(千木, 신사 건축에서 지붕 위와 양 끝에 X자형으로 짜서 돌출시킨 목재)를 하늘 높이 올려 만들고 싶다고 요구하고, 고천원 측이 그것을 승인했던 것에 따른다. 이것이 출운대사의 유래이다.

최근, 서기 1200년을 전후하여 잘려진 출운대사 본전 기둥이 발견되었고 그 높이가 48미터(16丈)였다는 전승을 보다 현실성있게 만드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같은 신화에서도 『出雲国風土記』의 경우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 즉 출운군(出雲郡) 저축향(杵築郷)을 보면, 출운의 대표적인 신 중 하나인 야즈카미즈오미지누신(ヤツカミズオミジヌ神)이 여러 신을 모아서 이 땅에 오오쿠니누시신의 신전을 조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화에 창건 유래를 갖는 출운대사의 제신인 오오쿠니누시신이지만 그 성격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기기신화에 보이는 오오쿠니누시신은 스사노오신의 후예로 여겨진다. 더욱이 신명도 오오쿠니누시 외에도 오오모노누시(オオモノヌシ)·오오나무치(オオナムチ)·야치호코(ヤチホコ)·우츠시쿠니쿠마(ウツシクニタマ)·오오쿠니타마(オオクニタマ)·아시하라시코오(アシハラシコオ)처럼 여러 다른 표기가 보인다. 이들 중 오오쿠니누시·오오모노누시·오오나무치는 넓은 토지의 소유자라는 의미이다. 또한 야치호코는 많은 창을 지닌 무신

(武神), 또한 우즈시쿠니쿠마·오오쿠니타마는 나라의 혼 즉 토지의 영령, 마지막으로 아시하라시코오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정력적인 남성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기·기신화에는 많은 복합적인 얼굴을 한 오오쿠니누시신이 보인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겠지만, 일단 본래는 여러 다른 신명을 가진 신을 하나의 신으로 합쳐서 통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여러 신의 요소를 통합하여 지상의 통치자에 걸 맞는 신으로서 오오쿠니누시신이 탄생했던 것은 아닐까.

한편, 『출운국풍토기』를 보면, 신명표기는 대체로 오오나모치신(オオナモチ神)으로 되어 있거나 많은 경우 ‘天の下知ろしめしし大神’ 즉 천하를 지배하고 계신 대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확실히 『출운국풍토기』는 오오쿠니누시신의 세계라는 인상을 준다. 『출운국풍토기』에서는 오오쿠니누시신은 대지의 창조신이며, 지상의 소유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오쿠니누시신은 인격신적인 요소가 짙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기·기신화와 『출운국풍토기』의 신화에서의 경우이고, 본질이 어찌까지나 신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즉 이세신궁에서도 출운대사에서도 그 제신은 기·기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이다.

## II. 宇佐神宮의 경우

그럼 다음으로 우좌신궁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사신궁은 우사하치만궁(宇佐八幡宮)이라고도 불려지고, 八幡信仰의 원류이다. 오이타현 우사시(大分縣 宇佐市)에 진좌하고 있고, 『扶桑略記』 등에 의하면, 흠명천황(欽明天皇) 32년에 신탁을 받았던 神比義가 奉齋하고, 和銅 5(712)년에 鷹居社를 만들고 그 후 小山田으로 옮겼고, 神龜 2(725)년에 현재 위치에 社殿을 조영했다고 전해진다. 제신은 比賣大神·神功皇后·應神天皇이다. 즉, 우사신궁의 경우, 비매대신은 차치하고 신궁황후와 그의 자식인 응신천황이 제신으로 「인간」이 제신이 된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우사신궁 신앙의 기원을 살펴본다면, 위에 기록된 3자를 동급으로 다루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우사신궁이 진좌한 땅, 즉 우사는 大和와 九州를 잇는 최단 루트이고, 한반도와도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된다. 그것을 반영하듯 신앙도 토지의 神祇·佛敎·道敎 등이 섞여 있게 되었다.

전승에서는 야요이시대 말기, 즉 3세기 경에는 한반도계의 샤머니즘이 전해졌고, 샤먼의 이름을 豊國奇巫라고 한다. 풍국기무는 웅략천황(雄略天皇)의 부름을 받았고, 더구나 用明天皇 2(587)년에는 豊國法師로서 천황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내했다고 전해진다. 풍국법사는 불교와 도교를 융합했던 샤머니즘을 이용하고, 많은 幡에 포위된 제장에서 탁선을 실행해서, 탁선의 신을 야하타신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이것이 야하타 신앙의 바탕이 되는 신앙이고, 원시 야하타신 신앙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런 풍토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이 法華이다. 법화는 승려지만, 샤머니즘을 통해 의료 활동을 했고, 大寶 3(703)년 국가로부터 은상을 받았

다.

이런 원시 팔변신앙의 한편에, 북부 구주에 부과된 과제로서는 신라 관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과제이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이런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 삼한평정전승이라고 알려진 신공황후와 그의 아들 응신천황인 것이다. 우선 신공황후의 경우는 전승 상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응신천황이다.

응신천황은 신격이 흠명조에 나타나는데, 그때까지의 원시 야하타신 신앙에 부가되었고, 이런 것을 부가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던 자가 大神比義였다. 오히려 신공황후가 신격으로서 정식으로 포함된 것은 시대가 흐른 뒤인 弘仁 14(823)년의 일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사신궁의 경우는 확실히 신공황후-응신천황이란 인물이 제신이 되었지만, 그것은 야스쿠니신사처럼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서 죽었던 개인이 공적에 따라 제신이 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 즉 우사신궁에서 신공황후가 제신이 되었던 것은, 신궁이 조선반도를 평정했다는 전승 때문이고, 응신은 신궁의 자식이란 것이 제신이 된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된다.

### Ⅲ. 鹿島神宮과 香取神宮

다음으로 무궁이란 점에 주목해서, 대표적인 신사인 녹도신궁(鹿島神宮)과 향취신궁(香取神宮)을 예로 각각의 제신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녹도신궁은 이바라키현 가시마군 가시마마치(茨城縣鹿島郡鹿島町)에 진좌한 고사이다. 『常陸國風土記』에는 10대째 천황인 崇神天皇 때에 제사가 행해졌다고 한다. 당초부터 武勳의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닌 것은 「鹿島立ち」라는 말이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전투에 참가할 때에 녹도신궁에 참배하고 무운을 기원하고 출정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배경에는 진좌지의 지리적 환경 등에서 생각해 보면 고대의 蝦夷評定 때에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했던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녹도신궁의 제신은 다케미카즈치신(タケミカズチ神)이다. 다케미카즈치신은 가기신화 중에서 무력을 가진 영웅신으로 고명하다. 이 신이 활약한 장으로서는 우선 국토 할양 신화(國讓神話)를 들 수 있다. 2번의 국토 할양 교섭에 실패했던 고천원 측이 3번째 사신으로서 선발했던 자가 다케미카즈치신이다. 향취신궁의 제신인 후즈누시신과 함께 출운에 하강했던 다케미카즈치신은 오오쿠니누시신(オオクニヌシ神)을 설득해서 국토 할양에 동의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견에 따르지 않았던 다케미나카타신(タケミナカタ神)을 무력으로 물리치고, 도망친 다케미나카타신을 추방(諏訪)까지 쫓아가서 항복을 받아냈다.

또한 神武天皇의 東征傳承에서는 신무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 靈劍을 받아, 동정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화상의 영웅신인 다케미카즈치신은 한편에서는 가토리신사의 후즈누시신과 함께 후지와라씨의 씨신적 직위를 부여받고, 더욱더 두터운 신앙과 보호를 받게 된다.

녹도신궁은 이처럼 무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신사이지만, 제신은 가기 신화 속의 영웅

신이므로, 고대의 蝦夷評定 등에 종군했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는 요소는 없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녹도신궁과 함께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향취신궁이다. 향취신궁은 치바현 가토리시 가토리(千葉県香取市香取)에 진좌하고 있고, 녹도신궁과는 멀지 떨어져 있지 않다. 제신은 후츠누시신이고, 신명이 되는 「후츠」의 유래는 예리한 칼날로 물건을 자를 때 나는 소리라고 한다. 따라서 후츠누시란 예리한 무기의 소유자이고, 여기에서 후츠누시신의 성격이 무신임이 명확하게 된다. 이 점은 녹도신궁의 제신인 다케미카즈치신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신의 공통점은 단순히 그 점만이 아니라, 가기 신화 중 국토 할양의 장면에서도 함께 행동하고 있다. 후지와라씨의 씨신은 春日神社이지만, 平城京으로 천도하고, 녹도신궁의 다케미카즈치신과 가토리신사의 후츠누시신을 나라의 春日山에서 제사지냈다. 현재 春日大社の 본전은 4殿으로 되어 있는데, 제1전에는 다케미카즈치신을 제사지내고, 제2전에는 후츠누시신을 제사한다.

이런 점에서 찾아낼 수 있듯이 향취신궁도 녹도신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향취신궁은 무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후츠누시신을 제신으로 해서 저명하고, 신사 자체도 그런 신앙이 두텁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은 제신인 후츄누시신이 가기 신화에서 대표적인 무공의 신이란 점에서 기인하고, 전투에 종군하거나,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차라리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의 수호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기린다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 맺음말

지금까지 이세신궁·출운대사·우좌신궁·녹도신궁·향취신궁 등 적어도 나라시대까지 다시 말해서 8세기 전반까지는 사전을 구성하고, 깊은 신앙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고사를 대상으로 그들 신사의 제신에 중점을 두면서 야스쿠니신사와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관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대 시기, 주로 8세기까지는 야스쿠니신사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제신으로 하는 발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헤이안시대 즉, 8세기 말에서 9세기 이후가 되면, 그런 신사에 변화가 생긴다. 구체적인 예로 北野天滿宮은 菅原道眞을 제신으로 한 신사이고, 도진의 사후에 창건된 신사이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저명한 학자이고, 문장박사였는데, 宇多天皇에게 등용되었고, 그 다음 천황인 醍醐天皇 때에 우대신까지 승진했던 정치가였다. 그러나 좌대신이었던 藤原時平의 음모로 大宰府로 좌천되는 비극의 정치가였다. 따라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본령은 학문이다. 요즘에는 기타노텐만궁은 학문의 신으로 저명하지만, 원래 창건 유래는 그것과 달리, 10세기 중반 경에 탁선에 의한 요구에 따르게 된다. 그 배경에는 비극의 정치가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원령이 되어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관계자에게 받들어졌다는 사정이 있었다. 이런 미치자네의 숭배를 두려워하고, 신으로서 경배함으로써 환난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성행했던 원령신앙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기타노텐만궁도 제신은 확실히 스

가와라노 미치자네이고 미치자네 사후에 창건된 신사이지만, 야스쿠니신사와는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제신이 된 이유는 미치자네의 학문과 정치가로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배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고대에는 야스쿠니신사와 같은 형태를 가진 신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란 풍토 가운데에서 탄생한 신사라고 할 수 있다.



# 야스쿠니 神社와 일본의 신(新)군국주의

徐 勇 (北京大)

---

## 목 차

---

- I.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군국주의의 전형적인 도구이다
  - II. 전후 야스쿠니 신사를 처리하는 법칙의 제정과 파괴
  - III. 전후 일본 신 군국주의의 발전
  - IV. 일본 및 동아시아 사회 정치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의 도전과 위협
- 

야스쿠니 신사문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 아시아 국가간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연구는 역사사실과 결부하여 군국주의의 역사적인 속성을 구별하여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사회 정치생활 가운데서 그와 신 군국주의 세력과의 관계 및 일본 사회와 동아시아지역에 야기한 불안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작업은 학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니, 여러분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이다.

## I.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군국주의의 전형적인 도구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군국주의의 산물이며, 근대 일본군국주의의 설립 및 전통종교에 대한 이용이 없으면, 야스쿠니 신사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는 사쓰마, 초슈, 토사 등 번병을 기초로 일본 천황의 “어친병”을 설립하였다. 4월6일, 일본천황의 명의로 시정강령인 『오조서문五条誓文』과 『신한(宸翰) (御笔信어필신)』을 선포하였다. 이 시정강령에서는 일본의 전반적인 대외 방침을 “천하를 경영하고 역조 만민을 어루만지며, 만리의 과도를 개척하여 국가의 위세를 사방에 떨치고자 한다”고 정하였다. 1872년 일황(日皇)의 명의로 또한 『징병조서(征兵诏书)』를 선포하고, 정부는 『포고 布告』와 『징병고유(征兵告諭)』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군대를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1880년 11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县有朋)는 일황에게 『인방병비략(邻邦兵备略)』을 올리면서 청국과 조선에 대한 군비확충을 강조하면서, 강병정책은 다른 모든 시정조치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88년5월 사단제조령이 반포한 후 신식사단을 편성하여, 원래의 “신다이(镇台)”제도를 대체하였다. “신다

이”라는 단어는 막부말기에 이미 “에도 신다이(江戸鎮台)”, “오오사카 신다이(大阪鎮台)”로 쓰였던 것이다. 메이지 초기 무신전쟁(戊辰战争)이 끝나면서 1872년까지 선후로 도쿄(東京), 오오사카(大阪), 鎮西(小倉), 토후쿠(東北仙台)등지에 신다이를 설치했는데, 이들은 모두 내부 안정 수비 형 군사제도(安内守備型軍制)이다. 그러나 사단제의 설립은 “대의 징벌하는데 필요한 근대군비의 대폭 강화”에 목적을 둔 것이며, 그 출발점은 조선과 청국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대외에 군대를 사용 할 수 있는 강세군비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1878년 천황에 직접 속하는 참모본부(參謀本部)를 설치하여, 작전, 용병用兵 등 군대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군령장관은 군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내각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천황에게 보고하는 정책을 규정함으로 “통수권독립”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1889년 “메이지 헌법”을 천황이 직접 칙령을 하사하여 천황이 통수권을 전부 장악하도록 규정하고, 1900년에는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현역무관이 맡도록 하는 “육해대신현역무관전임제(陸海大臣現役武官專任制)”를 제정하였다. 1907년4월4일 천황은 『제국국가방침 帝國國防方針』, 『국방에 필요한 병력』 및 『제국 군대 용병장령 帝國軍隊用兵綱領』 등을 공식적으로 허가하였다. 이런 서류들은 “제국의 국방은 공세를 근본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일본의 공격적인 대외 전략을 확립하고, 근대 일본 군국주의체제를 강화하였다. 다이쇼(大正)시기에 이르러, 군부에서 국가정권을 통제했으며, 이것은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 등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천황에 직속된 기구가운데, 문관에 속하는 것은 4개지만, 무관에 속하는 경우는 무려 41개에 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의 군부정치 지배 및 그 세력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그 결과 헌팅턴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치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은 국가의 정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일본 군국주의 발전과정에서, 또한 사회, 교육 및 문화정신 등 여러 면에서 전쟁시기 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처음에는 무신전쟁(戊辰战争)에서 전사한 관군 장병을 추도하기 위해, 1869년에 도쿄에서 초혼사(招魂社)를 세우고, 첫 제사의식을 진행함으로, 막부말기부터 내전(관군 방면)에서 죽은 전사자 3,588명을 추도하였다, 1879년에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을 고쳤다. 이때 신사에서는 전통적인 신도형식을 취하고, 그 비용을 완전히 정부에서 지출하고, 국가신도의 중심 신사가 되었다. 일본의 원시종교는 자연숭배와 다신 숭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신도는 원시종교에서 변해온 것이며, 발전과정에서 또한 중국의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리면서, 적지 않는 변혁이 나타났고, 중세기에 천황제도와 결부하여 국가신도가 형성된 것이다. 메이지 유신 후 신정부인 메이지 정권은 충분히 신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부를 위해 봉사하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신도의 지위는 급속하게 높아지고, 황실에서도 고전적인 신화 전설을 이용하여, 천황은 신의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자손이라고 선전하였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신도의 중심적인 권위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신도만 받들고(獨尊神道), “폐불훼석(排佛毀釋)”활동을 하면서, 기타 종교에 타격을 가하였다. 또한 신기관(神祇官)의 지위를 태정관(太政官)의 상위 기구로서 설치하였다. 1870년1월에 『대교선포조서(大教宣布詔書)』를 공포하고, 선교사(宣敎使)를 설치하였다: 그 직책은 “신명

을 받들고, 인륜을 밝힘으로써, 억조 인민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 직분을 다하게 하여서 조정을 섬긴다”고 하였다. 1871년의 관직개혁으로, 신기 관(神祇官)을 신기성(神祇省)으로 낮추고, 1872년에 신기성도 철수하고, 제사(祭典)등 업무는 궁내성(宮內省)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선교 등 일은 교부성(敎部省)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1872년 신기성 선교사(神祇省宣敎使)등 직을 폐지하였다. 1875년 종교자유를 선포했지만, 국가신도의 지위는 계속 강화되었다. 근대 일본 국가 신도는 메이지 정권의 지배하에, 내정외교의 수요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핵심 구성 부분으로, 신사의 동쪽에다 1882년(메이지15년) “유슈칸(遊就館)” 이란 군사박물관을 세웠다. 1910년(메이지43년) 대규모로 확충 건설하였다. “유슈칸”은 전쟁 이전과 전쟁시기에는 주로 각 나라에서 빼앗아 온 전리품을 전시함으로, 황군의 “赫赫한 전쟁 공로(赫赫戰功)”를 자랑하였다. 전쟁 이후 카미가제(神風) “특공대”대원들의 유서 등 전사자의 유물을 많이 전시하므로, 죽은 자의 “영령英靈”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彰顯).

일본 학계의 고찰을 따르면, 전근대 일본에서는 불교의 “원친평등(怨親平等)”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적군과 아(我)군, 양쪽 전사자를 모두 제사 지내주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1869년 신사를 세우면서 제사를 지내준 전사자들은 오로지 정부군의 전사자에만 국한되었다. 적군(賊軍), 즉 전 막부 군과 반정부의 전사자, 그리고 전사한 외국사람들은 모두 제사를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유명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등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일본의 유명한 학자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과 같은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말하는 소위 전통문화란, 사실은 이미 원래 있었던 모든 전사자를 제사하는 습관을 개변했거나, 단절시켰으며, 이는 일본의 고유적인 문화전통과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본토에서 전쟁을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식민지 통치 등 면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위해 극대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지역에 각각 많은 수량의 신사를 세웠으며, 통계에 따르면, 1937년까지 한국에 368개, 1940년까지 중국 동북지역에 1370개, 1941년까지 타이완에 18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 마을에 한 신사(一村一社)” 정책을 실시했으며, “강제적인 신사참배는 그 지역으로 하여금 ‘제신들의 침략’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상의 식민통치의 수단을 실시하므로, 야스쿠니로 대표하는 국가 신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근대 일본의 대량적인 용병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는 한결같이 대외 침략의 정신과 문화적인 보루가 되었다. 신사에서는 전쟁에서 천황을 위해 사망한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였다. 일황도 제사에 참여하였다. 통계 따르면, 1929년4월의 산동에 출병해서 전사한 사람을 합사하기 위한 임시대제부터 시작하여, 1945년4월까지, 일본 쇼와(昭和)천황이 참배한 횟수는 총 20여 회에 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쇼와 천황은 “근대 세 명의 천황 가운데 가장 많이 참배한 천황”이 되는 셈이다. 직접 신사를 이용하여 중국 침략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침략전쟁을 위해 봉사하였다.

예배와 같은 정신문화형식 이외에도, 신사는 또한 기물전시 등 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일황 히로히토(裕仁)은 1935년에 제300호 칙령을 반포하여, 야스쿠니 신사 부속 유슈칸 령(游就馆令)에 대한 개정규칙을 공포하였다, 그 제1조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부속인 유슈칸에서는 어떤 전역과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기념품 및 무기 등 연혁의 물건을 수집 보존하여, 군사상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되, 국방정신을 키우고 군사지식을 증진하기 위해 관중에게 관람의 장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는 “유슈칸의 관장은 육군 대신 및 해군대신의 감독을 받아 유슈칸 사무를 장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야스쿠니 신사는 완전히 전쟁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였다.

## II. 전후 야스쿠니 신사를 처리하는 법칙의 제정과 파괴

1941년12월7일(일요일)새벽(하와이시간), 일본 해군 연합함대는 미국 하와이 소재 진주만 해군기지를 기습하고, 동시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태평양 식민지를 공격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다음날,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자유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다음해 1월1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네 개 나라가 주도하였고, 26개 국가가 서명한 『연합국 공동선언(联合国共同宣言)』이 공식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서명한 나라에서는 “군사와 경제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파시즘 “삼국동맹”에 저항하겠다고 보증하였다. 제2조에서는 서명한 나라에서는 “단독으로 적국과 정전협약의 혹은 평화협정(和约)”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선언의 발표는 일본 군국주의 전쟁과 나치독일을 반대하는 국제통일전선이 공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1943년12월1일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의 지도자들은 “일본은 무조건 투항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카이로선언』에 서명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1945년4월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联合国制宪会议)”를 소집하고, 『유엔헌장(联合国宪章)』 등 법규를 통과하였다. 유엔의 성립 및 헌장의 제정은,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일본 등 전쟁책임국가를 처리하는 정치적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영국, 소련 등 3개 국에서는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전시 제3차 수뇌회담을 가졌다. 7월26일에 미국에서 초안을 만들고, 영국에서 동의하고 중국을 요청해 참석한 『포츠담선언』을 발표하고, 일본을 “무조건 항복”하라고 재촉하였다. 『선언』 제6조에서는 일본 군국주의를 처리하는 기본목표를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 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하였던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될 수 밖에 없다”고 제정하였다. 1945년8월15일 일황 히로히토(裕仁)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국의 공고(公告)를 받아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포하였다, 같은 해 9월2일, 일본외상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와 일본군 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오(梅津美治郎) 등은 일황과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투항 서에 서명하였다. 투항서 제1조에서는 일본이 “중국, 미국, 영국 공동 서명하고, 나중에 소련이 참가한 1945년 7월26일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수

락한다고 확인하였다. 이로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나타난 『중국대일선전포고(中国对日宣战布告)』, 『카이로선언(开罗宣言)』, 『포츠담선언(波茨坦公告)』 과 일본의 『무조건투항서(无条件投降书)』 등 문서는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일본문제 관련 법규체계이며, 이것은 전후 일본 전후 정치 및 야스쿠니 신사 등 문제를 처리하는데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전후 연합군의 대일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1945년 12월27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소련, 영국, 미국 등 11개 나라에서 극동위원회(远东委员会)와 연합군관제일본위원회(盟军管制日本委员会)를 성립하였다. 1947년6월19일, 극동위원회에서는 『항복 후 일본에 대한 극동위원회의 기본정책결의(远东委员会对投降后日本之基本政策的决议)』를 제정하고, 투항한 일본에 대한 정책의 최종목표는: “일본이 다시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되는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며, “하루 바빠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기”를 요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반드시 무장과 군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군부권력과 군국주의의 영향을 완전히 소멸하고, 모든 군국주의와 침략정신체도를 엄격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결의』는 전시에 제정한 대일정책의 큰 방향을 굳게 지켰으며, 일본군국주의체제문제를 처리 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연합군의 전시 및 전후 초기 일치로 확인한 대일 기본원칙은, 미군의 주도하에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무 조건으로 투항한 이후, 맥아더는 트루먼의 명령을 받아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신분으로 일본에 대한 점령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하였다는 유리한 형세를 이용하여, 미국 자신에게 유리한 점령정책을 펼쳐나갔다. 전후 세계 형세의 변화에 따라, 주로 중국의 내전의 발발과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으로, 미국의 대일 정책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의 중요성은 중국의 형세의 발전과 같이 결합돼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을 미국이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방과제로 만들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평화를 가속 촉진하였다. 맥아더도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출했으며, 만약 소련 등 나라에서 반대한다면, 미국은 일본과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1950년6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본은 즉시 미군이 조선을 침략하는 중요한 기지가 되어버렸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을 급히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1년3월23일, 미국은 극동위원회 성원국(远东委员会成员国)에 대일강화조약(对日和约) “임시초안(临时草案)”을 제출하였다. 8월15일 이른바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정본(对日和约草案定本)』 이 공식 발표되었다. 9월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회의(对日媾和会议)를 소집하였다. 일본과 소련, 동유럽 나라를 포함한 52개 나라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해협 양안에 있는 중국정부를 배척하고, 또한 소련대표의 강렬한 비평도 거절하였다. 9월8일 대일 강화조약 서명식을 가졌다. 소련, 폴란드, 체코 등 3개 국가에서 거절한 외, 나머지 48개 회의에 출석한 국가대표들은 선후로 서명하였다. 『대일강화조약(对日和约)』 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만, 국제협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 등 국가의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평화협정이다. 1952년4월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旧金山和约)』, 『일미안전

보장조약(日美安全條約)』과 『일미행정협정(日美行政協定)』이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조약들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전면 군사 점령시기를 끝나치고, 일본이 주권국가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군사동맹을 기초로 한 일-미 특수관계를 확립하였다. 미국은 평화협정에 따라 일본군국주의 체제에 대한 개조를 너그럽이 하고, 대량의 전쟁범죄자들은 책임재판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본 정치무대에 활약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이 “자위”권을 가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또한 미군이 무기한 일본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일본 무력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 등 규정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획득하게 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본경제의 “군수경기”를 자극했으며, 50, 60년대 일본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했으며, 한 동안 잠복한 군국주의세력이 다시 활약하고, 전범 정치가들이 국가요직을 담당하고, 전후 일본의 신 군국주의가 신속하게 다시 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정치환경가운데, 야스쿠니 신사는 절체절명의 경지에서 겨우 한 숨을 돌리게 되고, 정치무대에 신속히 활약하게 되었다. 1945년12월15일, 연합군총사령부는 『일본정부가 국가 신도와 신사에 대한 보증, 지지, 보전, 감독 및 소식공포에 관한 비망록(关于废除日本政府对国家神道和神道的保证, 支持, 保全, 监督与公布消息的备忘录)』, 즉 『신도지령(神道指令)』을 발표하였다. 1946년 1월1일, 일황 히로히토(裕仁)는 자신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하였다. 1947년5월3일 전후 『일본국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여, 국가 대법의 방식으로 종교자유, 정교분리(국가기구 및 국가예산)원칙을 확립하였다. 제20항에서는 “사람마다 아무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국가 특권을 받거나 혹은 정치적인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국가에 소속된 기구에서는 종교교육 및 기타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제89항에서는 공적 자금 및 기타 국가 재산을 그 어떤 종교조직이나 단체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이익을 유지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어떤 자선, 교육 혹은 구제 사업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전후 위에서 서술한 법규와 국가 근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도는 보통 “종교”이므로, 정부는 모든 신사에 대한 특수한 보호, 감독을 정지해야 한다. 모든 재정적인 지지를 정지하고, 신관훈련기구를 폐지하고, 신관을 훈련하는 공립 강학관 대학을 취소해야 하며, 사립 국학원대학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신도를 선전하는 강의를 금지시켜야 하며, 학교에 모신 천황상 및 교육칙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모든 신도와 관련된 기술을 삭제해야 하며, 공무원 및 일반 국민들은 모두 신도활동에 참가 하지 않는 자유가 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요구를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가 만약 또 다시 국가의 제사장소의 명의로 나타나면,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고, 반드시 단속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GHQ) 도 각 지역에 있는 호국(护国)신사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적인 신사”라고 간주하고 폐지하려고 준비하였다. 1950년5월, 전국의 호국신사에 “호국”이라는 글자를 삭제하라고 규정하고, 제사 대상은 전몰자(战没者)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색채를 없이기 위해, 공공이익을 위해 죽은 사람까지 포함시키면서 그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동서 냉전 대립 구도하에, 야스쿠니 신사는 최후로 그래도 폐지 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났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른바 종교법인의 겉옷 밑에서 계속 존속(存続)하게 되고,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과 평화조약 서명한 이후, 신속한 회복과 발전을 가졌다. 1951년10월18일의 소위 “대제”에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수상이 신사 참배함으로써, 2일간에 35만 명이 참배하였다. 일본학자는 “51년 10월의 예 대제(例大祭)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수상의 참배는 신사의 ‘부활’을 선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952년5월, 일황과 황후는 모두 정부에서 주최한 신주쿠 어원(新宿御苑)에서 진행한 전국적인 전사자 추도의식에 참석하였다. 10월 일황과 황후는 또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는 전후 처음 3만평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일련의 활동가운데, 일본사회는 그때의 침략전쟁에 대한 평가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위 말하는 “순국 열사의 영령을 반듯이 창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영웅의 영혼을 나타내는 신사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타나게 되었다.

전후 우익복위세력들은 또한 신사를 국유화로 취지 삼는 주장도 내놨다. 1955년 이후, 일본 정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로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자민당은 다섯 차례나 『야스쿠니 신사법안』을 제기하고, “특수법인”으로 고치자고 요구했으며, 수상의 직접적인 감독 밑에 두고, 국가에서 전문 비용을 지불하여 야스쿠니신사 제사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하였다. 1956년 1월25일 일본유족회(日本遺族會)에서는 국가에서 제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의를 제출했다. 1969년은 바로 야스쿠니 신사가 창건한지 백 주년이 되는 해였다. 야스쿠니 신사의 “국영화”쟁론을 둘러싸고, 사회에서부터 국회까지 분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이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법안』은 일본사회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섯 차례나 국회에 제기했으나, 여섯 번 모두 부결 당하였다. 이는 우익세력의 주장이 아직까지 사회에서 커다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후 야스쿠니 신사는 모집한 점점 더 많은 경비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정부의 관리들이 참배하는데 대해, 내각 법제국에서 개인참배와 공식참배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개인 참배”의 네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즉: 1. 참배 전에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공무수행용 차량을 타고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는다. 3. 등기부에 “공적인 기관”에서의 직무 명칭을 쓰지 않는다. 4. 수행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내각 법제국에서는 이상 네 가지 원칙에 부합되면 “개인 참배”에 속한다고 보고, 정부관리가 “개인 참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여기며, “정식 참배”는 의심할 바 없이 헌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1953년8월, 일본정부는 『은급 법(恩給法)』을 수정하여, 이미 정지한 군인 은급(경제보조)을 회복시켰다. 같은 해 또한 유족 원호법(遺族援護法)을 수정하고, 전쟁 범죄행위로 형사나 옥사 당한 자를 모두 “공무 사로 인정하고, 그러므로 전범 유족 또 보통전몰자 유족과 같이 모두 국가의 경제원호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전범들이 야스쿠니에 합사하기 위해 길을 열어준 셈이다.” 신사의 제사 신(祭神)으로, 점점 더 많은 전사자들이 합사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후 재판에서 B급, C급 전범으로 죽은 자들도 제사 신으로 영세부(灵玺簿)에 등록되어 합사하게 된 사실이다.

전후 야스쿠니 신사 합사 대상은 후생성과 도도부현(都道府县)의 협조로 “제신 명표”를 만들어 야스쿠니 신사에 교부되어 합사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쟁 패배하기 전인 45년4월까지 제사를 받게 된 사람의 수는 375 000명인데, 전후인 1956년 가을 후생성의 통지를 받아 새로 합사하게 된 인원은 112 609명에 달하였다. 그 후 인원수는 급히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누적하여 2 466 364 명에 달한다. 이 “선택 당한 영혼”들은 일본 국내 전쟁에서 전사한 자(14,722명)를 제외하면, 절대다수는 모두 대외 전쟁, 특히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일반 혹은 전범 판결 받은 전사자들이다.

신사는 또한 군견, 통신 비둘기 및 군말 등 추도 우상을 설치하였다. 의심 할 바 없이 이들 자연계의 생명들도 모두 군국주의 전쟁에 징용당한 것이다. 일본 전쟁 역사 기록을 따르면, 중국 화북 지역에서 작전할 때, 진(중국 산서성)동쪽 방향에서 일본 군인과 말이 다수 전사해서, “장갑차에서 조차 오랫동안 떠도는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사방 십리에 죄다 비린내 냄새 천지였다”고 하였다. 군부 참모인 이노모토(井本)는 썩은 시체 냄새는 “주로 우리 군대의 군마가 풍긴 시체 냄새”라고 해석하였다.

A급 전범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는 문제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측에서는 우선 이들의 전쟁책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전범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며, 쇼와(昭和)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전한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기 전, 무토 아키라(武藤章)는 이미 일찍이 구마모토(熊本)의 호국신사에 합사하고, 마츠오카 요우스케(松岡洋右)는 야마구치(山口)의 호국신사에 합사하였다. 나아가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것은 그때 전범재판에 대한 항의임이 분명하고, 일본 정부가 이미 일찍이 도쿄재판에 대한 인정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다. 후생성은 일찍이 1966년에 14명의 A급전범의 성명을 제사명단에 써냈지만, 신사 측에서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여기고, 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이 일을 보류해 두었다가, 12년 후인 1978년에 입사하게 하였다. 연구자의 고증을 따르면, 합사한 A급 전범 히로타 고우키(廣田弘毅) 전 수상은 군인도 아니고, 군 가족도 아니 임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조건에 분명히 부합 되지 않는다. 이로 우리는 A급전범의 합사 문제의 주요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고, 후생성은 주관 기구이며, 전후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직접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고이즈미(小泉)도 그의 임기 내에 연속 참배하였다. 참배에 관해 두 가지 관건적인 요소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 전범 요소이고, 또 하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전후에 확립한 야스쿠니 신사문제 처리에 있어서 정교분리의 법제규칙 및 그에 포함된 평화원칙은 비록 법규는 아직 존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미 큰 충격을 받고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전후 일본 신 군국주의의 발전

전쟁 전 일본은 전형적인 파시스트 군국주의 국가이며, 그 기초가 깊고 튼튼하다. 그러나 전쟁 후 민주개혁은 여러 많은 요소로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전후 일본 신 군국주의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조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을 표지로, 세계 냉전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이때부터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을 서구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은 대일 점령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일본의 힘을 회복하고 이용하기 위해 군국주의세력에 대한 깊은 추궁을 느슨하게 하였다.

전범의 재판에 있어, 도쿄 재판에서는 7명의 A급 전범을 사형에 처하였는데, 그 이후 일본 학자의 통계를 따르면, 연합군은 멀리 태평양지역의 50여 개 법정에서 일본 전범 5000여명을 기소하였다. 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은 심양(沈阳), 태원(太原)에서 재판할 때, 구속한 전범 1108명을 대부분 석방하고, 45명만 기소하고, 한 명도 사형에 처하지 않았다. 1949년12월, 소련 하바로프스크 재판에서 야마다 오토조(山田乙三) 등 전범12명을 유죄로 재판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독일 뉘른베르크 법정에서는 독일 전범12명을 첫 재판했는데, 사형을 처하였다, 그 이후 80년대 중기까지, 일본학자의 통계자료 따르면, 연합군 방면에서는 유럽 각 지에서 파시스 전범 8만 여명을 재판하였다.

파시즘 사회 역량 추구방면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일본 사회 각계에서 파시즘 핵심 인물 약 20만 명을 “정숙整肅”하고, 독일의 미국 점령지역에서 등기된 인구는 1318.03만 명인데, 기소 당한 자는 344.18만 명이고, 인구총수의 26.2%를 점하고, 정식으로 판결 받은 사람은 94.5만 명으로, 인구총수의 7.2%를 점한다. 소련, 동유럽 각 나라 사회각계에서 나치(纳粹)전쟁 혐의자에 대한 추궁도 매우 엄격하였다. 그러므로 비교해 보자면, 일본 각 종류의 전범들은 기소 당한 자가 적고, 형량도 가볍고, 사회 추궁면도 작고, 또한 조사한 시간도 짧다. 유럽 각 국(동, 서 독일 포함)정부에서는 나치 전범에 대한 추궁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 전범에 대한 추궁은 50년대 중기 이후 대체적으로 정지되었다. 일본은 줄곧 유엔 1978년에 전쟁범죄를 추궁하는 데 있어 시효의 제한이 없다는 결의에 참석 하지 않았다.

일본 전범들은 그 정치적 자유를 회복하는데 매우 적은 시간이 걸렸다. 전쟁범죄의 경력은 방해받지 않을뿐더러, 사회에서 환영 받는 정치적 자산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었다. 전범 시게미즈 마모루(重光葵)의 성쇠(沉浮) 사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시게미즈 마모루(重光葵)는 15년 중국 침략 전쟁에 전부 참가하였고, 전쟁 후 첫 28명의 A급 전범으로 재판 대에 올랐다. 그러나 형량이 매우 가벼운 7년 도형을 받고, 1950년에 가석방 받아, 다시 사회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52년에 개진당(改進黨) 총재에 임하고, 1954년 하토야마(鳩山)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임명 받고, 그 후 최고직무로 내각 부수상까지 하였다. 1957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기타 여러 종류의 전범경력이 있거나, 혹은 전쟁 혐의자 신분으로 사회요직을 담당할 자도 적지 않다. 일본학자들은 이들을 “전범 정치가”라고 칭한다. “전범 정치가”들의 활약은 일본의 대내외 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 범은 추악하지 않고”, “전쟁 범이 환영 받는”등, 극히 나쁜 사회영향을 끼쳤다.

일본전범들이 전후 재판을 철저하게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또한 전후 중국과 전체 극

동지역의 형세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항일전쟁 승리 후 얼마 안되어, 중국에서는 전면적인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1949년 말 국민당 정권이 대륙에서 퇴출 할 때까지 이어졌다. 거의 5년 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의 침략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중국은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할 새 없이,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전후 통제를 완전히 차지하였다. 50년대 한국전쟁의 발발로,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일본을 다시 일어서도록 부추겼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직접 보호해준 셈이다. 50년대 후, 중국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서양 각 나라에게 국제 사무 밖으로 밀리게 배척 받았다. 타이완 일각을 고수하고 있었던 국민당 “정부”는 힘이 없어서,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생존을 구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종 일본의 전후 개조에 대해 직접적인 공헌을 하지 못하고, 일본 군국주의 전쟁 죄책에 대해 깊이 추궁하지도 못하였다. 이로 일부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이 아주 손쉽게 잠복 생존하게 되었다.

일본의 전후 군사역량의 대폭의 발전 자체가 사회 정치 체 문제의 산물이며, 동시 신 군국주의 세력의 팽창을 자극하였다. 일본은 전후 헌법 제9조에서 “해 육 군 및 기타 전쟁 역량을 보존 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도 이미 “실속 없게 돼 버렸다. 자위대의 명의 하에, 일본은 육해공 군사역량을 건립하였다. 90년대 중기부터 시작하여 일본의 군비의 절대적인 수치는 이미 오래 동안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비록 현재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대량의 원자재를 저축해두고, 운송 도구 방면에서도 일본은 이미 H12 로켓을 연구제작 성공했으며, 이는 위성을 우주 궤도에 보낼 수 있으니, 당연히 어떤 시기에 핵무기를 지구의 그 어떤 지점에 뿌릴 수도 있다. 만약 전후 헌법과 국제사회의 제반 제약이 없으면, 일본은 수시로 핵 대국의 행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규모를 놓고 보면, 현역 인수 28만 명 정도로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군관과 병사의 비례는 69%이상임으로, 일단 동원을 실시하면, 신속히 몇 백 만 대군으로 확장 할 수도 있다. 이 자위대라고 부르는 무장군부대는 조직이 강하고, 장비가 선진적이다. 이 가운데 해군 역량은 80년대 이미 세계 최고의 수뢰 제거(扫雷)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는 대 잠수함 작전 능력(미국 다음)을 가지고 있고, 세계 세 번째로 가는 방공능력(미국, 소련 다음으로)을 가지고 있고, 작전 함정의 톤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간다. 각 나라 여론에서는 일본의 해군 종합 역량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1위에 가는 해군대국이라고 여기고, 공군방면에서도 “세계 제1일의 공군”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관건은 일본의 전략 계획 영역에서도 사람을 억압하는 힘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후 초기와 50년대 일본의 군사역량이 아직 발전하기 전에, 일본은 명확하고 공개적인 전략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었다. 그 이후 육해공 군사역량의 발전으로, “전수 방위(专守防卫)”로 불리는 특색 있는 방위전략이 형성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전수방위 전략은 사실상 이미 폐지되었다. 일본과 미국 쌍방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부터 평등 합작, 각자 서로 분공하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점차적으로 변해갔다. 일본의 방어 계선과 범위는 최초로 “본토방수”를 요구하는 데서부터 적을 “물가(수제탄두水际滩头)”에서 소멸하는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해상격파(海上击破)”로 요구되며, 또한 “전방에서 초기에

처리(前方早期处置)”를 해야 하며, 심지어 먼저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며, 적군의 집결 기지에 대해 “전기 공격(先期攻击)”을 실시하거나 “가까이에 가서 공격(저근공격抵近攻击)”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80년대 “초기격파”전략사상은 이미 일종의 “최소한도의 위협(威懾)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유사법제(有事法制)”등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전기 공격” 혹은 “저근공격”등 전략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런 “위협”성격을 띤 전략사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19세기말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县有朋)의 “주권선(主权线)과 이익선(利益线)”에 관한 요구와 1907년 『제국국방방침(帝国国防方针)』에서 규정한 “제국국방은 공세를 근본 원칙”을 한다는 말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군사 역량이 대폭 발전과 전략방침의 강화는 이미 점점 더 많이 국제 사무에 사용되고 있다. 1992년6월에 제정한 “유엔국과의 평화활동합작법안”, 그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대량으로 육해공 무장군대를 파견하여 이른바 “평화 유지”활동을 해왔다. 만약에 위에서 서술한 행동 가운데, 일본이 내건 깃발은 “평화유지”와 “국제합작”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행동에서는 적나라하게 무력으로 국제 분쟁을 처리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하였다. 일본은 공공연하게 서해(黄海)상에서 소위 신분이 명확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격파해 침몰시켰으며, 특히 조어도(钓鱼岛) 문제도 매우 두드러진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이 군함을 출동하여, 위협하다고 기적을 울리면서, 무력으로 중국(타이완지역 포함)의 어선을 쫓아내고, 홍콩의 조어도를 보호 하려는 인사(保钓人士)인 천위샹(陈毓祥)을 죽게 하였다. 그 행동들은 일본 헌법 제9조에 규정된 “국가의 권리로 전쟁을 발동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등을 영원히 포기 한다”라는 원칙과 완전히 어긋난다. 일본은 슈퍼군사대국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실력을 구비하고, 이미 초보적으로 “유사입법”등 평화 헌법을 초월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법권준비를 하였다. 일본은 테러 반대와 북조선의 위협론 등 구실로 강군 전략을 대폭 추진하고, 인도양 및 이라크 등지에 파병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상징적인 행동조치이다.

일본의 군사역량의 발전은 의심할 바 없이 이미 하나의 신 군국주의 군사대국이라는 태세를 낳게 하였다. 소위 신 군국주의란 현재에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일종의 전후 개혁과정에서 확립된 평화 민주 원칙과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전쟁전의 군국주의를 위해 명예회복 하려고 하고, 사회, 정치, 군사 등 제반 영역에서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문제는 바로 전후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흥행하는 집중적인 표현이다. 일본이 전후 걷는 길은 원래의 서부 독일에서 걸어왔던 길과 비교하면, 즉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제사회의 인정 받는 방법과 서로 다르고, 일본은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동시에 현실정치, 군사 등 영역에서 강경한 우경화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 총 결산(政治总决算)” 함으로, 세계 정치 군사 대국의 행렬에 들어서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아시아 각 국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전쟁 참극을 초래했으며, 각 민족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 그러나 일본의 신 군국주의의 출현은 야스쿠니 신사 등 엄중한 정치외교문제를 조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후 일본의 군국주의 흥행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에 나타난 정치적인 곤혹은 일본 국내의 민

주, 진보 역량들이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매우 힘든 처지에 처해 있다.

#### IV. 일본 및 동아시아 사회 정치에 대한 야스쿠니 신사의 도전과 위협

의심할 바 없이, 야스쿠니 신사를 군국주의의 역사 산물로 반드시 폐지해야 하며, 전후 연합군은 야스쿠니 신사 처리에 착수한 바 있다. 1945년9월11일, 일황 히로히토는 “야스쿠니 신사 부속 유슈칸을 폐지 하는 명령을 재가하며 여기서 공포한다”라는 “칙령 제 532호”를 공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여러 요소로 인해서 이 일은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야스쿠니 신사를 폐지하는 것이야 말로 일본의 평화 민중들의 장구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20세기 일본의 중요 정치가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의 중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이시바시(石橋)도 역시 전쟁유족이다. 그의 차남은 해군 중위로 1944년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서 전사하였다. 그는 전후 1945년10월13일에 『동양경제신보(东洋经济新报)』에 쓴 논평에서 “대동아(大东亚)전쟁은 일본인에게 대대로 지울 수 없는 치욕을 가져다 준 전쟁이다. 국가는 거의 붕괴할 뻔하였다. 일본이 청일전쟁(中日甲午战争)과 러일전쟁(日俄战争)에서 얻은 성과를 모두 쓸어 버렸다. 비록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미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일본사람들을 ‘야스쿠니의 신’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시바시(石橋)는 야스쿠니 신사를 폐지하고, “무장을 포기한 진정한 평화적인 일본을 수립하고, 동시에 세계에 공헌하자고”주장하였다. 이시바시(石橋)의 주장은 일본의 장구적인 이익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존속하게 하면, 후세 국민에게 ‘굴욕과 원한의 기념’을 새겨주는 것이며,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이를 ‘완전히 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후 평화세력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고, 신사는 보존하게 되고 또한 신속하게 발전하고야 말았다. 야스쿠니 신사의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일청, 일러 전쟁부터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동아전쟁”까지, 이 모든 전쟁은 “근대국가의 수립을 위한 것이며, 우리 나라의 자존(自存) 자위(自衛)를 위한 것이며, 세계사 범위에서 봐도, 모두 다 피부색과 상관 없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설립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신사의 양 대 입장을 강조한다: “유슈칸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영웅의 무력 공훈과 유덕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웅들이 그 발걸음을 내디딘 시대의 근대사의 진척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사는 어떤 진척을 보여 주려고 하는가? 유슈칸의 진열장에 들어가면 바로 영식전투기(零式战机)를 볼 수 있다. 이런 전투기는 우선 그때 당시 중국의 임시 수도 중경(重庆)을 폭격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런 전투기에서 제창해낸 “영전정신(零战精神)”은 바로 일본의 침략정신이다. 신사는 또한 일본이 동남아를 침략할 때 사용했던 기관차도 전시하였고, 또한 일본의 군말과 군견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안에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어떤 것은 전쟁 전에 군인들이 심은 것이다. 일본 군의 작전 단위를 느닷없이 나무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의 벚꽃 나무도 도쿄지역의 사쿠라 명절의 시작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거리에서 나치 친위대는 다시 나타날 수 없으며, 줄 서서 행진한다는 것은 더욱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도쿄에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해마다 8월15일 등 중대한 명절에, 옛 군인들도, 또한 전후에 태어난 우익들은 전쟁시기의 낡은 군복을 입고, 줄 서서 사람들의 눈을 끌도록 과시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저명한 학자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 선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시(警示)를 해줬다: “저는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대교원(大教院)의 명령을 부활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한 나라의 수상으로서, 적어도 유식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자신의 편견을 반성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져야 한다. 권위적인 헌법 학자와 종교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교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심지어 사법기구의 재판을 거절하면서 계속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앞으로 꼭 이성의 복수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을 걱정하게 한다. 고이즈미(小泉)수상도 겉으로만 장엄해 보이고, 경솔한 전쟁을 발동한,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손을 떼지 않고, 최후 일본의 백성들이 아주 힘든 환경에 처하게 한 도조 히데키(东条英机)수상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사 사장인 와타나베 츠네오(渡边恒雄)선생은 “야스쿠니 신사가 대표하는 신도는 반(反)문화적인 성격을 띠 뿐만 아니라, 전통종교에 대한 배반이고, 전쟁의 신사로 존재하는 것이며, 종교의 상징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일본의 카미가제 특공대도 강요당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 인민에게 전쟁 피해와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옆에 이상한 유수칸을 만들어서 일본의 영식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방자한 무차별 폭격하였다는 것을 부추기므로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매우 해롭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와타나베사장은 또한 “나는 야스쿠니 신사 가까이에 이전했는데, 자주 신사에 가서 산보하고 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배한 적은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정전(正殿) 옆에는 바로 이상한 유수칸이다. 이 일본 군국주의를 예찬하는 시설에서, 참관하려 온 아이들은 ‘일본이 이전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한다. 야스쿠니 신사가 경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국주의를 선동하고, 찬양하는 전시품을 진열한 박물관이다”라고 하였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른바 한 타이완사람의 청원서가 진열돼 있다 - 타이완 “원 국민(原国民)” 정춘화(郑春和)의 소위 청원서인데, 식민지시기의 일본인의 신분으로 일본의 통치 하로 회귀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이는 일본의 우익이 다시 타이완을 점령하고자 하는 신 군국주의 사상을 충분히 표명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소책자로 인쇄했는데, 예측하건대 1993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몇 백 만 책을 발행했고,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최근 몇 년 일본은 유사법안을 만들어내면서 타이완 해협도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야스쿠니 신사는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개별 신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체 정치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 걸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야스쿠니 신사는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신 군국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일본의 많은 곳에 모두 이와 비슷한 전쟁 제전물(战争祭奠物)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일황의 고향 미야기(宮崎)에는 “황군 발상의 땅(皇軍發祥之地)”라는 기념비가 있고, 또한 1940년에 건립하고, 1964년에 다시 회복하여 재건한 미야기(宮崎) “팔굉일우(八紘一宇)”탑이 있다. 히로시마현의 에타지마(江田島)에는 해상 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는 계속 전시 군국주의정신교육을 추진하며, 특수 함정에서 사용하는 가스관으로 만든 꽃병을 진열하고,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의 “황국의 흥패는 이번 전투에 달려 있으며, 각 학원들은 더 한 층 분발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필적을 걸어놓고 있다.

미국학자는 “이는 군국주의 냄새가 심지어 세기말에 와서도 아직 까지 계속 보존되어 그 냄새를 풍기고, 특히 야스쿠니 신사와 그의 현(縣)급 지사에서 더욱 그렇다”라고 지적하였다. 지금 어떤 자위대의 군인들을 신화하여 공양(供奉)하려고 한다. “자위대원의 신화안(神話案)은 더욱이 야스쿠니 신사를 도와주기 위해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마치 국제 환경이 개선되면, 엄청난 비평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즉시 신도와 옛 관계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 군국주의의 산물이며, 지금도 여전히 전범을 공양하고 있다. 우익정치가와 우익세력의 참배를 받고, 공개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근대이래 대외 침략전쟁과 호전주의를 찬양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또한 일본 신 군국주의의 새로운 표현 기호이기도 하다. 여러 면에서 계속 일본 신 군국주의 세력을 끊임없이 발전하게 추동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 중일 관계를 파괴하는 우익세력의 근거지이다. 결론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세력의 발전방향으로 따라가면, 의심할 바 없이, 일본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각 나라와 일본의 국민 모두가 반드시 계속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 순국(殉國)과 순교(殉教)

- 희생(犧牲)의 종교(宗教)에 대한 질의 -

高橋哲哉 (東京大)

---

## 목 차

---

- I. 영령의 피와 기독교의 피
  - II. 기독교의 전쟁과 희생사(犧牲死)
  - III. 비극적 영웅과 신앙의 騎士
  - IV. 기독교의 '희생'을 묻다
- 

### 1. 영령의 피와 기독교의 피

고찰을 위한 출발점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어로 작성된 글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일본 기독교단이 발행하던 신문 《일본기독교신보(日本基督教新報)》 1944년 4월 1일자에 게재된 〈야스쿠니의 영령(靖國の英靈)〉이라는 논설문이다.

일본기독교단은 현재도 일본의 개신교 교단 중에서 최대 교단으로 존속하고 있는데, 이 교단은 1940년에 창설되었다. 일본정부는 1939년 기독교와 불교 등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종교를 모두 국가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하여 종교단체법을 제정하였다. 일본기독교단은 이 법률하에서 개신교의 주요 종파가 국가에 협력하기 위하여 통합되면서 탄생한 교단이다. 교단의 초대총리인 도미타 미츠루(富田満)는 1938년에 조선 기독교의 주희철(朱喜徹) 목사 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인물이며, 또한 일본기독교단은 1944년 〈일본기독교단이 대동아공영권에 있는 기독교도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전 세계를 참되게 지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만방무비(萬邦無比)의 우리 일본의 국체(國體)라는 사실을 신앙에 따라 판단”할 것을 아시아의 기독교도에게 요구하였다.

한편, 〈야스쿠니의 영령〉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남해의 끝, 대륙의 오지에서 대군(大君)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럽고 용맹한 영령 2만 5천을 모셔 제사지내는 초혼 의식으로, 제국(帝國)의 수도는 지금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만개한 벚꽃은 마치 용감하게 호국을 위해 산화한 야마토(大和) 남아의 충혼을 기리는 듯 흩날린다. 노리나가(宣長)의 저 유명한 노래가 오늘날만큼 실감났던 적은 없다. 기자는 작년의 대제(大祭)에서도 노리나가의 노래를 들었지만 올해는 특히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이다.

전쟁은 점점 심각해져, 결전 또 결전, 힘겨운 전쟁이 전개되는 오늘날, 국민의 생활은 나라를 위해 바쳐진 피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 그 감격을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피의 고귀함은 명령을 신(神)으로 모시는 일본의 전통만이 양지(良知)하는 바이다. 나라에 바쳐진 피를 고귀하게 여기는 정신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할 것이다. 기념비를 세우고, 오가는 사람은 모자를 벗고 경건하게 예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이 피에서 최고의 의의를 찾아, 제신(祭神)으로 기리는 정신은 오직 우리 일본에만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피에서 높고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국민성의 우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니 오히려 고귀한 피를 바치는 사람들의 고귀한 마음가짐이 전장에서 타국인이 알지 못하는 높은 경지에까지 양양되어, 국민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게 하는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군(大君)의 부름을 받는 순간, 이 무인(武人)은 계시라 여기고 삼가 받든다. 이 순간부터 이 무인에게는 나라에 바쳐질 깨끗하고 고귀한 피가 생동한다. 무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에는 새로운 의의가 생긴다. 물론 이러한 마음은 일본 국민 모두에게 존재하는 전통이다. 그러나 특히나 부름을 받는 순간은 이를 선명하게 자각하는 새로운 순간이며, 종교적 신생(新生)에 비할 만하다. 기자는 몇 번이나 이와 같은 신비로울 정도로 장엄하고도 힘차며 새롭고도 엄숙한 자각을 가진 무인 앞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숙였다. 이와 같은 태도에서 이 고귀한 순국의 피를 야스쿠니의 명령으로서 기리는 마음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호국 명령에게는 심혹(深酷)한 의의가 있다. 이 제일(祭日)이 국민적 대제(大祭)로서 국민 모두가 엄숙한 마음을 갖는 것 역시 당연하다. 고귀한 피의 의의가 가진 심혹한 의의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이 글은 1944년 봄, 야스쿠니신사에서 임시 대제가 행해졌을 당시의 글이다. 이 임시 대제에서는 남태평양과 중국에서 일본 병사로서 천황에게 목숨을 바친 전사자 2만 5천명을 새로이 합사하는 초혼제가 거행되었다. 기자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생활은 이들 명령들의 ‘바쳐진 피(捧げられた血)’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피’는 여기에서 ‘희생’(sacrifice)을 상징한다. 하지만 단지 ‘바쳐진 피’가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피’에서 ‘최고의 의의(意義)’를 찾고 이를 ‘신으로 기리는(神様と讃える)’ 것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이다. 즉 야스쿠니란 ‘희생의 종교’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술 중에 기독교를 연상시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마치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신도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양 이 글은 야스쿠니의 논리를 그대로 솔직히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기독교는 피가 가진 의의를 가장 깊이 자각한 종교이다. 거의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수의 피야말로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를 기술(記述)한 자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자신을 신에게 바친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양심을 죽음으로 가득 찬 행위로부터 씻겨주시어 다시 신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라고 하여, 피의 의의를 현양(顯揚)하였다. 기독교 신자는 이 피의 고귀함에 눈을 뜨면서 새로워졌음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피의 의의가 가진 깊이를 전통으로 지닌 초기 일본 기독교 신자가 예수의 피가 가진 의의

를 처음으로 접하였을 때 마음이 두근거린 것은 당연하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일본 기독교 신자가 호국 명령의 피에 깊이 감동하는 것은 피의 정신적 의의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피의 의의를 깊이 자각함에 공통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야스쿠니의 대체를 맞이하여 우리 일본 기독교 신자들의 피는 억누를 수 없는 엄숙한 감격과 순국의 양심으로 끓어오른다. 자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이 용솨음친다.

거리에서는 유족 표찰을 단 사람들과 빈번히 마주친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무의식중에 모자를 벗어 들게 된다.

야스쿠니의 명령을 위로하는 길은 적을 격멸하는 것뿐이다. 한 치의 틈도 없는 충성스런 마음을 지니고 주어진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들의 끓어오르는 피가 흘러가는 길은 명령의 피와 서로 깊이 통하여 있다.

이 글은 참혹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글이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도가 단순히 일본인으로서 국가의 전쟁에 협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 자체가 해체되어, 야스쿠니 신앙, 국가 신도와 일체화되었음을 이여기서 명백히 보여준다. 몇 천 명, 몇 만 명의 전몰병사를 잇달아 ‘신(神)’으로 만드는 야스쿠니 신사와, 삼위일체의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가 어째서 이렇게도 쉽게 일체화되고 말았던 것일까?

여기서 양자를 이어주는 논리는 ‘희생’의 논리이며, ‘희생’의 상징으로서의 ‘피’의 논리이다. 기독교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어,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 즉 ‘희생’의 의의를 가장 깊이 있게 자각한 종교이다. 따라서 일본인이 ‘피’의 ‘희생’의 의의를 가장 높게 자각했던 증거인 야스쿠니 명령의 ‘피’와 예수의 ‘피’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일본 기독교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흘린 예수의 피의 희생의 의의와, 일본과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흘린 야스쿠니 명령의 피의 의의가 하나가 된 것이다.

실제로, 1943년 9월 10일자 《일본기독교신보》에는 〈순국이 곧 순교(殉国即殉教)〉라는 논설문이 게재되었다.

만일 순교의 의미를 성서 본래의 의미로 푼다면, 이는 대전(大戦)이 한창인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성서에 따르면 순교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투쟁에서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순교이다. 지금은 국민이 총무장을 한 때이다. 우리들 일억 명의 국민은 모두 유구한 대의(大義)에 살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국난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국난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입증이고 순교이다. 지금은 순국의 정신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전 국민은 이러한 정심으로 무장하도록 하자.

‘순국’ 즉 ‘순교’. ‘순교’ 즉 ‘순국’. 국가의 전쟁에서 전사하여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신자로서의 순교가 된다. 국가를 위한 죽음과 신을 위한 죽음이 희생의 논리라는 공통성에 의해서 일체화되어 버린 것이다.

## 2. 기독교의 전쟁과 희생사(犧牲死)

그런데 기독교가 이처럼 야스쿠니화 한 것은 일본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서유럽에서 일찍이 십자군 시대에 성왕(聖王) 루이 9세의 군대에 종군하여 이교도와 싸우다 전사한 병사는 '순교자'로서 대우받았다. 기독교도에게 전쟁에서 싸우다 생명을 잃는 것이 '순교'라는 사상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니다.

저명한 중세사가 에른스트 칸토로비츠(Ernst Kantorowicz)는 <서구 중세 사상에서의 조국을 위하여 죽는 일>이라는 논문(1951)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소개하였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여 점령하자, 벨기에 가톨릭의 수좌대사교(首座大司教)였던 메르시에(Mercier) 추기경은 “조국을 위하여 죽는 병사를 순교자로 간주하여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벨기에의 애국자였던 추기경은 이 질문에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누군가 용감한 자가 조국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지 어떨지 여러분이 나의 생각을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는 분명, 그 군사(軍事)적인 무용을 기릴 것이며, 또한 그 병사는 기독교도인답게 감수한 그 죽음에 따라 영혼의 구원을 보증 받게 된다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으로 번역한 문장은, 본래 ‘consciously gives his life to defend the honor of his country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의식적으로 바친다)’라는 글이다. 이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권위 있는 가톨릭 최고위직에 있는 추기경이, ‘조국을 위해 죽는 일’ (pro patria mori) 즉 ‘순국’은, ‘신앙(神)을 위해 죽는 일’ 즉 ‘순교’와 하나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일본기독교신보》의 ‘순국이 곧 순교’라는 입장과 분명 동일하다.

칸토로비츠에 따르면, 메르시에 추기경과 같은 사고방식은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영국왕 아더(Arthur)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칼레온(Caerleon) 주교인 성(聖) 두브리키우스(Saint Dubricius)가 행했던 연설의 일부가 그 예이다.

그대들의 조국을 위해 싸워라. 가령 죽음이 그대들을 덮치더라도, 조국을 위한 죽음조차도 감수하여라. 실로 죽음 그것이 승리이자 영혼의 구원 수단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동포를 위하여 죽는 자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신에게 바치는 자이고, 동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분명히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3장 16절). 때문에 만일 그대들 중 누군가가 이 싸움에서 죽음을 맞았을 때에는 그 죽음을 그가 범한 모든 죄를 갚는 것이라 여기고 사면이라 여기리라.

여기에서는 조국을 위한 희생자 즉 순국이 《일본기독교신보》의 <야스쿠니의 영령>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예수의 희생사(犧牲死)에 비견되고 있다. 조국을 위하여 죽는 자는 예수의 희생사를 따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 받고, 사면되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에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로마 · 가톨릭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

体)(corpus mysticum)에 비유하는 견해가 공적 권위를 획득하였다. 칸토로비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신비체'의 관념이 곧 '국가'에도 적용되어, '예수를 수장으로 하는 교회의 신비체'가 '군주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의 신비체'로 치환된다. 이에 영적인 '신비체'(교회)와 세속적인 '신비체'(국가), 신비체의 종교적인 수장(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 대리인인 교황)과 그 세속 군주적인 수장(왕), 신 내지 교회를 위한 자기희생(종교적인 순교)과 왕 내지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조국을 위해 죽는 것'으로서의 순국)과의 패럴렐리즘(대구법, 평행구조, 병행관계)이 성립한다. 이처럼 교회라는 신비체를 위한 죽음이 순교로서 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신비체를 위한 죽음도 순국으로서 성화되는 것이다.

교황 피우스 2세는 1446년 합스부르크家の 황제 프리드리히 3세에게 헌정한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 신비체의 수장인 군주 자신도 그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손과 발 - 국가에서는 시민 - 도 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단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리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본다면, 전시하의 일본의 기독교의 논리와 십자군이나 국가의 전쟁을 지지했던 서구 기독교의 논리 사이에 얼마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조국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즉 순교이자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순국이 곧 순교이고, 순교가 즉 순국'이라는 사태는 요컨대 기독교와 국가가 '희생의 논리'를 내포하는 점에서 동형성(同型性)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국민국가에서 국가를 위하여 죽는 것=순국이 성스러운 행위로 여겨지고, 이를 행하는 자가 성화(聖化)·성별(聖別)되는 구조는 기독교에서 신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순교가 성스러운 행위로 여겨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성화(聖化)·성별(聖別)되는 구조와 완전히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실태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와 이질적인 신앙관이 기독교 안에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사실, 독일군 점령하의 벨기에에서 메르시에 추기경이 앞서서와 같은 언급을 하였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프랑스의 비요 추기경에 의해서 나왔다. (1915년 3월 25일)

조국의 정의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죽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충분히 보증된다'는 것은 신을 조국으로 치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 또한 무엇이 신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이 신의 용서인지를 망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모두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모두 가톨릭의 추기경이라는 고위직 인물이 이처럼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립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칸토로비츠는 여기에서, '이에 내포된 문제는 역사적이면서 또한 철학적인 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이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철학적 논의의 도움을 빌리려 한다.

### 3. 비극적 영웅과 신앙의 기사(騎士)

키르케고르는 1843년에 가명으로 출판한 《공포와 전율(Frygt og Baeven)》이라는 책에서, 《성서》 〈창세기〉 제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의한 이삭 봉헌 이야기를 다루었다.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키르케고르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결단 중에 ‘신앙의 기사(騎士)’가 보여주는 양상을 통해, 이를 ‘비극적 영웅’과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비극적 영웅의 대표적 예로서 제시되는 것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 나오는 그리스 왕 아가멤논이다.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아울리스 항구에 집결한 그리스군 선단이 강풍으로 출격할 수 없게 되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친다면 신의 노여움이 풀려 군단은 출격할 수 있으며,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아가멤논은 그 말을 듣고서 고뇌하지만, 그리스군의 총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딸 이피게네이아와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Klytaimnestra)에게 사정을 말한다. 모녀는 비탄에 잠기지만, 이피게네이아는 결국 아버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받아들인다. 아가멤논의 칼이 이피게네이아를 내려친다. 바로 그 순간, 이피게네이아는 암사슴과 맞바꾸어지고, 이피게네이아 본인은 저 먼 곳으로 사라진다.

한편, 성서 ‘창세기’ 제22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을 듣는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아들 이삭과 함께 신이 지시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삭을 나무더미에 묶고는 칼을 내려친다. 그러자 이때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대로 멈춰라. 그대가 신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외아들조차 내게 아낌없이 바치려 하였다”라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하지 않고, 대신에 근처에 있던 숫양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의 이삭 봉헌 이야기와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는 일면 매우 비슷하다. 아브라함도 아가멤논도 사랑하는 자식을 바칠 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모두 살인행위는 면해지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숫양, 아가멤논의 경우는 암사슴이 희생된다. 분명한 구조적 동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고뇌를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이피게네이아에게 밝힌다. 그렇게 하여 이들과 함께 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왕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딸도 희생시키는 영웅적 행위로서 칭송되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된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단을 부인인 사라,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그리고 다른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보면 아들을 살해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로,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직 홀로 결단의 책임을 지고,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행위라고 키르케고르는 말한다.

아가멤논은 아버지와 딸의 윤리를 희생해서라도 국가·민족이라는 상위의 윤리적 차원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윤리 그 자체를 희생하여 윤리를 초월하는 신앙의 입장에 서야만 하기 때문에, 세속의 위로는 단념해야만 하였다. 키르케고르는 세속의 위로가 존재 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점을 통해 ‘비극적 영웅’과 ‘신앙의 기사’라는 두 개 범주의 결정적 차이를 찾아내고 있다.

키르케고르는 비극적 영웅의 예로서 아가멤논 외에 두 개의 예를 제시한다. 하나는 《구약성서》 〈사사기(士師記)〉에 나오는 입다(Jephthah)의 예, 다른 하나는 고대 로마의 루키우스 율리우스 브루투스(Lucius Julius Brutus)의 예이다.

입다는 이스라엘인 장군으로서 암몬(Ammon)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딸을 번제물로 신에게 바친다. 브루투스는 공화정 로마의 초대 집정관으로서 나라를 뒤흔든 반역 음모에 가담했던 아들을 법에 따라 처형한다. 아가멤논, 입다 그리고 브루투스의 공통점은 국가를 위하여 아들과 딸을 희생함으로써 국가의 영웅으로서 역사에 각인된 점, 그리고 부모로서의 슬픔을 국가적 명예를 통해 극복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키르케고르의 논의 중에, 야스쿠니적 신앙과 기독교 신앙 즉 아브라함·이삭·야곱의 신에 대한 신앙과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일까? 아가멤논과 같은 비극적 영웅은 전쟁에서 국가를 위하여 가족의 희생을 감수한다. 또한 가족을 잃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다. 그로 인하여 세속의 영예를 얻는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위로받는다. 아브라함의 경우 윤리적 차원에서 절대 위로받지 못하지만, 비극적 영웅의 경우는 위로를 받는다. 여기에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야스쿠니의 어머니, 야스쿠니의 아내, 일반적으로 야스쿠니 유족의 경우, 그리고 야스쿠니의 영령 자신 역시 본질적으로 ‘비극적 영웅’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 야스쿠니 신앙은 아무리 호의적인 해석을 궁리해 보아도 국가와 민족의 논리나 윤리를 뛰어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가령 야스쿠니 신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고 자존자위의 전쟁 혹은 아시아 해방전쟁으로서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해석하는 경우, 야스쿠니의 영령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아시아 해방이라는 정의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가령 그런 경우에도 결국 야스쿠니 신앙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국가와 민족의 윤리의 틀 안에 머무는 것이다. 야스쿠니 유족이 가족을 국가에 병사로 보내 전사하더라도, 그 비극을 명예라 여기고, 야스쿠니의 영령으로 모셔짐으로써 위로를 얻는 것은, 분명 야스쿠니 신앙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키르케고르적인 신앙이 아님을 말해주는 증거일 것이다.

이처럼 본다면, 전쟁 중의 일본의 경우나 서유럽의 십자군이나 기독교 국가 또는 근대국민 국가의 경우나, 전쟁에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죽음을 기독교 신앙과의 중첩, 즉 ‘순국이 곧 순교’라고 보는 사상은 다른 요소의 혼동 내지 바뀌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4. 기독교의 ‘희생’을 묻다

이제 키르케고르의 논의를 통해 기독교신앙이 ‘순국’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해도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동일한 키르케고르의 논의를 통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희생의 종교’라는 점 또한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12세기 후반에 유력한 ‘윤리’의 철학을 전개했던 엠마누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는 키르케고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삭 희생의 결단을 중심으로 해석한 점을 비판하고, ‘윤리’ 그 자체를 희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정점은 신에 의해서 이삭의 희생이 중지되는 데에 있고, 그 메시지는 모든 인신공희(人身供犧, human sacrifice)를 폐기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해석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희생을 결정하고 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비로소 신은 아브라함이 ‘신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희생의 중지를 명령하였다는 점을 경시하였다. 신이 아브라함을 중지시킨 것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신의 명령을 모른척하였다면 신앙의 증거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희생’이, 신앙이 성립하는 본질적 조건으로서 신앙 속에 구조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명 여기에서 희생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월론적’으로는 일어났던 것이다. 키르케고르적으로 이해된 기독교에서는 ‘희생’이 그 초월론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와 ‘순국’이 혼동되고,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비극적 영웅’과 ‘신앙의 기사’를 아무리 엄격히 구별하고자 하여도 기독교 내부에서 양자의 혼동이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희생의 종교’이기 때문은 아닐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의 희생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 종교 즉 ‘아브라함적 종교’에 공통되는 신앙 모델이다. 그러나 기독교로 한정시켜 말하자면, 이삭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형(予型)이라는 해석이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다. 나사렛의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사형되었던 것은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한 ‘희생’사였다는 속죄신앙이 기독교의 중심에 존재하는 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로서 신앙을 위한 ‘희생’을 영원히 필요로 하지 않을까? ‘희생의 종교’가 아닌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면 ‘순국’과 ‘순교’의 공범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과연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분명히 본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